2026년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대한민국정부

2026년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대한민국정부

CONTENTS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1 서문 010
2 국정과제 체계도 012
3 123대 국정과제 목록 013

국정 목표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❶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0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022
0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024
0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027
0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029
0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032
0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035
0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037
0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040

❷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0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042
0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045
0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048
0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051

❸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0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054
0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057
0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060

0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062
0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065
0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068
0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070

국정 목표 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❶ AI 3대 강국 도약

0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076
0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079
0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082
0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085
0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088
0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091

❷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0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094
0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096
0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099

❸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0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102
0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105
031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108
0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111
0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114
0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116
0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119
0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122
0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125

❹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0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129
0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132
0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135
0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138
0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141
0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144
0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147
0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150

❺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0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155
0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156
0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159

국정 목표 0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❶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0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164
0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168
0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170
0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172
0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175
0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178
0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181
0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184
0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186

❷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0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89
0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91

0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194
0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197
0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0
0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203

❸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0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06
0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208
0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210
0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213

❹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0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216
0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219
0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221
0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224

국정 목표 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❶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0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230
073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233
0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237
0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240
0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243

❷ 내 삶을 돌보는 복지

0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246
0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249
0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252

0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255
0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258
0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261

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0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264
0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267
0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270
0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273

❹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0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276
0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279
0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282
090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285
0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288
0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291

❺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0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293
0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296
0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299
0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302

❻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0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305
0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308

❼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0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311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314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316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319

❽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322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325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329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33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336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339

국정목표 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❶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344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48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351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355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358

❷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361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364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367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370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373

❸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376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379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382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385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388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폐허 같던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와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멈출 뻔했던 성장엔진이 힘차게 돌기 시작하고, 민생의 기반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대한국민의 강인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드높은 문화의 힘과 유연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쳐 큰 힘을 발휘해 오신 우리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에 나서주신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힘차게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려면 대전환은 필수입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지금까지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대전환이 필수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생명을 희생하는 성장이 아니라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대도약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이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들은 앞으로 변화하고 도약해 나갈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기준은 오직 하나, '국민의 삶'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초심을 되새기며 2년 차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정으로,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 국정과제 체계도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정목표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❶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❷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❸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목표 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❶ AI 3대 강국 도약 ❷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❸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❹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❺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국정목표 0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❶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❷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❸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❹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목표 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❶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❷ 내 삶을 돌보는 복지 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❹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❺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❻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❼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❽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목표 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❶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❷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❸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3. 123대 국정과제 목록

국정목표 01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❶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정 0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국정 0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국정 0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국정 0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
국정 0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국정 0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국정 0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미통위
국정 0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전략 ❷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국정 0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국정 0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국정 0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국정 0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전략 ❸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 0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국정 0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국정 0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국정 0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국정 0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획처
국정 0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재경부
국정 0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국정목표 02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❶ :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0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국정 0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국정 0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국정 0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 0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
국정 0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전략 ❷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국정 0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국정 0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 0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전략 ❸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국정 0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국정 0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산업부
국정 0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국정 0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국정 0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재경부
국정 0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국정 0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국정 0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국정 0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전략 ❹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 0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기후부
국정 0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후부
국정 0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부·국조실
국정 0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국정 0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부
국정 0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기후부
국정 0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기후부
국정 0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부
	전략 ❺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국정 0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금융위
국정 0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국정 0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국정목표 03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❶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 0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국정 0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국정 0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국정 0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국정 0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획처
국정 0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국정 0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 0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국정 0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전략 ❷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 0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국정 0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국정 0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재경부
국정 0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국정 0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국정 0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전략 ❸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국정 0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국정 0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국정 0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국정 0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전략 ❹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 0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국정 0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국정 0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국정 0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국정목표 04 |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❶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 0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정 073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정 0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 0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노동부
국정 0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전략 ❷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 0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정 0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국정 0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국정 0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국정 0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행안부
국정 0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전략 ❸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 0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국정 0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국정 0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국정 0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전략 ❹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 0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국정 0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성평등부
국정 0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국정 0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국정 0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정 0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국정목표 04 |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❺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 0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부
국정 0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부
국정 0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부
국정 0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노동부
	전략 ❻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 0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부
국정 0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성평등부
	전략 ❼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 0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국정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국정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전략 ❽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정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국정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국정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국정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국정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미통위

국정목표 05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❶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국정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국정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국정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국정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국정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전략 ❷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정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국정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국정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국정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국정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전략 ❸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정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국정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국정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국정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국정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I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Chapter. 01

- 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전략 3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0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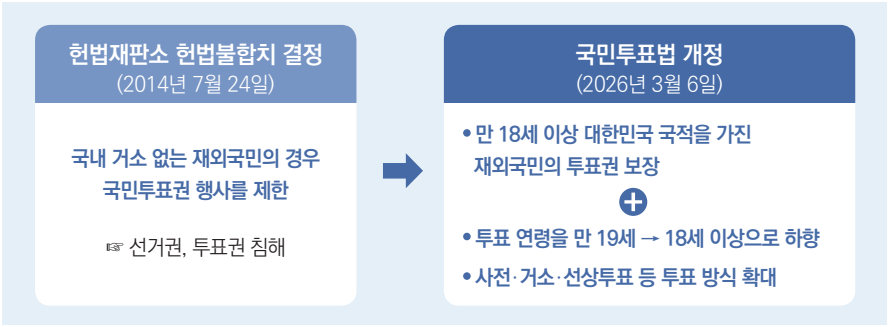
이재명정부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2026년 3월 6일)을 추진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 투표 편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담은 개헌안 발의(2026년 4월 3일)를 지원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현행 헌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헌법 개정 절차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였고, 국회가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개헌안 발의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였습니다(2026년 3월 6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였습니다.

국민투표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추진 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개헌안 발의 지원

국회가 마련한 개헌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견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 주요 의제 중심으로 개헌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과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을 함께 명시하는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을 지지함으로써 주요 민주화 사건의 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 중심으로 발의된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국무회의
(2026년 4월 6일)



국민투표 실시기반 확보

정부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의제 중심의 개헌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기초하여 헌법 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0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과 민주주의 교육 정례화를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인선과 함께 국방부 내 문민임용 확대와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내실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기관 및 양성체계 개선을 통해 권한집중 구조를 개선하고 합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국군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확보는 기본 전제이나, 그간 권한집중과 통제 미흡,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계엄통제 미비, 문민통제의 한계,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제약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개정 및 장병 민주주의 교육 강화

계엄법 개정 완료

- ◆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화
- ◆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 금지
- ◆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 조치
- ◆ 계엄시 군경 국회출입 금지 등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계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을 선포·변경하기 위한 국무회의 심의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2025년 7월 22일)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을 구체화하는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의식 고취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국방부 표준교안'을 제작(2025년 8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2025년 10월~12월)하였습니다. 특히, 장군단을 대상으로 헌법전문가 초빙교육과 심도 깊은 논의(2025년 12월)를 진행하여 군 수뇌부부터 헌법수호와 민주적 통제를 솔선수범하는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구축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학교 정규과목으로 신설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과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간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방 문민통제 및 내부 공무원 국방·군사 전문성 강화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장관을 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내 과장급 이상 주요 직위에 문민 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이 임용되어 온 인사기획관 직위에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을 임용(2025년 7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첨단전력기획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외부의 첨단과학기술 전문가가 보임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내 문민 직위 확대와 병행하여 내부 공무원의 국방·군사 전문성을 높여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감소 등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보직경로를 설정하고 맞춤형 인사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기존 순환보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2026년 2월). 이에 더해, 신기술 분야 교육체계 구축 및 군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방정책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 표준교안
(2025년 8월)



군 정보기관 개편을 통한 민주적 통제체계 강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안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을 위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 권고안을 마련(2026년 1월)하고, 국정집중점검회의(2026년 3월)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각 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구성원의 인적쇄신과 함께 대내외 통제체계를 강화하는 개편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조직의 해체 및 신규조직 창설을 추진하는 등 특정기관에 집중된 권한 구조를 해소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2026년 4월 7일)을 통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의장 보좌 기능을 해제함으로써 국방부장관에 대한 정보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



여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편성안 확정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첩·보안·수사 기능의 분리와 상호 견제 및 균형이 작동하는 조직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구성원의 인적쇄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부 확보 여건 개선

간부 확보를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2026년 2월 3일 공포, 2026년 8월 4일 시행)하여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장교의 경우, 기존에는 대학 재학 중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부사관 또한 기존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면서 민간모집부사관과 학군부사관(RNTC)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 확대는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군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여 민주적 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 구조를 타파하고 상호 견제와 책임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 정착과 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완성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0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2026년 10월 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 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검찰이 표적 수사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및 '국민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하는 등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법률 개정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검찰청을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여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권 포함)'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사가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을 마련(2026년 3월 제정, 2026년 10월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광역 공소청(구 고등검찰청)마다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검사의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제정, 2026년 10월 시행)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률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대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관 교육훈련·자기개발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하였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존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수사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를 억제하겠습니다.

0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출범 직후(2022년)부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새 정부 2개월 여 만에 폐지(2025년 8월 26일)하였습니다.
현장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1,900여 명)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배치 등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7.8일 단축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사무 이관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2022년 8월 2일 출범)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조직이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근거한 심의·의결기관이지만 법적 권한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훼손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회복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심도있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8년 만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2026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경찰 수사체계를 정비해야 할 당위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도입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권한·책임 불일치 등으로 실효성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성 강화 취지에 부합하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2025년 8월 26일 경찰국 폐지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공포됨으로써 경찰국은 폐지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 독립기관이 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 법안과 경찰청 자체 법률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개혁 추진 시기에 맞춰 「경찰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 현판 제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외부 통제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조치 보고 요구권·징계 요구권 등 고유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자체 사무기구 설치 등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춤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국민 주권 수호를 위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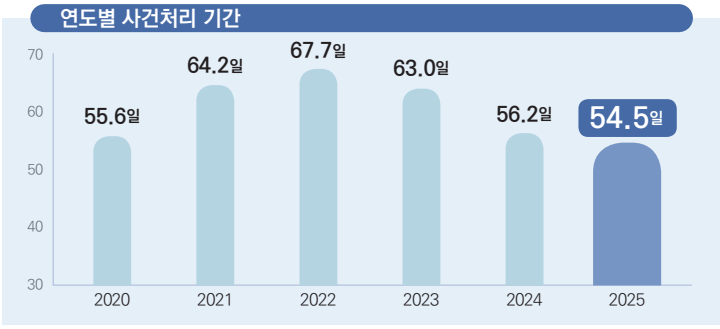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민생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만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시·도청 피싱사기수사대 및 경찰서 통합수사팀 등 주요부서에 1,900여 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 배치와 중간관리자(과·팀장)의 지휘 역량평가를 반영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62.3일이었던 사건처리 기간이 2025년은 54.5일로 7.8일 단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2020년 55.6일)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축소되고, 현장 수사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020년 55.6일 → 2021년 64.2일 → 2022년 67.7일 → 2023년 63.0일 → 2024년 56.2일 → 2025년 54.5일).

경찰수사의 관리·감독 책임강화





아울러 사건관리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및 시·도청 중심의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수사관 개인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수사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첩보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 전(前) 단계(입건 전 조사) 개시의 경우 관서장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건을 재배정 할 경우 사전에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수사지원 AI 고도화

경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 통제장치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변호인의 '사법경찰평가(조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경찰관의 태도 및 수사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것)'를 전국 시행하도록 확대(지방변호사회,

2025년 2개 → 2026년 11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찰의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등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준수 등의 내용을 조사하는 '수사과정 인권보호 실태 설문조사'를 신규 도입(2025년 7월)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건 쟁점·관련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경찰 수사지원 AI'를 도입한 결과, 반복적 업무 부담은 줄이고, 핵심적 판단에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2025년 30명 → 2026년 40명), 신임수사관 교육기간을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자치경찰기획단'을 신설하고,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주요 자치경찰사무를 시·도로 이관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고, 권역별 현장간담회 개최 및 현장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관계기관 간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한국형 최적의 자치경찰제 모형을 도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하반기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의의 역할을 확대하여 감사 착수 및 감사결과 공개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인권 친화적 감사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직무감찰 대상에서 '정부 중요 정책결정 당부' 사항을 제외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 추정의 범위를 넓히고 사전컨설팅 신청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그간 감사원이 정치적 결정이나 가치판단 관련 사안까지 과도하게 감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후감사에 대한 우려와 부담 때문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행정현장에서 소극적 업무처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인권 친화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합의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중립성·공정성 강화

공익감사청구 실시에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기존 '사무처'가 결정하였던 주요 공익감사청구 실시여부를 '감사위원회의'에서 합의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2026년 1월 1일). 또한, 범죄혐의 사건 '수사요청' 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2026년 4월 28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감사결과 공개를 위해 국회 법사위 의결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25년 12월 12일).

2026년 상반기에는 범죄혐의 사건 '고발' 시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감사원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인권 친화적 감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의 실시 근거와 한계(선별·추출 원칙) 등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명문화하였습니다(2025년 12월 12일).

조사개시 통보에 따른 불이익(포상 제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통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에게 감사결과 질문서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감사소명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2026년 1월 10일).

2026년 상반기에는 현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운영 중인 변호인 참여권

을 「감사원법」에 명시하고, 공직감찰 프로세스도 인권 친화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시행' 카드뉴스 (2026년 1월 14일)



정책감사 중단을 위한 법제화 등 감사체계 재정립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결정·가치판단에 대한 감사로 오해받는 등 중립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감찰 대상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를 제외하였고, 그 예외사항도 조치가 불가피한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하였습니다(2025년 12월 12일).

또한,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감사 지원을 위해 논의하고 소통·협력하였습니다(795개 기관, 2026년 2월 27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심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2026년 1월 29일), 감사결과 설명, 국회감사요구 사전 협의 등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국회협력담당관'도 신설하였습니다(2026년 5월 4일).

2026년 상반기에는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감사 활동의 최고규범인 「공공감사기준」을 전면 개정하고(1999년 제정 이후 첫 개정),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등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자체감사책임자 회의
(2026년 2월 27일)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2025년 11월 11일, 인사혁신처 협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2026년 3월 25일, 인사혁신처 합동).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확대(1개과 → 2개과, 2026년 5월 4일)하였고,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도 기존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까지로 확대하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
(2026년 3월 24일)







였습니다(2026년 3월).

2026년 상반기에는 사전컨설팅 법제화를 위한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적극행정면책 추정의 범위를 넓히고,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사무처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감사기준」 개정과 사전컨설팅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감사 품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0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보장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단계적 대법관 증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력인 증원 및 처우 개선, 재판기록 등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 · 등사권 강화를 통해 범죄 피해자 권익 보장을 확대하였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통하여 변호사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 확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변호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 사법절차에서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AI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 사법서비스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증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생성형 AI 기술 도입 등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과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025년 '확정되기 전의 하급심 형사판결문'도 공개대상이 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2027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행 변호사 징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책연구도 2026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변호사 징계 공공성 제고 및 법률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6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개정(2028년 3월부터 단계적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인지대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사법 접근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범죄 피해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재판 절차까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피해자 국

선변호 사건을 전담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 사건을 전담하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증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진술조력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약 3년간 동결되었던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 보수를 상향하여 진술조력 전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특정강력범죄법」이 개정(2026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를 반영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시행일부터 공백 없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검사 보관 증거기록과 증거보전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습니다(2026년 6월 시행). 이를 통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2026년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이 개정(2027년 2월 시행)되었습니다. 비밀 공개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반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플랫폼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정부, 지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총 35개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연계하고,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와 사례를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을 통해 직접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 http://www.helplaw24.go.kr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장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인권 중심의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등 사법절차 관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중소방송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와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등 새롭게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방송미디어 전반에서의 공적서비스 품질 제고로 미디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역점 추진 중입니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회복

방송법 개정



방송 3법 개정(2025년 8월 ~ 9월)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가 증원(KBS 11인 → 15인, 방송문화진흥회·EBS 9인 → 13인)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학회, 변호사 단체 등 이사 추천권자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 규약 위반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통해 보도 편성의 자율성과 내부 견제·균형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조성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26년 1월)하여, 허위조작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금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정책 수립·시행 의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등의 규정도 신설되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및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이버안심존 iOS 출시



또한, 주요 포털·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허위조작정보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율규제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국민 3,579명을 대상으로 대상별·맞춤형 교육을 총 137회(2025년 기준) 실시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와 대응 역량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습관 조성을 위해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인 '사이버안심존' 앱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총 318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40,1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개의 알뜰폰 사업자와 사이버안심존 앱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권익 제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시설·장비를 활용해 517개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미디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플랫폼 '미디온플러스(MediON+)'를 통해 225개 강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 전국 163개 기관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696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고품질의 교육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초등·중학 학습 콘텐츠, 생애주기별 교양·다큐멘터리 콘텐츠 등 EBS의 프로그램 7,062편을 제작 지원(2026년 4월말 기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방송주관방송사(KBS) 예산지원을 통해 2025년 TV·라디오용 각 40편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2026년도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90편 및 재난방송 수어 통역 표준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20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여 재난주관방송사(KBS)가 재난방송에 수어를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2026년 8월 시행예정).

장애인용 TV 보급 포스터



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해 2025년 맞춤형 TV 35,000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방송접근권 보장 수혜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지원 체계 구축

지역의 공공 미디어 인프라인 지역·중소방송의 지역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유통 및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개사의 36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총 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콘텐츠 마켓(2025년 6월, 베트남 Telefilm / 2025년 12월, 싱가포르 ATF) 참가를 지원하였고, 지역방송 교류행사(2025년 11월)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억 5,000만원의 콘텐츠 판매 수익, OTT 플랫폼 진출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미디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정부 출범 이후 혐오표현대응과 및 이주인권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5 유엔 인권보고서' 발간 등으로 국제인권기준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 권고와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 취약계층 보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강화하며, 특히 혐오표현 방지, 노인·이주민의 인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선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 확보로 인권위 정상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 9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의무적 구성·운영과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추천 사유의 공개를 명문화하고, 실효적인 인사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임 절차'를 강조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 원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인사 검증의 불투명성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확립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2025 유엔 인권보고서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로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국제인권규범과 그 해설 및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국제인권기준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2025년의 유엔 인권 동향과 국내 시사점을 분석한 '2025년 유엔 인권 보고서'를 자체 집필, 발간하였습니다(2026년 3월).

국제 인권 동향에 대하여 읽기 쉽게 작성한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 국회, 법원,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2026년 2월)하면서 이주·장애·성소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등 각계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 1차 포럼'을 개최하였고,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표현과 차별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인 천만 초고령사회, 노인 인권보장 강화 기반 조성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 노후 빈곤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 연장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제도 설계를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노인의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강화 취지의 인권위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2025년 7월).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주민 250만 시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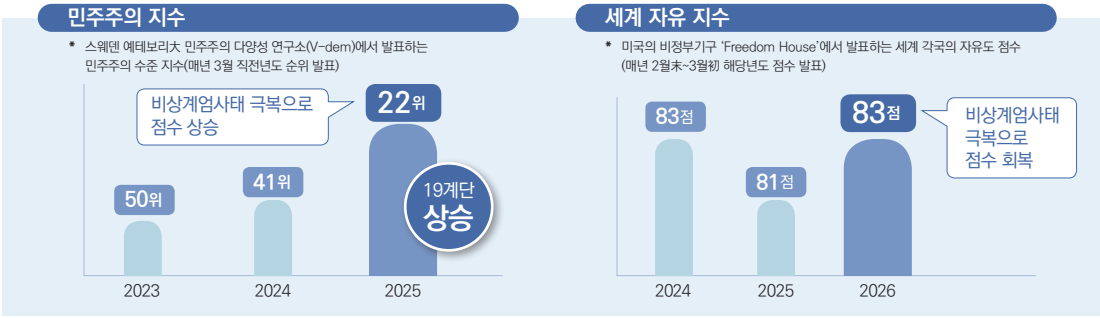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성을 가진 이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구제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기해 인종차별과 혐오를 넘어 존엄과 평등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인식 개선 현장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인권위를 정상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 인권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인권 수준 향상 및 인권 선진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정부는 현안에 대한 초당적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은 뛰어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증대된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민주주의와 민생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정치·사회 통합의 기반이 될 '통합과 참여의 정치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제1차 여야 당대표 회동
(2025년 6월 22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2026년 3월 22일)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 구축

이재명정부는 여야 지도부 회동(2025년 6월 22일, 2026년 1월 16일), 여야대표 오찬회동(2025년 9월 8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2026년 4월 7일) 등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협치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안 논의 과정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비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민생·통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당정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력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0.73회(2026년 4월 말 기준) 개최하였습니다.

※ 박근혜정부 0.12회, 문재인정부 0.56회, 윤석열정부 0.65회

이를 통해 한미 통상협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중동상황 대응 등 주요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치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선 부처들도 주요 현안에 대해 당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정부 출범 이래 총 88건(2026년 4월 말 기준)의 부처별 당정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이재명정부는 사회갈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논의하고 국민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5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수를 확대(39명→70명 이내)하고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루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원회를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념·젠더·양극화·지역·세대 등 5대 사회갈등에 집중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정치갈등해소, 양극화해소, 세대젠더갈등해소, 국민경청소통)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현장형 국민 대화 운영계획'을 수립(2026년 3월)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기반의 숙의 공론화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

이재명정부는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일상화·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경청수석실·시민단체 등이 함께 워크숍 11회, 간담회 3회, 국회 토론회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이 마련되어 2025년 12월 31일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에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이재명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대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2025년 12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와 정당 등에서 추천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인권, 기후·평화·역사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총 50회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2026년 3월 30일 기준). 특히, 시민이 직접 사회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정책토론마당'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행정통합 등 긴급실행과제(20개)는 국민보고대회(2026년 3월 10일)를 통해 정부에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제안한 개혁과제를 토대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 협치와 사회적 대화를 상시화하고, 국민의 정책참여 거버넌스를 실질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통합과 참여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0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조사 활동 기간을 2026년 10월 5일까지 연장하였으며, 2025년 12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통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조세이탄광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공동 유전자 감정추진을 합의하는 등 일제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민 통합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 책임의 명확한 규명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해결된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수·순천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제77주기
여수·순천10·19사건 합동 추념식
(2025년 10월 19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추가 신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상규명 신고 2,419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995건이 새롭게 접수되었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충실한 조사를 위해 진상규명조사 활동 기간을 2026년 10월 5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4,652건의 희생자·유족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희생자 3,316명과 유족 12,508명에 대한 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남은 2027년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직 위원회의 인정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분들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의 차질 없는 명예회복

정부는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132,240㎡(약 4만평) 규모의 노근리 평화공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 228명의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관을 새롭게 준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노근리 평화공원의 운영과 각종 위령사업,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족회 및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등 관련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과 같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정부는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역의 대지진 발생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2025년 12월 30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법 시행과 함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과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동안 규명되지 못하였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2025년 8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이 강제동원되었던 일본 조세이(長生) 해저 탄광에서 유해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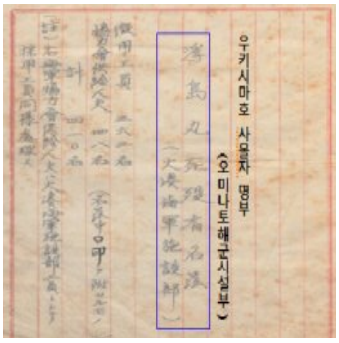
유해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유전자 감정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발견 이후 첫 추도식인 2026년 2월 7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제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해 조사·발굴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일본 시민단체(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會, 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고, 정제도 되지 않았던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명부를 처음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명부상 총인원(약 1만 8천명) 중 중복자 제거와 오(誤)입력 확인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명부상 승선자는 3,542명, 사망자는 528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적부 등 정부 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을 거칠 예정이며,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에 위로금 등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현황



한 경우에 재심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노근리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간토사건법」 제정 지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지역 트라우마 치유활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간토 위원회 출범, 우키시마호 명부 확인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0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에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의 공공부문 근무 경력 포함을 의무화하여 보훈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훈보상 수준 향상 및 그 동안 소외된 대상의 보훈제도 편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온 가운데,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의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25)	(독립) 100세 / (6·25참전) 93세 / (월남참전) 79세

이에 이재명정부는 보훈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이재명정부는 보훈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25년 물가상승률 2.1%를 크게 상회하는 5%대로 인상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7급 상이자 보상금을 8.7%,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수당을 12.3%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등에게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 3월 17일부터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국가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2012년 부양가족수당 제도 신설 시 배제된 재해부상군경 7급 대상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약 3,800명의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로 상이하던 참전수당의 격차를 줄이고자, 미지급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참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지급액은 2023년 18만 3,000원에서 2026년 26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훈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보훈 가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지방의료원 또는 국립대학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을 2026년 2월 19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24년 말 893개에서 2025년 말 1,011개로 확대한 데 이어, 2026년 말까지 1,2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6년부터 고독사 위험군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천보훈병원 위문
(2025년 8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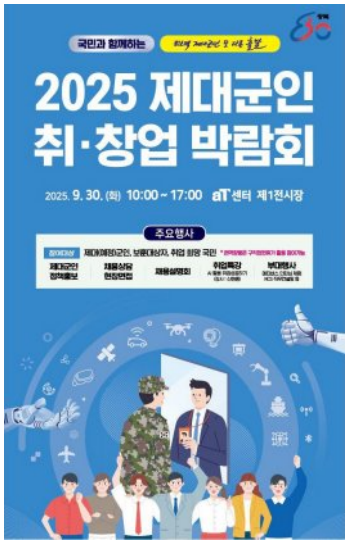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대군인이 조국 수호에 헌신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25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9만명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기존 22개에서 3만 8천여 개로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2026년 2월 19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6년 8월 20일부터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기존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2027년 2월 20일부터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대군인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25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2025년 9월 30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독립운동의 산 증인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내 거주 애국지사 4명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100% 인상하고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광복 80주년인 2025년에는 전년 257명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총 502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6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2025년 8월 14일)



이석규 애국지사 상수연 위문
(2025년 9월 8일)



로 최소 2대(代)의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독립유공자 발굴과 후손 지원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AI 기반 독립운동사료 광학문자인식 기술(OC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비 보조, 주거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후손 150명에게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총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정책 방향을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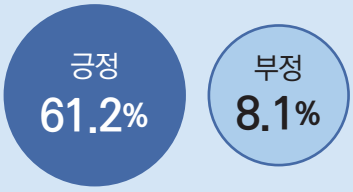
0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다양한 국민참여 보훈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훈정책 추진체계 재정비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튀르키예, 프랑스, 인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갈등 완화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이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

(출처 : 국가보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25)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보훈이 국민통합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보훈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정책 추진체계 강화

보훈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가보훈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거친 국가보훈위원회는 2026년 4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 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위원회
(2026년 4월 27일)



또한 보훈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네 차례 개최된 이 포럼에는 주요 보훈분야 주제에 대해 국회, 정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법사위를 통과하여 최초 발의 26년 만에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의료·양로·요양·기념사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복 80년 기념 빛축제
(2025년 8월 15일~23일)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전
(2025년 8월)



국민 체감 보훈문화정책 추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빛'을 주제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된 드론쇼, 8월 14일 광복절 전야제, 8월 15일부터 9일간 진행된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등 국민 참여형 보훈문화행사에 총 60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한 보훈시설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훈 사적지 탐방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부산 나이트레이스, 대전 0시 축제 등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 연계하여, 일상 속에서 보훈을 접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광복절부터 순국선열의 날까지 전국 82개 기념관을 대상으로한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는 1만개의 투어북이 전량 소진될 만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보훈 가치 계승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광복 80주년 기념키트'를 보급하고, 전국 100개 학교 등에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을 봉입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23만명 참여 '청소년 보훈체험 프로그램'과 교사 참여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국제보훈 협력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보훈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2개국 222명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튀르키예, 2026년 프랑스·필리핀·인도와 보훈협력 MOU를 체결하고, APEC 등 주요계기로 방한한 대통령·총리 및 각국 정상들과 공동참배를 추진하여 보훈을 매개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튀르키예 국제보훈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5년 11월 24일)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서 2025년 참전용사 후손들을 대상으로 6월 국내, 10월 뉴질랜드 교류 캠프를 개최하였고, 국내 유학 중이거나 필

리핀·에티오피아 등 현지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8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 협력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고국으로 봉환하였고, 특히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이신 이하전 지사가 2026년 2월 별세함에 따라 4월에는 유해를 국내로 모셔 독립유공자께 고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2월 국외 24개국에 산재된 1,032개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3개년 전수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추후 맞춤형 보존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국가보훈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보훈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0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인사 추천 93,401건)를 통해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부인사를 지원하고,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절 및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2026년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고 수준인 3.5%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원이 성장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공직사회는 승진 적체와 전문인력 부족, 낮은 보상 수준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공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 내에서도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공직역량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그리고 저연차·현장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등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공직역량 강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2025년 6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국민추천제>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시행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추천제가 2015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 임명 직위 전반에 대해 국민이 광범위하게 추천한 최초의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총 93,401건의 인사 추천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1기 내각 인선에 일부 반영되어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부 인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응시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지역별로 선발하여 해당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점진 확대하는 한편,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지역 연고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추천 대상도 확대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보다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026년 3월)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2026년 4월)하였습니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장기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추천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인재 추천·분석·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AI 등 주요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는 등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2025년 11월)하여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통합당직을 운영하는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시행된 개편으로 年 88억원의 당직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年 약 18만명이 비효율적인 당직 부담을 경감하면서 근무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2025년 11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기관 감사에 한해서만 면책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기관별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여 상담, 자문, 변호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감사 또는 징계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기관별 당직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 맞춤형 적극행정 컨설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2025년 11월)



을 통해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 조성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2026년 4월)하고,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6년 공무원의 보수를 최근 9년간 최고 수준인 3.5%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3.1% 추가 인상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하고, 재난현장 근무 시 비상근무수당을 인상(월 상한 12만원 → 월 상한 18만원)하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크게 인상(월 8~20만원 → 월 26~44만원)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월 7만원 → 월 8만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연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직 매력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앞으로 9급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28년까지 월 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추진하여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제도 개편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개선
(2026년 1월)



0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햇빛소득 마을' 등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581개 행정서비스 간소화, '혜택알리미'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간 비공개되었던 주요 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 제도개선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마을공동체 기능을 회복하여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며,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물 공개 강화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국민소통플랫폼 소통24



국민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을 통해 정책제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 이상 국민 공감을 얻은 제안은 관련부처 심사 등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에 AI 기능을 도입하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총 581개의 행정서비스를 간소화(2026년 4월 29일)하여 국민이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2026년 5월)하여 불명확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민원 서류 직권 보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출산과 구직 등 개인의 상황과 정보를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2025년 12월 10일 정식 구축하여 24개 분야 6,000여 종(2025년 12월)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295만 명의 이용자에게 7,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특별성과 포상
최대 3,000만원

- 캄보디아 스캠조직 소탕(경찰청)
- GPU 26만장 확보(과기부)
- 설탕 담합 적발(공정위)
- 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행안부)

또한, 2025년 12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4대 사회보험료 고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알림 등 신규 서비스 28종을 개시하여 2026년 4월말 현재 1,877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민간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10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전 행정기관에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2026년부터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일 잘하는 공직사회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정부는 마을공동체가 지역 회복력의 주체로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민·관·공·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2026년 2월 공모)과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확산 사업(2026년 3월 공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이 주체적으로 공공부지·저수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은 주민복지사업, 지역주민 배분 등 지역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정책 품질 향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예산 집행내역까지 공개를 확대하고, 회의 실적 부진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 관련 국회 입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투명성 강화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먼저, 2025년 12월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사유 정비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비공개 기록물 324만건을 재분류하여 총 174만건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였고, 특히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48건)과 '낙동강 폐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40건) 등의 주요 기록물 원문 전체를 국가기록포털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125만여 건)과 대통령 외교서한, 주요 정책이 담긴 보고자료 등 주요 대통령기록물 원문(4만 5,000여 건)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 국정 전반에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 제도개선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상에서의 정책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개선 민·관TF 회의
(2026년 2월 9일)



0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하고(2026년 2월) 제5차 국가기본전략 초안 마련 및 전 행정기관 대상 책임관 지정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0년 만의 자발적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VNR) 발간에 본격 착수하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 정책 체계이나, UN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순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SDG 성취도 평가결과 : ('23년) 31위/166개국, ('24년) 33위/167개국, ('25년) 34위/167개국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스템을 회복하고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시스템 회복 및 지역 확산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참여절차 운영을 통해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48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등 총 291개 기관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을 완료하여(2025년 4월)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최초로 지정·운영(2026년 2월, 한국환경연구원)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전담 싱크탱크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조사·연구,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검토 지원 등 전문적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참여 실천 협력 플랫폼 구축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2025년 12월)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홍보도서 발간·배포, SDG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를 다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 인지도 수준이 2007년 25.3%에서 2025년 57.6%로 2배 이상 크게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리더십 강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성과를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0년 만에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VNR) 발간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7년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2월 UN ESCAP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사회·환경 등 전 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속가능발전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0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이용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범 서비스를 2026년 2월 5일부터 운영하고, 집단민원의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여 '철원 마현천 유실지뢰 제거 및 준설 요구' 등 13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부패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함께 부패 위험성을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과 국민 참여를 통해 민원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발굴·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026년 3월 11일)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 체계 구축

정부는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 법의 보호 규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일하여 신고자 보호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방해 행위를 불이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신고자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정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인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6년 4월까지 10,14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참여·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을 78회 운영하여 학생들이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렴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1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개 대학교에서 개설한 '청춘의 염치 챙기기와 교사되기'와 같은 청렴 관련 정규교과와 연계한 청렴교육을 통해 대학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청렴교육 강의안
(2025년 8월)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인 민원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2026년 2월 5일부터 민원 처리와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생성형 AI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민원들을 묶어주어 담당자가 확인 후에 한 번에 답변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며, 민원을 스스로 분석하고 시기별 또는 지역별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를 찾아 특정 시점에 많은 국민이 정부에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시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1,407개 기관 전체에 국민이 정부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 등 다양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신문고 AI 시범서비스
(2026년 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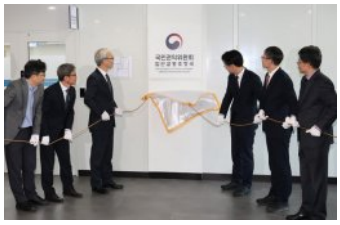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성·반복적 민원의 발굴·해결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집단민원을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관성적으로 반복 제기되어 온 해묵은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아울러 각급 기관의 현장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산재해 있던 주요 갈등 현안을 관계 행정기관 및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정·해결하였으며, 총 30,498명의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개인별 맞춤형 전담팀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민원 146,848건을 감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31일에는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과 공동주관으로 '민원혁신포럼'을 개최하여, 전국 각급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
(2026년 1월 27일)



기관과 함께 집단·특이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많은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부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0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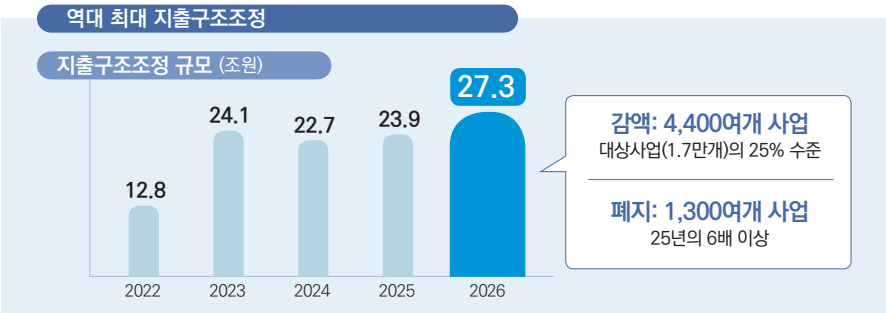
2026년 예산 및 2025·2026년 추경편성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지속가능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실화, 예비비 관리 강화 등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정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참여예산·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예산편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정과제 성과(아동수당, 청년미래적금, 재생에너지 등)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위기 요인(AI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우리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 하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프로세스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정 정보 공개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주권재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증가하여 AI대전환, 신산업혁신 등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는 한편,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도모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지출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전략적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수립·발표하며 4대 중점 투자

기획예산처 현판식
(2026년 1월 2일)



방안(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2026년 2월)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원배분의 방향을 체계적인 평가·환류 체계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026년 8월) 시 수립방향 및 평가·분석보고서를 내실화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 및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

국가재정법 개정(2026년 2월·3월)을 통해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예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 2월에는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상 규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예비비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 심의 뿐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절차 투명성강화를 위한 '2026년 국유재산 종합계획'(2025년 8월),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2025년 12월)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
(2026년 1월 28일)



재정사업 성과평가 강화 및 국민의 재정 이해도 증진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6년 1월)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각 부처 자체평가-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직접 연계하고,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통해 재정통계공개 범위를 확대(2025년 12월, 36종 추가)하고,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이 쉽게 재정 정보·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카드뉴스, 웹툰, 숏폼 동영상 등 시각화 자료 35종을 추가 등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을 운영(2025년 12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재정박물관을 포함한 통합·학습·AI 기반 재정정보공개플랫폼 '모두의재정'을 연내 구축하겠습니다.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025년 12월 1일)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매트 강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인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0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처음으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163개 기관의 선제적 공시를 유도하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경영 체계를 시장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중심제도(PBS)를 과감히 개편하는 한편,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천명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지역상생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 조정하여, 지역경제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균형 성장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초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2025년 12월 10일).

가이드라인 배포 직후인 2026년 1월 말 기준,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50개 등을 포함한 총 163개 기관이 대국민 공시 플랫폼인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에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책임성 강화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2025년 8월 22일)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일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025년 8월과 9월 연이어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책임경영을 주문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는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천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제고와 역량 개선

2025년 9월 30일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4점 상향(16.5점 → 20.5점)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AI 활용 시 혁신가점을 신설하는 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12월 23일에는 상장 공기업의 기술·생산성 촉진을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하는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였습니다.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2026년 1월 27일~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경제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 중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2026년 1월 29일)



지역균형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대응성 강화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 조정(2026년 3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와 지역상생·협력, 안전관리 등 ESG 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2026년도 경영평가 편람'도 개정(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안전보건 투자 실적 등 예방 중심 공시를 새로 도입하고 산재 관련 공시 주기를 단축하여 안전경영 공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PBS 제도 개편 및 연구역량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연의 국책 연구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과제중심제도(PBS)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6년 2월, 수탁과제 총량을 전년도 결산 기준 50%로 제한하고 중앙정부 수탁연구 수행 시 간접비 편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은 국가 구조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고강도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0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역대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 정책성과 달성을 위해 '규제 합리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안전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불편·영업부담을 초래하는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관광·의료 등 산업계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데이터 기반의 규제행정을 구현하고자 AI기반 규제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 '규제혁신'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찬반 갈등과 부처 간 권한·이해충돌로 인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역시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적의 규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며,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합리화

재난·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될 우려가 있으나, 그동안 규제심사는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2026년 5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법률 시행에 맞추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심사지침 마련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전문적 심사를 통해 필수적인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과도한 폐지·완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2025년 12월)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거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된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에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아파트 CCTV 자료를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025년 12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창업·성장·운영 등 사업 생애주기별로 규제애로를 점검하여,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허용하는 등 총 17건의 과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촉진

이재명정부는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국정기조 하에 콘텐츠·관광·의료 3대 서비스 산업 및 주력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K-콘텐츠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년 10월)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콘텐츠 신속심의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6년 2월)하고,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 기반을 다졌습니다(2026년 2월).

관광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2025년 8월)하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대상 우대심사대 혜택 확대 등 관광객 유치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영장 내 이동식 천막 전기 사용량 제한을 완화하여(2025년 12월) 야영장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2025년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2025년 12월)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025년 10월 15일)



의료 분야에서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망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2025년 12월)하는 등 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심사자가 동시·병렬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산업통상부에 규제개선 요청이 가능하고, 타법상 인허가의제 특례를 마련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6년 2월)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도체 산업 외에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핵심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 규제발굴·개선 시스템 마련

이재명정부는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본격 설치하였습니다(2026년 4월 출범). 추진단은 현장성·실효성 있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업무수행 시에는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소송 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등 긴급상황에서의 조치에 대해 사후 면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2025년 12월), 공무원들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2026년 2월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출범하고, 2026년 3월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개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AI 규제정보서비스 구축·활용

최근 신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규제환경으로 규제 탐색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지능형 규제정보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부처와 법령별로 분산된 규제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규제행정을 구현하고자 'AI 기반 규제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규제행정에 특화된 모델을 구현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민생과 국민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어 성장을 지원하는 등 균형 잡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I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Chapter. 02

-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 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전략 5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0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 민·관 합동 인공지능 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 출범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정부 AI 재정투자규모 약 3배 증액 등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고성능연산장치(GPU),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가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 성장 필수 기반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경쟁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 투자, (EU) AI 300조원 투자

이재명정부는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견인했듯,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고속도로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모델 개발과 전분야 AI 대전환 추진 등을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정부 AI 투자예산을 총 9.9조원 규모로 기존 3.3조원 대비 약 3배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이재명정부는 민간의 시급한 컴퓨팅 인프라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APEC 계기, 민·관 협력을 통한 고성능 연산장치(이하 GPU) 26만장 확보 기반을 마련(정부 5만장*, 민간 21만장)하였습니다.

* (~2028년) 국가 AI컴퓨팅 센터, 슈퍼컴 6호기 구축, 정부 구매 등으로 총 5만장 이상 확보 추진

우선 정부의 첫 마중물 투자로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약 1.46조원 규모의 첨단 GPU 1.3만장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2026년 3월부터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AI 연구개발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약 4천장,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에 약 3천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2조원 규모의 GPU 추가 확보와 2028년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목표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 착수하는 등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국내 조속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첨단 GPU 확보 현장간담회
(2025년 8월 28일)



국내 산·학·연-Nvidia 간
AI-RAN 협력 MoU 체결
(2025년 10월 31일)



인공지능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이재명정부는 2025년 12월에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에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산·학·연 협의체, '인공지능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를 공식 출범하였으며, 기지국에 인공지능 컴퓨팅 기능을 융합한 AI-RAN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① (Hyper-AI 네트워크 전략)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인터넷(통신망)을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국가 전략

② (인공지능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인공지능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 협의체

③ (AI-RAN) 이동통신 기지국(RAN)에 AI를 적용해, 통신 성능·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컴퓨팅 기능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기지국' 기술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
(2026년 3월 6일)



아울러, 2025년 12월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공개 설명회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확보 및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이재명정부는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연계 플랫폼인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One-원도우)'을 운영하고 민간·공공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제공·연계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보다 쉽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①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개정(2026년 1월 28일), ②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026년 2월 26일), ③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세액공제 시행(2026년 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시행) 등 기업 등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상품·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460건 지원, 경쟁률 10.2:1)도 지속 추진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역할 강화 및 AI육성 법·제도 정비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출범
(2025년 9월 8일)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프라 조성을 촉진하고,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인공지능기본법」을 2026년 1월 22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전략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지원단, 인공지능책임관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과 하위법령은 투명성(제31조)·안전성 확보(제32조) 등 필요 최소 규제 원칙 아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재명정부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인공지능 경쟁 패러다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독자적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0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AI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차별 없이 AI의 혜택을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하고 대국민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G3 도약의 핵심 주역인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I 특화펀드 조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I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독자 AI 생태계 육성과 함께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AX)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
(2025년 12월 30일)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확산

이재명정부는 2025년 8월부터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확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우수 성능을 보유한 1차 개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모두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Epoch AI)의 '주목할 만한 모델(Notable AI Models)'에 등재되었으며, 'The 2026 AI Index Report'(스탠포드대)에도 반영되어 한국은 주목할만한 AI모델 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의과학·바이오 분야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2026년 9월까지 구글 알파폴드3보다 빠르고 정확한 단백질 복합체 구조 예측 AI 모델과 세계 최초 전주기 의과학 특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AI를 위한 AI 활용 환경 조성

이재명정부는 2026년 1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하여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속 AI 체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 지정(2025년 37개소 → 2026년 69개소)하고, '모두의 AI 실험실', 'AI 라운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AI에 대한 국민적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막식
(2026년 3월 26일)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AI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이재명정부는 2025년 6월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해 OpenAI(2025년 10월), NVIDIA(2025년 10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에 AI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 받았으며, 향후 창출되는 성공 모델 확산을 통해 AI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1,308개(2025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제조기업의 AX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상생형 공장을 통해 대기업의 AI 노하우, 기술을 431개(2025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제조AI센터(2025년, 3개소)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

대한민국-UAE AI·첨단산업 협력 강화



이재명정부는 AI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총 1,500억원 규모의 AI 특화펀드 조성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8건의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와 8개 컨소시엄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8개의 신규 컨소시엄 과제를 착수하였으며,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개발과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국내 유망 AI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딥테크 창업패키지',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글로벌 AI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을 마련하여 사업화, 해외진출, 투자유치, 네트워킹, 개방형 혁신,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딥테크 창업패키지'를 신설하여 AI 분야 창업기업 209개사를 지원하였으며, 5대 도메인 AX 스타트업 90개사와 기술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지원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AI를 비롯한 딥테크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확대하고 분야별 수요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정부는 독자 AI 모델 확보,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지역 산업 AI 전환 가속화 및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6년 4월 미국 Stanford 대학교 '사람 중심 AI 연구소(Human-Centered AI)'가 발표한 'The 2026 AI Index Report'에서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3위, 인구 대비 AI 특허 수 2년 연속 세계 1위 등의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자적인 AI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전반의 혁신을 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022 초격차 AI 선도기술 · 인재 확보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 · 채용 지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AI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AI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범용인공지능,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기술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2025년)을 통해 지역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정부 지원을 통해 세계 3위권의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AI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우수한 AI 인재와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지원체계 마련

우수 AI 신진연구자(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 또는 박사후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며 최고급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진연구자가 주도하는 2~3개의 AI 연구 프로젝트에 최대 6년간 115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하며, 2025년에 총 7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총 67명의 AI(융합)분야 신진연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20개 컨소시엄을 신규 선정하여, 다양한 AI 융합 분야 혁신·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전형 AX 인재 양성

정부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통해 자기주도·문제해결 중심 교육과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전형 AX 인재 양성에 주력해왔습니다. 2025년 기준, '42서울' 교육과정을 통해 1~10기 누적 취업률 86.2%를 달성하였으며, 기업 협력 프로젝트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디지털인재양성 사업(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으로 전국 5대 권역의 AI·Data·N/W(Network의 약어)·IoT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무형 SW/AI 전문인재를 2025년 기준 총 7,701명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759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소외계층 청년의 동기부여 및 경제 활동 의지 고취를 위해 쉬었음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546명의 AI·SW 맞춤형 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용인공지능(AGI) 등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게임체인저) AI 기술 확보

전세계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기획한 혁신성·도전성이 높은 AGI 관련 연구과제 30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우수한 연구과제 5건은 주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범용인공지능(AGI):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적으로 사고, 학습, 행동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또한, 국내외 AI 석학(얀 르쿤(Yann LeCun) 교수, 최예진 교수 등) 및 연구진이 한 자리에 모인 공동연구 교류의 장('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2025년 10월))을 마련하여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 AI의 미래 비전 및 안전·신뢰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AI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AI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 기조강연 (얀 르쿤 교수)
(2025년 10월 27일)



차세대 AI반도체(NPU, PIM 등) 기술 선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국산 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Neural Processing Unit) 및 기억장치 내 연산기(PIM, 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AI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여(2025년, 50PF*) 최신 AI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팹리스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반도체 제작 전주기 지원체계(설계-제작-검증 관련 50여개 과제)는 참여기업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만족도 9.1/10점(2025년 11월~12월 조사))

* PetaFlops(페타플롭스) : 슈퍼컴퓨터나 AI 가속기의 연산 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1초에 1,000조번의 연산 가능(1PF는 고성능 PC 수십~수백대를 돌리는 것과 같은 성능)

아울러, AX(인공지능 전환)의 민간 확산과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지원 전략('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2025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AI모델에 특화된 NPU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 NPU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K-NPU(국산 신경망처리장치) 공공선도 7대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AI 실증랩 개소식
(2026년 1월 26일)



엔비디아 젠슨황 접견
(2025년 10월 31일)



피지컬 AI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 지원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025년에 제조 현장과 연계한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여,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조 현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기반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두뇌인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세상의 변화를 예측·시뮬레이션하여 학습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월드모델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산업·일상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경쟁력 확보 전략(안)'도 2026년 3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엔비디아(NVIDIA), 현대자동차와 '피지컬 AI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등 국산 피지컬 AI 기술과 생태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AI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0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신속 도입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AI가 행정, 의료, 재난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적기에 국민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모든 국민이 AI 기술에 기반한 보편적 혜택을 누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AI 오남용과 AI 활용 범죄 대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2026년 2월 25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발표 및 신속 추진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체감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25년 11월 24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프로젝트 수행사업자 공모-선정-협약체결을 2026년 4월까지 완료하여, AI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AI 기반 가격 분석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소비를 지원하는 'AI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등 4대 과제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2026년 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창업·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컨설턴트 등 6대 과제도 2027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AI 혜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본사회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인류 보편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AI 발전의 혜택을 전세계와 향유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4일 '2025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우리나라 주도 하에 전체 회원국 동의의 정상선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싱가포르 등 정상외교를 통해 양자 협력을 강

2025 APEC 디지털 · AI 장관회의
(2025년 8월)



화하고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6년 3월 17일, 6개 국제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세계은행(WB) 글로벌 AI·디지털 지식센터를 설립하고, 2026년 4월 IDB, 5월 ADB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자개발은행(MDB)들의 AI 허브 설립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향후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를 통한 인류 보편 의제 해결, 우리 청년들의 국제경험 축적 등 다각적 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AI반도체·모델, AI 인프라 운영 등 국내 핵심 기업이 참여하는 'K-AI 풀스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글로벌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우리 7개 기업과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 간 6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공급계약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I 오남용 대응 등 AI 윤리·안전·신뢰 확보 기반 조성

「인공지능기본법」시행(2026년 1월 22일)에 대비하여 AI 윤리·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이행지원을 위해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25년 9월), 영향평가의 취지, 절차, 작성 양식 및 예시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AI 윤리·안전·신뢰 확보의 기본 틀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과 함께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현장 안착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발족
(2025년 9월 30일)



이와 동시에, 50개 내외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AI 신뢰성 얼라이언스'를 발족(2025년 9월 30일)하여 민간 주도의 실천 가능한 안전·신뢰 확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I 시험·인증을 운영 중인 민간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의장을 마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AI 검증·인증 제도 논의 및 공통 운영 기반을 수립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신뢰 확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하고 AI 기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AI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안전 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대응 과기정통부-구글 협약식
(2025년 9월 4일)



최근 통신·금융·공공 등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025년 10월 22일, 2026년 1월 28일)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강화,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 대책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화이트해커 활용 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 도입·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1, 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2026년 3월 31일)과 개인정보보호법(2026년 3월 10일)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이 강화되고,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평가·공개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보호 인증체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는 최고경영자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법령상 명문화되었고,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는 AI 기반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9월 4일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강화된 사기 보호)의 국내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정부는 모든 국민이 AI 기술에 기반한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AI 시대에 맞는 정보보호 제도 개편과 민간 보안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전방위적 공공 AX 가속화를 추진 중입니다.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공공부문 AI 신속 도입을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마련·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AI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AI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하였으며, 공공 AI 신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공공 AI의 범정부 추진 방향이 부재하고 AI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AI 활용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의 공유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민간과는 다른 규제와 절차로 인해 AI 신속 도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기존 디지털정부를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AI 대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AI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



AI정부24



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혁신, 행정 효율화, 재난안전 등 3개 분야의 3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지원사항 및 이행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주관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한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202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대표 성과로는 '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가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과 공공 유휴 회의실 및 체육시설 1,200여 개의 조회 및 예약을 간단한 대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부터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2만여 종의 정부 서비스 및 혜택을 일상 언어로 물으면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검색 서비스가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 정부24 시범서비스를 2026년 3월 9일부터 운영 중이고, 5월 17일 기준 누적 사용자 1,100만 명, 'AI 질의' 이용 건수 1,70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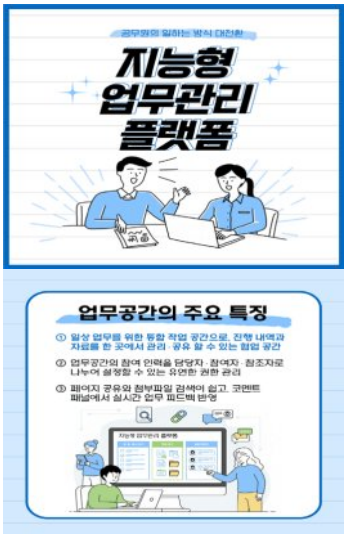
공공시설 예약 (강의실·체육시설)	공공서비스 (증명서발급) 처리	시범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긍정반응
1,200여개	100여종	89.8%

범정부 소버린 AI 공통기반 마련 및 확산

정부 기관이 AI 모델·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중복 개발·투자를 방지하고 내부망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2025년 11월)을 통해 범정부적 AI 도입·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서작성, 업무이력관리, 소통협업 등 행정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구축(2025년 11월)하여 정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대상별·수준별 4단계 AI 교육과정(공공 AI 역량 트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높은 AI 이해도를 바탕으로 AI 프로젝트를 이끄는 전문가(AI 챔피언)를 2025년 541명 양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공공 AI 시장규모 확대로 국내 AI 기업 성장

다양한 중소 AI 기업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자정부의 날 연례 행사와 연계하여 공공AI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 일정 부문 이상 구매하여야 하는 혁신제품에 AI 제품이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AI 제품 전용 평가트랙을 신설하였고, AI 전문 스카우터, AI 혁신제품 테마형 발굴행사 등 국민 참여를 통해 2025년 229개의 AI 혁신제품을 발굴하였으며, AI 제품을 111억원 시범 구매하여 AI 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였습니다.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민간수요를 토대로 AI 활용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위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0개를 우선 개방하였으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총 100개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2025년 7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간 손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연계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하여 기관별 원천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기관공유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누적 25개 기관에 구축 완료하였고,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을 2026년 4월 15일 배포하였습니다.

공공 AI 신뢰 기반 구축

공공부문에서 도입·활용하는 AI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공공 AI 영향평가'의 세부 설계안과 운영 방안(2026년 2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종사자가 공공 AI 도입·활용 시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마련(2025년 11월)하여 공공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 설계안을 실증·보완하여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확정하여 공공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중앙·지방정부 전반의 혁신을 촉발하는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0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한편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차단 등을 위한 AI 서비스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AI 대전환의 가속화로 개인정보는 국가 경제와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를 악용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규제 방식은 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유출신고 : (2022년) 167건 → (2023년) 318건 → (2024년) 307건 → (2025년) 447건
▲ 유출규모 : (2022년) 498만건 → (2023년)1,011만건 → (2024년) 1,377만건 → (2025년) 1억 355만 건

이에 이재명정부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전 예방 체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로 약 2,30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사고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48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2025년 8월)하였으며, 쿠팡의 약 3,386만개의 계정이 유출된 사고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5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도입 등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유출 책임을 철저히 하고 손해배상 활성화 등 피해 구제 체계를 현실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 집행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2026년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브리핑
(2025년 12월 12일)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2026년 5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여 사후 제재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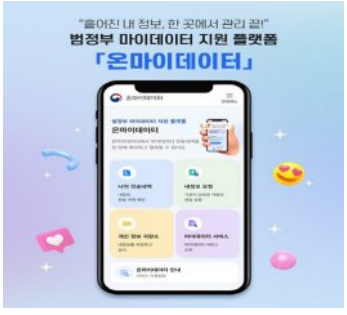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26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조직 내부 개인정보 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인력·장치·설비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신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에 선제 대응하였습니다. 2026년 2월 87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4월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신기술 환경 내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해소하여 기술 전문성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본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확대하였으며,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정부24 등 주요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해외 체류 국민 의료지원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확산하였습니다.

GPA 서울 총회 개회식
(2025년 9월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을 인정하여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구축(2025년 9월)하였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아동·청소년 시기 게시물로 디지털 잊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서비스'(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여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10,822건의 삭제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도용 방지를 위해 AI 합성 콘텐츠(딥페이크) 예방 기술을 연구개발(2026년~2028년)하고 개인정보 노출 탐지·차단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SNS 사칭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협력·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2026년 5월).

향후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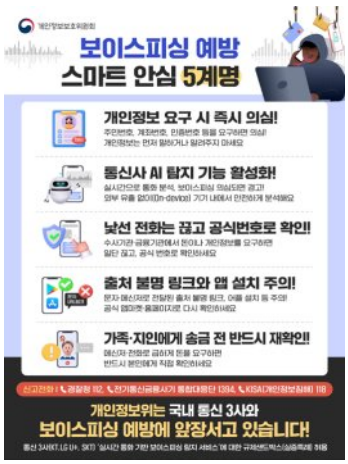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X(AI 전환)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운영(2026년 1월~)하여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상대방 간 목소리 대조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탐지·경고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2025년 9월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도입하여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자율형 AI(Agentic AI) 등 새롭게 등장하는 AI의 데이터 처리 기준 등을 검토하여 AI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5계명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함께, AI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0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하고, 연구개발(R&D)의 신속성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성장을 위하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Project-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는 등 연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R&D 예산 삭감 등으로 훼손된 연구자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회복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과 함께 연구자의 도전·몰입을 위한 R&D 생태계 혁신 및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가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ICT 협력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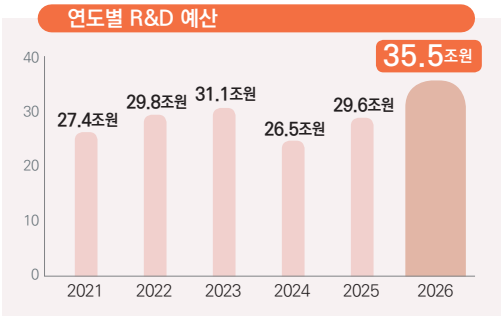
안정적·전략적 투자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R&D 체계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2025년 9월, 35.3조원)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2025년 12월, 35.5조원, 전년 대비 5.9조원, 19.9%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담은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2026년 3월)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AI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R&D를 임무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체감 성과를 신속히 창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는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대규모 R&D 투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R&D의 신속성과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폐지하고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2026년 2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R&D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R&D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정부 R&D 예산 편성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전문성·자율성·지속가능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민간 전문가 자문단, 연구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 출연연·대학·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연구자·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 등 크게 3가지에 대한 대책을 담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수립(2025년 11월)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자율·전문·성과 기반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재정구조 혁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임무·성과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PBS 폐지 방안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에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원배분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PBS 폐지 카드뉴스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기술주권 확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절차를 완료(2025년 7월)하여 2026년부터 국내 연구자들이 유럽 다자연구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28개의 연구팀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연구팀은 유럽 내 유수 대학 및 연구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호라이즌 유럽 참여연구자 포럼



지역자율 R&D 지원으로 지역혁신 역량 제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중앙과 지방 간의 수평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권한과 운영구조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덕('05), 광주·대구('11), 부산('12), 전북('15)에 이어 강원 연구개발특구를 새로이 지정(2025년 12월)하여, 이재명정부 5극 3특 지역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5차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여, 특구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자율과 혁신을 통하여 연구개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가속화하며,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성장의 연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0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2025년 11월)과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2025년 12월)을 발표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생 1,000명 선발, 신진연구자 과제 지원을 75% 확대 등 청년지원과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수 과학자 126명 유치, 박사후연구원 400명 신규 임용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은 그간 국가 성장을 견인하며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이공계 인재 유입 축소 및 고급 인재의 이탈로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 청년·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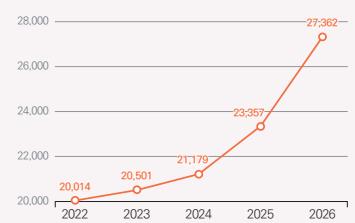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2025년 12월)을 수립하여 지원을 강화* 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제정(2025년 9월)하여 국·공유지 확보 등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였으며,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2차 건립 준공(2025년 10월 31일)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공간과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2025년 9월~12월)하여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초연구 신규 과제를 전년 대비 914개(+25%) 증가한 4,628개 선정·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진연구자 육성*, 외국인 연구자 정착 지원, 지역 기초연구 역량 강화**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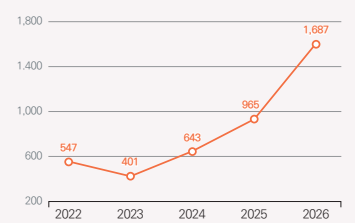
* 2025년 대비 2026년 신진연구 신규과제 지원 75% 증가

※ 지역 기초연구 지원비중 2025년 41% → 2026년 47%

기초연구사업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기초연구 신진연구자 신규 지원 (단위 : 억원)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 지원 강화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을 수립(2025년 11월)하여 '과학자가 되고 싶은 나라, 과학자가 우대받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공계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국가우수장학금 장학생 1,000명을 선발하여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을 29개교(2025년 4월)에서 43개교(2026년 2월)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트랙(200명 내외, 연 1.3억원 규모 지원)을 신설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대국민 보고회
(2025년 11월 7일)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원체계 일원화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향후 5년간 이정표를 제시하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 위원회와 현장 소통(2025년 6회 개최)을 거쳐 혁신적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조사 플랫폼 '과학기술인재 보이스 5.0'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권역별 의견 간담회를 추진(2026년 4~5월, 4회 개최)하여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개방형 수립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부합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을 2026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Brain to Korea" 추진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을 통해 126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비·인건비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 중심의 사업개편(2026년 1월 26일)을 통해 연구 몰입환경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 중심의 InnoCORE 사업으로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신규 임용하여 국가 연구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K-STAR 비자 참여 대학 확대를 통해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주요 도시 현지 로드쇼(2025년 10월~12월)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유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로드쇼 포스터
(2025년 10월~12월)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여성·고경력 등 연구자 지원 강화

출연연 연구자가 교수 등 유사 전문직종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강의료 기준 상향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를 착수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2월)과 동시에 하위법령 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기업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기업 R&D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과학기술유공자 4인 신규 지정과 함께 대통령명패 부착 및 공훈록 배포 등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와 전주기 커리어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중소기업 공동연구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하며 세계 최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는 연구 환경에서 과학자의 길을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0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미래전략기술(양자·바이오·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 등) 계획 수립, 법적 기반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창업 탐색 교육 확대,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착수 및 첨단기술 분야 특허 초고속심사 제도 신설 등 연구성과 확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부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2.8년에 달하고 중국과의 격차도 벌어져 초격차 핵심 전략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한국의 2024년 기술수준은 82.8%(기술격차 2.8년)
- 중국과의 기술격차 (2022) 0.2년 → (2024) 0.7년

이에 이재명정부는 산·학·연 협력 체계에 기반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미래 전략산업 선점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업 기반 미래전략기술 집중 육성

국가전략기술 Summit
(2025년 12월 19일)



먼저, AI 대전환의 시대, AI 기반 과학기술혁신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수립(2026년 2월)하고,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핵융합, 우주 데이터센터, 원자력 추진 선박 등 핵심 미션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파트너십을 가동(2026년 3월~)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술 분야별로 법적 기반 마련, 계획 확립 및 민관 협력 구축 등을 통해 집중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AI 바이오 국가전략'(2025년 12월), '제1차 양자종합계획'(2026년 1월) 및 '뇌 미래산업 국가R&D 전략'(2026년 3월)을 수립하였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6년 3월)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원자로와 차별화된 SMR 특별법의 제정으로 2030년대 본격화될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여 범부처·민간 역량의 결집을 추진하였습니다. 산·학·연 의견수렴(2025년 8월~9월)과 '국가전략기술 서밋'(2025년 12월)을 통해 미래혁신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기술육성·보호체계(4개 법령·513개 기술)의 정비·협업 강화 방안도 마련(2026년 3월)하였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2025년 11월 27일)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리 독자 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의 상업화를 위해 4차 발사(2025년 11월 27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누리호 제작 및 총조립을 총괄하는 체계종합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참여한 최초 발사입니다.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누리호 발사를 통해 신뢰성과 운용 경험을 축적하여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사용 운용 가능한 차세대발사체 설계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는 물론, 2035년 1단 재사용 기술 실증 완료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R&D 성과 확산체계 구축 및 딥테크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우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2026년 2월)하였고, 공공연구성과 기술료를 성과 가치제고 및 사업화에 활용하고 국가가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2026년 2월)도 발의하였습니다.

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탐색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 투자유치 성과* 등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지주 및 AC(액셀러레이터) 대상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및 컴퍼니빌더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 2015년부터 실험실 창업탐색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2025.12월 기준(누적) 864개 창업팀 지원, 창업기업 435개(50.3%) 설립, 신규고용 3,910명, 후속 투자유치 7,132억원(투입 대비 9배) 창출

기술사업화를 위한 성과창출 혁신체계로 대전환

기존의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공연 및 대기업의 연구역량을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하는 1% MVP(Market Viable Product) 프로젝트에 67.5억원을 투입(2026년)함으로써, 바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15개 과제를 지원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적 병목현상 해소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첨단제조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및 산업적 대도약이 예상되는 R&D 분야 등을 대상으로 '10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착수(2026년)하여 연구개발-실증-사업화양산까지 3년간 최대 50억원 규모의 패키지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6년 900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R&D 자금을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저리(최저 1.3%)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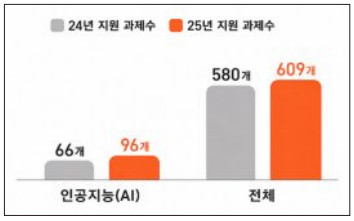
특허정보 연계를 통한 R&D 성과창출 체계 고도화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허분석으로 유망기술(218개) 도출, 국가 R&D 방향성을 제시, 특허동향 심층분석(2025년 234개), AI 분야 과제 집중 지원(2024년 66개 → 2025년 96개) 등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R&D 연계전략 수립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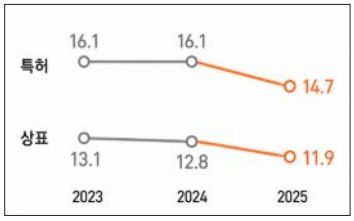
우리 기업 기술을 빠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특허 16.1 → 14.7개월, 상표 13.1 → 11.9개월)하였고, 첨단기술은 초고속 심사를 통해 1개월 내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125만건의 AI 학습데이터를 구축 및 민간 개방을 통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 수가 대폭 확대(2022년 330개 → 2025년 1,140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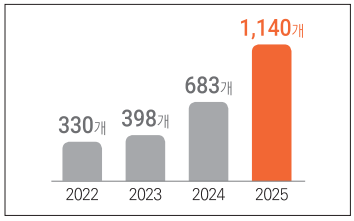
IP-R&D 지원 강화



심사대기기간 단축



IP 데이터 활용기관 확대



앞으로 이재명정부는 미래전략기술 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개정(2025년 12월)으로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고, AI팩토리를 100개소 이상 보급하여 제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산업기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후배터리법」제정으로 신산업 육성과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국가핵심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내 이스라엘-이란 분쟁, 미국·이란 갈등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변동성으로 인해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첨단 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육성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2025년 12월)하여,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업 부담이 경감되었고 또한,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년 확대되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산업 R&D 혁신방안(2026년 1월)'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①지역을 위한 R&D, ②제조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
(2025년 9월 10일)



산업 AI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활용 확산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M.AX얼라이언스가 2025년 9월 출범하였습니다. M.AX 얼라이언스는 AI팩토리,

AI미래차(자율주행차), AI로봇(휴머노이드), AI반도체, 산단AX까지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별로 제조기업, AI기업, 연구소, 학계 등 1,5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M.AX 확산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 다지기에도 매진하였습니다. AI반도체, AI팩토리 등 분과별로 AX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얼라이언스 내 기업·기관·전문가들간 협력을 중심으로 AX를 통한 공정개선과 자율주행 등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팩토리'를 2025년도에 100개 이상 보급할 수 있었고, 10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투입, 실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로봇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인 CES 2026(2026년 1월)에 '한국 휴머노이드 M.AX 공동관'을 운영, 우리 로봇 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업 현장방문
(2026년 1월 13일)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2025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발표된 전략에 따라 의약품 신속 출시를 위해 의약품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바이오 첨단기술 대전환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자동화 실험실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등 첨단의약품 제조 기술 개발도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확보, AI-바이오 융합 인력 양성, 자금 투자도 함께 지원 중입니다. 향후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등 제조 초격차 확보와 바이오벤처 기업의 성장(규모 확대)을 위해 인프라·금융·세제·인력 등 총력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도 제고하겠습니다.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전략



기후대응 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탄소중립 이행이 생산공정 중심에서 제품·공급망·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산업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전환, 디지털전환, 녹색전환을 포괄하는 기후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기후테크 R&D'의 기획에 본격 착수하는 등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후배터리의 관리 미비 해결 및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후배터리법」을 제정 중

입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제 도입, 안전검사 체계 및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및 함유율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다극화로의 패러다임 변화, 강대국의 기술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제조업AX,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신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0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팩토리 확산 등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 배터리 · 자동차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제정(2026년 2월)하였고,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및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 부활로 제조 생태계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국내 생산성 및 자본 기여도 하락, 인구구조의 변화 등 내재적 성장동력 저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제조업의 비중 : GDP 중 27.6% 차지(OECD 평균은 15.8%, 2023년기준)
- 역대 반도체 수출 순위(억불): 1위 1,734(2025년) → 2위 1,419(2024년) → 3위 1,292(2022년)
- 역대 자동차 수출 순위(억불): 1위 720(2025년) → 2위 709(2023년) → 3위 708(2024년)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
(2026년 2월 11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정된 「반도체산업 특별법」(2026년 2월)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특별위원회, 반도체특별회계 등이 신설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입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이차전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25%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 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미래 게임체인저인 차세대 배터리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주기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핵심 광물 확보 및 국내 소재 생산을 지원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
(2025년 11월 13일)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우리나라 수출 2위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대표 산업입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5년 11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수립·발표하였고 미래차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10개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 핵심 소부장 품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에 반도체 소재, 이차전지용 전해액 등을 생산하는 22개(비수도권 17개) 기업에 총 1,233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로봇·방산분야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산업 R&D 혁신방안 설명자료



미래형 혁신기술 개발 및 첨단 생산기반 강화

산업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R&D 혁신방안'(2026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술혁신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고, R&D 과제 선정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AI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팩토리를 산업전반에 확산하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AI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앵커기업은 종합 프로젝트를 기획·제안하고 정부는 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극 3특 중심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국가 산업정책과 지역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된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이 포함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재편 촉진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적용

2025년 8월 20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구조개편의 방향, 정부 지원원칙을 포함한 구조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정부와 기업은 긴밀히 논의하였고, 2025년 12월 19일 모든 사업재편 프로젝트가 사업재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2025년 12월 3일 제정되어, 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첫 사업재편으로 승인하여 금융과 세제 등 2조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석유화학·철강기업 등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2026년 3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총 236개 수혜기업에게 314건의 우수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견-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2025년 총 12건의 성과 공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납품물량 보장, 매출확대에 따른 이익 배분 등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이루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별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대·중·소 협력을 통해 공용 사용이 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하는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17일에는 반도체 소부장 협력 테스트베드인 '반도체 트리니티* 팹'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중소·중견·대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소부장 협력모델도 3건을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 트리니티 : 정부, 대기업(칩 소자기업), 소부장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로 명명됨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혁신기술 개발 및 첨단 생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성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31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차 서비스 강화, UAM 도심구간 실증을 통한 비행안전성 검증, 드론 배송 상용화 확산,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초고속열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AI를 접목한 도시·건축·물류 인프라의 계획 및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국제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차, UAM 등 핵심 모빌리티 수단과 인공지능(AI)은 미래 일상생활 속 필수요소로, 관련 기술개발 등 시장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정부는 모빌리티 기술혁신과 AI를 접목한 도시·물류 등 인프라의 구축을 핵심정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입니다.

자율주행 유상운송 버스



UAM팀코리아 본협의체
(2025년 8월 29일)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이재명정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2026년)을 통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지지체당 평균 3.75억, 비수도권 16억, 수도권 14억)을 지원하여 심야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Demand Responsive Transit), 농촌 순환버스 등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주행 유상운송 버스를 운행하고,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55개 시범운행지구, 자율차 124대 특례부여) 구축하였습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실현

이재명정부는 2025년 8월 민관협의체인 'UAM 팀코리아' 본협의체에서 초기 상용화 목표를 보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신속한 시장 개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 구성 의무를 완화하고 난이도가 낮은 운용 모델부터 시장에 우선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인천 아라뱃길에서 실도심 환경에서의 실증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다수의 기체가 운용되는 환경에 대비하여 안전운용체계 구축을 위한 1천억 규모의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 국산화 및 차세대 초고속열차 개발

K-드론 배송



이재명정부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 5대(농업, 소방, 시설, 물류, 항공)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25.8)하여 추진중입니다. 또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모터·배터리 등) 및 핵심기술(영상송수신장치 등)의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드론 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 공공서비스(순찰, 감시, 점검 등) 활성화 등 드론 활용 저변 확산과 운용 범위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부터 국토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1,200km/h의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대기압의 0.001~0.01 수준인 아진공 튜브의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하이퍼튜브 실용화 연구에 차질 없이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강국 도약을 위해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특화 시범도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정부 대상 사업 공모를 2026년 3월 시행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에 지방정부 간담회, 전문가 자문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정부 2개소 선정 후 구체적인 도시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스마트 빌딩 조성

이재명정부는 앞으로 더 많아질 서비스 로봇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에 공존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로봇 친화형 건축물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로봇을 고려한 건축 설계 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건축물에서 실증을 통해 이를 고도화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스마트+빌딩 특별관(2025.7.15~17.)



AI 인프라 구축 및 혁신기술·서비스 개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6년 4월에 7개 기술을 선정하고, 5월에 실증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실증기회를 기반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DX·AX 혁신

이재명정부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물류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2월 정밀도로지도 3,623km를 구축하여 고속·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를 통해 국토 관리, 재난 대응 등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축되는 다양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규제도 개선(「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25. 12월)하였습니다.

투자 역량이 낮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에 첨단 소프트웨어·장비 등 AI 물류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을 구성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DX·AX 혁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자율차·UAM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 등 핵심 모빌리티 수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K-AI시티 선도모델 확산 등 일상 AI 서비스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국정과제(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0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2025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액 역시 약 114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 전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기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외국인 환자도 201만명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과 발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을 실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R&D·산업육성 등에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이행 방향으로, 우선 유망분야 R&D를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AI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뷰티·첨단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백신·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R&D 확대 및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 주요 R&D 중기사업계획(2026~2030)과 분야별 투자 확대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 과정부터 박사 후 연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은 의과대학과 이공계대학원 협력 기반의 공동학위·연구 지원, 우수 의사과학자 선정 등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하여 1,2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은 21개 병원(2025년) 확대를 통해 임상 기반 연구개발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혁신성과창출R&D 사업비 1,680억원(2024~2028)을 확보하였습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품목 분류하여 임상시험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급을 변경 권고(2등급 → 3등급)해 임상 단계 진입을 앞당겼습니다.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 총괄협의체를 개최(2026년 2월)하여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의 수집방안을 마련하고, 정밀의료와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6개 대학 사업단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착수(2025년 4월)하여 현장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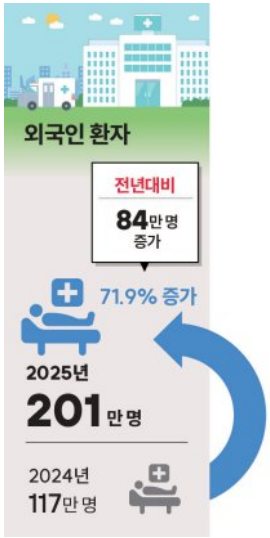
2026 의료 AI 바우처 사업 포스터



바이오헬스 수출액



외국인 환자 유치



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중이며 2026년 4월 기준 16.5만명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병무청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데이터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제공하였으며,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고 디지털-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발의(2025년 11월)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바이오 의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2025년 9월).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여 허가기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된 국내 개발 신약(뇌전증 치료제)이 허가(2025년11월) 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수출제조업 등록과 바이오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5,796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1~6호)하고 2개사 기업공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수출 산업 8위에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하였고,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액 역시 약 114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 전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기도 체외기기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 60.4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외국인 환자도 201만명을 유치하여 2024년 117만명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완성의 일환으로, 민간 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임상 1상 시험에 성공적으로 진입(2025년 12월)하였습니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2025년 11월)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민·관 공동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필수의약품 정의에 '대체재가 없는 의약품'을 추가하여 국가 직접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2025년 9월)해 필수의약품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했으며, 「약사법」 개정(2025년 11월)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통보를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유망 분야 R&D 확대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과 AI·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백신 효능평가 분석



제2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2025년 11월 26일)



0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하였습니다. 결혼·숙박업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방한관광 대전환·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K-콘텐츠·뷰티·푸드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수출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2%와 고용의 72%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내수 활성화와 수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025년 10월 2일)



서비스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하나로 묶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2026년 2월에는 임시국회 상정을 위해 다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며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2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3월 1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가 출범하였습니다.

AI 연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핵심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K-컬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콘텐츠·뷰티·푸드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K-팝과 굿즈, 디지털 헬스케어, 관광과 뷰티를 연계하는 등 산업 간 융합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25년 10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구축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디지털 고도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23일에는 '2026년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는 조치들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서비스업의 요금체계 및 환급기준 표시와 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2025년 12월 9일 21개소의 품질인증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지역관광 부문에서도 2025년 10월 2일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부처 간 분산되어있던 숙박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26년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재경부·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대전환·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에 관련 내용을 담아 발표하였습니다.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2026년 2월 25일)



서비스수출 활성화 지원 강화

기존 제조업에 편중되었던 수출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콘텐츠, 에듀테크(교육기술), 프랜차이즈(가맹사업), K-뷰티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중 해외 로드쇼(대만 등 주요 거점 상시 개최)와 수출상담회를 잇달아 개최하였으며, 2025년 11월 20일부터 양일간 열린 한·중 콘텐츠 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원 전략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해외 로드쇼
(2025년 7월~10월)



한·중 콘텐츠 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2025년 11월 20일)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0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딥테크 육성과 유니콘 기업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도시 조성, 연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조성 등 추진을 통해 창업 열기의 전국 확산과 벤처생태계를 혁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기록하고, 2026년 소비자가전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150개 등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코스피 장중 8,000선과 수출액 7,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회복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그 흐름 속에서도 성장의 결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의 극복이 중대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도전 여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창업·벤처 역량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시켰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창업·벤처를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낼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2025년 12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의 벤처투자시장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2026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5년 12월)을 통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상 법정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의 장기적 투자 기반을 조성한 결과,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최초로 벤처펀드 출자에 참여하여 1,788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3.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하였으며,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제1(2000년 전후)·2(2020년 전후)벤처붐에 이어 제3벤처붐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 거둔 결실입니다.

벤처투자 실적 발표
(2026년 2월 13일)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로 딥테크 유니콘 50개 육성

2025년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게 집중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신설한 후 2025년 6,451억원 펀드 결성, 2026년은 8,244억원의 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아울러, 2026년 잠재 유니콘이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 자금(최대 16억원)과 특별보증(최대 200억원)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최초 발표(2026년 2월),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협업 촉진을 위해 방산, AI 등 '모두의 챌린지'를 분야별로 진행(2026년 4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은 4개사가 증가한 총 27개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롭게 유니콘 기업이 배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2025년 1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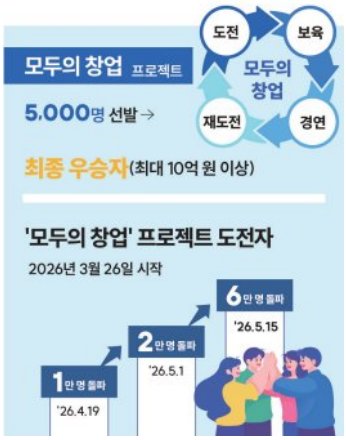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창업시대' 개막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하였으며, 플랫폼 개시 50일 만에 신청자가 6만명을 돌파하고, 누적 접속자 약 141만명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여 연중 전담 멘토단의 보육과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오디션에서 우승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률·세무 등 창업 애로를 단일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전국 17곳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3월에는 '온라인 센터'도 개소하여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개월 만에 누적 상담 1만건을 돌파하며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연결성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글로벌 진출 통합거점인 제1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개소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가 모이는 'SVC(Startup Venture Campus) Seoul'을 조성하는 등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CES 2026에서 한국 기업이 혁신상 241개를 수상하였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이 역대 최고 실적인 150개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창업기업동향 발표
(2026년 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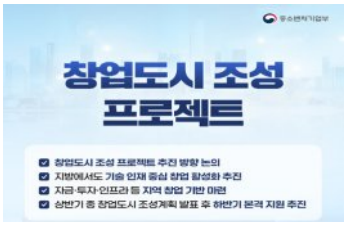
CES 2026 혁신상 발표
(2026년 1월 7일)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엔진으로 육성

지역 모두의 성장을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곳을 신속히 선정하였으며, 인재, 자본, 인프라

창업도시 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2026년 3월 11일)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 발표
(2026년 3월 30일)



재창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2025년 12월 11일)



등 창업자원을 집적·연결하고 직·주·락(職·住·樂)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창업하고 성장,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 혁신자금을 모아 2025년 강원, 경북, 부산, 충북에 4,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5년간 비수도권 권역별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 성장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에 대해 지역투자 의무를 제안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인재 유인부터 시장 조성까지 지속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자, 벤처기업 스톡옵션 개별 부여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위임하고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1월 발의).

한편,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 12월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하고, 성실경영 실패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한도 2배 상향, '재기지원 특례 보증' 신설 등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라운드테이블 신설(2026년 2·4월) 등 국회 및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 발굴-공론화-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과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0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2천억원의 R&D 투자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참여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실제로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보다 두텁고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 변동·보호무역 등 통상 불확실성에 맞서 수출 안정 지원을 집중한 결과, 2025년 '중소기업 수출 3관왕'(역대 수출액·온라인수출·화장품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은 2024년 이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디딤돌인 R&D 예산·투자·인력 감소로 인해 기술경쟁력 정체를 겪었으며, 최근 미국 관세로 인한 국제통상 환경 변화와 AI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발맞춘 정부의 지원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中企 R&D 예산(억원) : (2020) 1조 4,885 → (2022) 1조 7,888 → (2024) 1조 3,932
- 2011→2022 中企 R&D역량 : (R&D투자) 2.3억원 → 1.9억원, (R&D인력) 5.7명 → 3.4명
- 수출상위 3개국 수출편중 40.7% / 수출의존도(%, 2023) : 韓 34.7, 美 12.6, 日 17, 中 19

이에 이재명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 확보부터 글로벌화 역량까지 종합적인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AI대전환 비전 선포식
(2025년 11월 19일)



지역과 공존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지역 내 매출·고용 비중이 높은 지역주력산업에 기반한 혁신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R&D)을 신설하고, 국비 규모를 대폭 확대(2025년 215억원 → 2026년 969억원)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방정부가 기획한 AI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2026년 7개 지방정부 선정)

한편, 우수한 성장성·기술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100개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년차에 참여한 기업 100개사는 매출이 15.0% 증가하고 총 고용도 6.3%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D 지원 성과



R&D 사업화로 기업성장 촉진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첨단 바이오·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R&D를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발표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인한 성과가 매출 22조원, 수출 4조원, 고용 19만명, 특허 3만건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소비자가전전시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9개로 전체 수상기업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규모를 역대 최대인 2조 1,959억원으로 확보하였으며, 민간투자 연계 방식의 R&D 규모를 확대하고, 초기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이전 연구,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을 최초로 도입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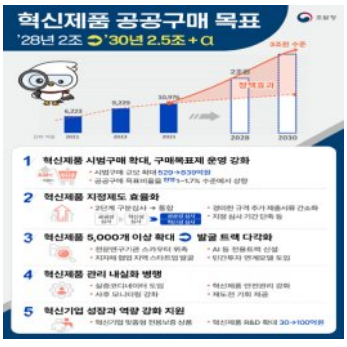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성과



뿌리부터 첨단까지 AX 대전환으로 생산성 혁신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이 AI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025년 10월)'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기술공급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을 발의(2025년 11월)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에 따르면 AI, 업종, 상생 등 특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308개사의 생산성은 34.4%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는 15.3% 감소하는 등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AI 중심의 재직자 연수사업 개편으로 4,136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AI 전환 촉진과 AI역량의 내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원 수준 확대 발표
(2025년 9월 11일)



글로벌 시장개척과 지속성장의 교두보, 공공조달 혁신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156건을 제·개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조사 확대(('24) 37개사 → ('25) 58개사, 55%↑)하여 조달시장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내 챗봇 상담채널 도입·모바일 가독성 개선 등 사용환경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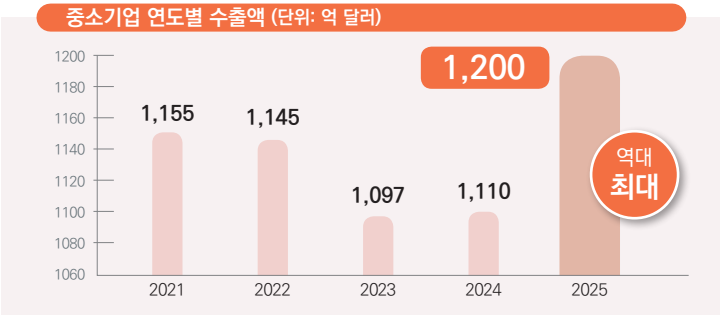
국내 유망기업의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강화립(쌀가루에 비타민·무기질 등을 첨가해 쌀알모양으로 성형한

인조쌀)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최초로 UN식품조달시장 진출을 달성하였으며, 혁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025년 1조 976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新무역질서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기회로 전환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와 중동 분쟁 등 대외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2025년 9월)'을 마련하고, 4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보증 공급과 관세특화 수출바우처 신설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속대응을 통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1,110억달러) 대비 8.1%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1,200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도 전년 동기(273억달러) 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총 1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여 전쟁할증수수료(WRS), 우회 물류비용 등 추가 물류비용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 뷰티 등 4대 소비재를 'K-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유통 대기업 및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2025년 11월)'을 마련하여 물류·통관 등 온라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82억달러와 11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
(2026년 1월 8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R&D 2조 1,959억원 확보, 중소기업 수출 역대 1위 달성 등 중소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혁신 및 지역주도형 성장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글로벌 무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규제 합리화를 신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선 신산업 규제 신속심사 체계와 AI · 바이오헬스 등 분야별 로드맵을 구축하여 선제적인 규제정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관리 및 법제화를 추진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메가특구'의 도입을 통해 정책지원과 결합한 규제특례로 지역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추진력을 대폭 강화하여, 규제 합리화 실현의 구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통상환경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과 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로 코스피 장중 8,000돌파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저절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규제개혁을 신성장과 도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삼고,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산업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구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I, 바이오헬스 등 핵심 신산업 규제 정비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2026년 3월)하여 신산업 규제 신속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6년 3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고시 등 4건에 대해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부처 자체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안건 심사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신산업 분야 기반 확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는 미래의 신산업·신기술 예측에 기반하여,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1호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으로,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2025년 11월)하였습니다. 로드맵에서는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전체에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2025년 11월)



실증 확대 방안 마련' 등 총 67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으로, 조속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마련·발표(2026년 4월)하였습니다. 로드맵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에 맞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건강 증진 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였고, 특히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4가지 전략 과제(3SV1) 선정하여 ▲혁신 친화 규제 재설계(Standard) ▲신속 시장진입 지원(Speed) ▲규제서비스 전환(Service) ▲가치 기반 평가(Value) 등 24개 합리화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후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2025년 11월)



성과 중심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6개 부처의 8개 샌드박스로 확대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실증특례 2,339건, 임시허가 119건을 포함한 총 2,526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연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 법률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조치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특구 고도화를 통한 지역성장 촉진

이재명정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메가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란 5극 3특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으로, 기존의 소규모 분산형 특구의 한계를 넘어 광역·초광역 단위의 '메가급'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종합 정책패키지 등 '메가급'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ready-made 특례)·수요응답형 규제유예(on-demand 특례)·upgrade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걸림돌 없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세제·재정·금융·인재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여 앵커·협력기업의 지역 이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

체회의(2026년 4월)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여 메가특구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메가특구를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등이 집적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2026년 4월 15일)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립

그간 규제혁신 추진체계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총리 주재의 규제혁신 회의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규제혁신의 범위를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규제 합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획하면서 28년 만에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2026년 2월). 이로써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규제 합리화가 가능해졌고, 동시에 민간위원이 확대되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 발전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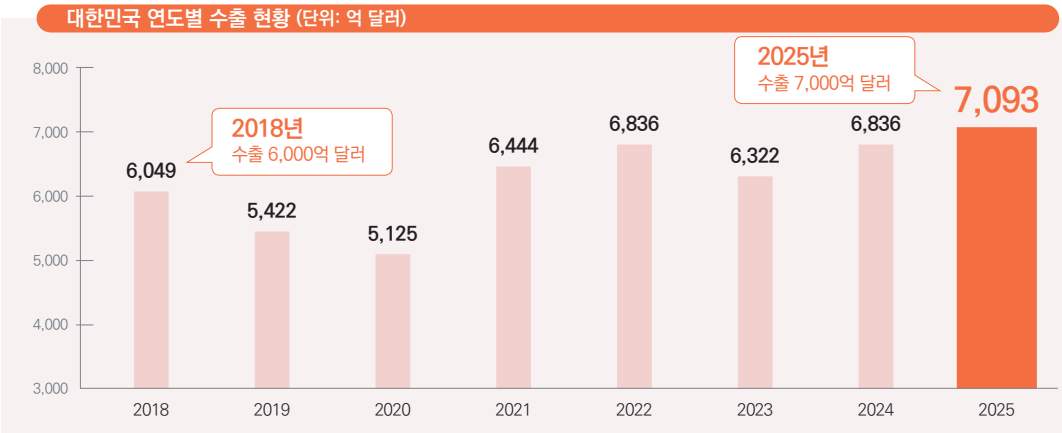
0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고,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93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럽, 동북아,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안보 단속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수출·원산지표시 위반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적발을 대폭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2강(G2) 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기업 및 국익을 수호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를 위한 무역구조 혁신

이재명정부는 무역구조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 등 수출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월별 수출실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025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7,093억달러)을 달성하여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일부 품목·시장·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여 수출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전력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무역보험(2026년 275조원)과 수출 위기대응 프로그램 등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상담창구인 '무역장벽 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100개씩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1천만달러 이상의 중추 기업으로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하여 관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해외인증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고, '모두의 수출'을 기반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선도하는 무역 강국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강화

한미 무역협상
(2025년 7월 30일)



미국 현지시간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되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이래 우리나라의 2위 수출 대상국인 만큼, 예고된 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시 우리 수출기업들의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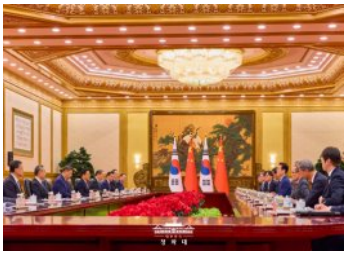
■ 대미 상품 수출액(수출비중, 순위) : 2024년 1,278억불(18.7%, 2위) → 2025년 1,229억불(17.3% 2위)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 16일 '대미 협상 TF'를 발족하여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본격 진행하였고, 치열한 협상 끝에 2025년 10월 29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고, 향후 의약품의 경우 최대 15% 관세,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부여, 특정 항공기·부품의 경우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미 수출여건을 확보하게 되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미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국간 안정적인 통상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2026년 1월 5일)



이재명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바탕으로, 중국과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 허리펑 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간 면담과 세 차례 한중 상무장관회의

(중국 상무부) 및 4년 만의 한중 산업장관회의(중국 산업정보화부)를 개최하여 산업·통상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4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실시로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5년 7월 3일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2025년 9월 11일 '한중 수출통제 대화' 등 협력 채널을 가동하였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기반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두 차례 한일 산업·통상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2026년 3월 14일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핵심광물·자원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는 2026년 1월 19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계기 유럽연합산(EU산)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초감가상각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탈리아에 한국 제품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폐지를 추진하게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네덜란드와는 2026년 2월 11일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반도체,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유럽연합과도 2026년 4월 17일 차세대전략대화를 통해 신통상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후 사우디·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에 대한 특사 파견, 경제부총리-주한대사 면담 등을 통해 원유·나프타 등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유의 경우 작년 월평균의 89.6%(7,679만배럴, 2026년 5월 17일 기준)를 확보했고, 전략경제협력특사단 등의 활동으로 연말까지 원유 대체물량 약 3억배럴을 확보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6년 1월 13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2026년 1월 19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25년 이후 총 9.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2026년 4월 기준)

특히, 중동 상황(2026년 2월) 발생에 따른 국내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5조원의 피해기업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국익 침해 무역안보 교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2026년 2월)하여 불법 무역행위를 차단하였습니다.

무역안보 전담조직 중심 집중 단속 결과, 무역안보 침해행위 적발 실적을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2.9배 수준(2,262억원 → 6,556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적발하였습니다.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우리 첨단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조건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산업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38종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높아진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축 예산을 본예산 2,007억원에서 4,15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광물 비축물량은 2024년 말 국내 수요 60일분에서 2025년 말 85일분으로 확대·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비축 물량에 맞춰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최근 공급망 불안 우려가 높아진 희토류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국무회의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투자·융자 확대 등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산업 영역 확대와 다변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과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0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제정·시행,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산업육성 전략 수립,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전력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열 등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인하기 위해 계절별, 시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토록 개편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전력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탄소중립 달성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확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영향으로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 등 재생에너지 맞춤형 에너지고속도로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환경부의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핵심 이행수단인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성장 벨트를 조기 완성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후테크 기술력 확보와 에너지와 AI가 결합된 첨단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여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력망 신속 구축으로 지역균형 성장과 첨단산업 지원

정부는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보완하는 융통선로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첨단산업단지 등에 안정적 전력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하고, 장거리·대용량 해저 전력 전송과 재생에너지 연계의 장점이 있는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산업육성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HVDC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앞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기반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범부처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를 운영하고, 인허가 특례 및 주민지원 확대, 도로-전력망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목표 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연계 및 기후테크 신산업 창출로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산업화

기후테크 혁신연합 출범
(2026년 3월 4일)



ESS 중앙계약시장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범부처 전담반(TF)을 2025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을 2026년 3월 중기부와 공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변 공기, 땅, 물 등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목표를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2025년 12월에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역량을 2026년 1.2만대에서 2027년 9.7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계통 안정성 제고를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개설을 확대하여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분산에너지 확산 및 전력망 안정성 제고

분산특구 지정현황(2025)



기후에너지 DX·AX 4대 신사업(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地産地消)하도록 소규모 전력망을 전국에 만들어 송전을 최소화하고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과 같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전략'을 '25년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기 위해 분산에너지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 특구(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 의왕·포항(경북)·울산광역시·서산(충남), 2025년)를 지정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 허용,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 부여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해 사업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표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접근성 제고, 신산업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할 기후에너지 DX·AX 전략 TF를 2025년 12월 출범하였습니다.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과 함께 간담회, 분야별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탈탄소 녹색문명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에너지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DX·AX)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력시장제도 혁신으로 전력시스템 대전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의 전제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인 만큼, 여름·겨울철에는 전력수요 대비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봄·가을철에는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사계절 동안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여 발전, 수요분야의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 역대 2위의 전력수요에도 사전에 충분한 공급 능력 및 예비자원 확보, 전력 유관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 운영, 여름철 폭염 등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 예비자원 확보



또한, 전력 공급능력이 풍부한 낮 시간은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우선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조업시간 조정 등의 사유로 유예가 필요한 업체는 추가적인 준비를 거쳐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전비용, 지역 균형성장 등을 고려하여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력망 확충 거버넌스 혁신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원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건설 후 이관 및 정산을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관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특례,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전력망 신속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성장 벨트를 조기 완성하는 한편,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로 전력시장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0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달성을 위해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햇빛·바람소득마을을 확산하고, 입지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선도의 대전환을 위한 케이-알이(K-RE)100 출범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설치 등 새로운 보급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와 함께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AI 시대를 견인할 주력 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3년 30.3%, OECD 등 주요선진국은 2024년 기준 34.4%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0%에 불과한 최하위권 수준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수준을 위해 연평균 11~12GW 보급이 필요하나 지난 3년간 연평균 3.2GW 보급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급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전략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2035 비전(2026년 5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
(2026년 2월 11일)



2026년도는 재생에너지 본격 확산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5대 과제 10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5년 9월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분기마다 재생에너지 추진현황·계획, 유휴입지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전국 88개 공공기관과 케이-알이(K-RE)100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 방향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5년 3월)」 시행령·시행규칙을 2026년 3월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가 지자체별(100m~2,000m)로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2026년 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1월에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입법·시행을 통해 태양광 입지의 공공주도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국제공항, 대공원, 경마장 등 국민의 방문빈도가 높고 상징성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률은 2025년 동기 대비 35.5%가 확대(2025년 1분기 802MW → 2026년 1분기 1,087MW)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2026년3월 26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확대



햇빛·바람소득 확대로 지역소득 증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 3만 8,000여 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약 7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약 3,0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2026년 2월 범정부 차원의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신설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수급 대상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수용성이 낮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세대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였음에도 신청 여부·사용법 미인지, 거동불편 등으로 바우처를 미사용하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매년 5.2만명(3년 평균)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미사용 원인 조사, 에너지사용 환경 점검을 통해 맞춤형 사용을 지원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률(2025년 5.7만명 → 2026년 12.3

만명, 115.8% 증가)을 대폭 높였습니다.

2025 독일 전시회(InterSolar Europe) 한국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과 제품·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2025년도 62억원 → 2026년도 82억원(약 32.3%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수주·수출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부터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세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및 실증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핵심 기자재인 20MW 이상급 초대형 터빈 개발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R&D 성과물에 대한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해당 터빈 활용 시 입찰 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공급망 생태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RE100 산단 구축으로 전력수요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2025년 7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즉시 조속한 정책 이행을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산단) 개발 절차,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 정주·교육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는 신속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입지를 선정하여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총력 보급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제도혁신, 공공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주력전원화가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기업의 노력을 통해 연간 최고 수준인 22.1만대의 전기차 보급대수를 달성하였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 법제화·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현재 EU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삼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등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가비전인 국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확실한 이행과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방향을 확립하고, 더불어 국민과 산업계의 적극 참여, 관련 산업 육성, 국제 리더십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이행 과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 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6년~2030년) 현황 : 772개 기업, 배출허용총량(연평균) 25.4억톤(5.1억톤), 유상할당 비중(발전 15~50%, 발전外 : 15%)
- 전기·수소차 연도별 보급 : 2021년까지 25.8만대 → 2023년 16.3만대 → 2025년 22.1만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및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총괄부문 토론회(2025년 9월 1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브리핑
(2025년 11월 10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취지에 맞게 대국민 공개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미래세대 감축부담, 국제적 책임, 국내 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5 NDC(2018년 대비 53% ~ 61% 감축)를 2025년 11월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탈탄소를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고, 관련 신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 전략 마련과 민·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합동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추진단"을 2026년 1월 28일 출범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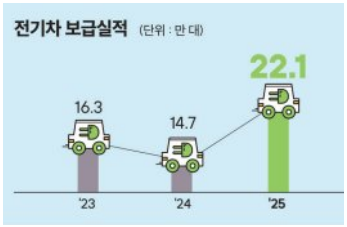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한 후 기업들간 거래를 허용하여 비용효과적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국내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거쳤으며 산업계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아동·청년,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점검자문단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2025년 12월에는 온·오프라인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이행점검 결과와 우수사례를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권역별 순회 성과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행점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이 탄소중립 정책의 수정·보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환류체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

전기차 보급대수(2025)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였으나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 약 22만대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편·확정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차종별 보조금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2025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시장 조성을 위해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투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 165개 기관과 함께 총 27차례의 분과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핵심 감축 분야 및 기후적응 분야 녹색경제활동을 확대·고도화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정(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하나 우수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을 공급하였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녹색채권 이차보전 규모를 기존 0.4%p에서 1.0%p로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또한,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개선하여 제도 가입자를 확대하였고, 범국민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나무 심기 등 5개의 실천항목을 추가하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 법제화·상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6년 예산 25억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기후시민회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과 대표성 보정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을 선발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리, 국내외 정책동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방안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강의, 분임 토론, 전체 숙의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토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권고안은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 대안으로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실천이 만날 때 완성됩니다. 이재명정부는 객관적인 이행 관리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선도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색채권 지원 확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실천)



0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신산업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전환(GX)'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그린전환촉진법」 제정 추진과 대규모 R&D 기획으로 탄소감축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경매·융자·파트너십 등 혁신적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과 설비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건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와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생활공간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소 다배출 중심 현재 산업구조로는 목표 달성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공급망 중심 경쟁 심화로 인해 탄소감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이중과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의 체질을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경제구조 개혁과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력 산업의 성장지향형 그린 전환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자, 기존 정부 역할 중심의 「친환경산업법」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산업그린전환촉진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업종별 그린전환 로드맵 수립, 경매·협약 등 민관협력형 이행수단, 정의로운 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현재 입법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탄소감축 핵심기술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주기 R&D 사업인 '산업GX플러스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총 9년(2027~2035년)간 추진되는 본 사업은 현재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 본격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계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형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을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감축 경매사업'(2026년 250억원), 대규모 감축설비 및 R&D 투자기업에 대해 1.3% 수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융자사업'(2026년 1,720억원),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단위의 감축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파트너십'(2026년 105억원) 등을 2026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및 강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그린전환의 핵심 수단으로서 '산업부문 순환경제 3x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2025년 12월 발표하였습니다. 동 전략은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소비·회수 등 3대 기능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동 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여 '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순환경제 기반의 신시장 창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환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경제 페스티벌'(2025년 7월) 및 '순환경제 상생라운지'(2025년 7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관련 수요·공급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多배출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설비·기술 도입·투자 유도), 생산세액공제 등의 지속적 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 제정 할 계획입니다.

선형경제 대비 순환경제의 공급망 체계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 및 역량 강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

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탄소무역규제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고도화·정교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주

권을 보호하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플랫폼은 기업들이 정해진 표준과 규칙에 따라 탄소배출량, 원료 정보 등 글로벌 규제 대응에 필요한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규제 설명회를 개최(2025년 11월)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배포(2025년 12월)함으로써,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및 전생애주기 저탄소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기축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확산으로 신축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ZEB 인증 의무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ZEB 3등급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2025년 12월)하여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기축 부문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GR, Green Remodel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268동에 대해 국비 약 1,145억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사업의 지원규모 및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혁신, 제도개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0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품 全주기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광물 등의 순환자원 회수를 위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여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을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플라스틱은 높은 활용성·편의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량 급증, 환경잔류 등 인류와 생태계의 큰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 이후 폐기 단계에서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 재생까지 全 과정에 걸쳐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순환시키는 환경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과제로 유한한 지구자원을 낭비 없이 순환시켜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고 자원 활용은 지속하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플라스틱 발생량(OECD, 2022년) : 2000년 1.5억톤 → 2019년 3.5억톤 → 2060년(전망),10.1억톤
-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전망(2025년 2월) : 2019년 579.6억달러 → 2030년 1,200억달러 성장 전망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종류 확대 : (2025년) 50종 → (2026년) 全품목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2025년 12월 23일)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추진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발표(2025년 12월, 대국민 토론회)하였습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과제를 담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2026년 4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다회용기 전환 매장을 확대(2024년 5,453개소 → 2025년 6,190개소)

직매립금지 이행 업무협약
(2025년 12월 2일)



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으며,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2025년 9월, 분리배출.kr)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과 위치기반 배출장소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2026년 1월 1일)을 앞두고 기존 직매립하던 연 50만톤 가량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전환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입장을 적극 중재하여 2025년 12월에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소각시설 정기정비·고장 등에 대비한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폐기물 대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하여 2030년 전국 시행 대비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통한 순환이용성 제고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2025년 9월 25일)



제품 설계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정책포럼을 2025년 9월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EU 동향, 산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5개 품목(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을 우선검토품목으로 지정(2026년 2월)하였고, 이 품목들을 중심으로 에코디자인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포럼' 운영에 착수(2026년 4월)하였습니다. 동 포럼에서 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는 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2026년 하반기 중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순환이용 확대

전기,전자제품 의무대상확대



연간 5천톤 이상 무색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2025년 9월)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을 2030년까지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사용 의무율도 30%로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무색 페트병 이외의 재질과 품목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예고하여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형가전, 배터리 내장 제품 등 폐가전의 회수 및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을 EU와 동일 수준의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2026년 1월)하였으며, 무상방문수거, 공공시설·공동주택 중심 전용수거함(2.2만개) 확충 등을 통해 무상배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순환경제 내재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으로,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에 대해 수입은 쉽게, 수출은 어렵게 하여 핵심광물 유출 방지와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는 국가 단위 순환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환원료 공급망 관리정보 확충, 순환자원 R&D·실증 촉진, 순환자원 지정 확대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2025년 10월)하였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폐PCB) 핵심광물 추출, 폐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생광물화 기반 리튬회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산업계 실증특례를 부여(2026년 2월)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순환경제 DNA를 산업계에 이식할 선도기업·산단을 새로 모집하여 협약을 추진(2026년 4월)하고, 개별기업별 여건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컨설팅(2026년 20억원)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규제특구 지정, 설비 개선, ESG 인정 등을 제공·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추진을 통해 전 과정 순환이용성을 높여 나가고 탄소중립·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순환경제 내재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025년 10월 16일)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모식도



0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에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천정비, 댐 안전성 강화사업 등 홍수방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홍수방어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산불 등 기후재난이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 생업·생계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과학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고도화, 홍수·가뭄 등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 적응역량 강화 등 기후위기에 안전한 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사례 : ▲2024년 전지구 연평균 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세계기상기구), ▲대형 산불 발생(2025년 3월),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 호우 하루에 15건 발생(2025년 7월 17일), ▲2025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역대 최고 기록

강력한 국가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구축

전례없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2025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년~203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2025년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안전한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 설계를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과,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등 사회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9월 시행)에 따라 범부처 협업 기반으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제도·기술적 체계를 구축하여 산출 규격을 마련(2026년 1월)하였으며, 재현성능을 고려한 최적의 통합(앙상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AI 스피커 폭염 영향예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2025년 6월부터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전국의 취약계층 약 4,000가구에 폭염 영향예보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 대응요령을 영상으로 재생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등 고령층이 안전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우 강한 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현장에 있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제도를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울산에서 2025년 7월 13일 첫 발송을 시작한 이후 총 271건(2025년 기준)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섬진강 제방 정비사업



홍수방어 인프라 정비를 통해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지자체 정비가 미흡했던 승격하천(지방 → 국가, 2024년~2025년 20곳 467㎞)과 배수영향구간(411곳 597.7㎞)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하였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하천 제방 구간은 단계적 보수·보강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댐의 경우 지진이나 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내진보강 또는 비상방류시설을 설치하는 안전성 강화사업(횡성댐, 대곡댐 등 누적 12개 공사 완료)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댐 건설사업, 치수능력증대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제방과 물이 흐르는 길인 하도정비 등으로 홍수대응이 곤란한 도심지 하천 등에 대해 대규모 저류지 등 홍수완충공간 조성(목감천 267만㎥, 원주천 85만㎥ 규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홍수 등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인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2025년 11월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방침 내 전국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지자체 대상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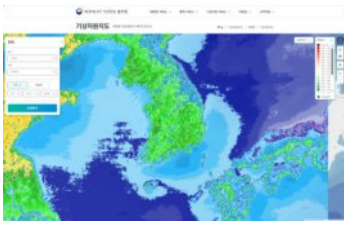
또한, 호우 예측의 정확도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상레이더와 강우레이더 관리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고, 빗물받이와 맨홀 전수관리(빗물받이·맨홀 총 67만개)를 통해 극한 호우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2026년 6월~9월)를 앞두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숨은 물그릇 확보(기존 108.2억톤 → 개선 118.6억톤, 10.4억톤↑)와 인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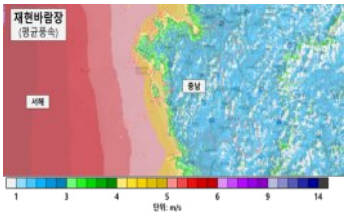
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하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기존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올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기상정보 시스템_태양광



재생에너지기상정보 시스템_풍력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 개선 등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시설 설치를 확대·지원(2025년 89개 사업 → 2026년 105개 사업)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용자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실태조사 가이드를 배포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적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한반도 지역의 최근 1년 고해상도(10분 간격, 가로·세로 1km 단위로 세분화)로 재현되는 바람정보와 최근 5년 일사량 분석정보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수치모델과 관측자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된 이 정보들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 등에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력 발전사업 관계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풍력·태양광 분석정보 기간을 확대하고, 한국형 수치모델의 일사량·바람 예측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0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이동식 녹조분석차량 도입 등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새벽배송 신선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였으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통해 563개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기준(15㎍/㎥)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고, 녹조 발생, 낙동강 유역 먹는물 문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3㎍/㎥ 수준 달성을 목표로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부문 집중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수계별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겨울철·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인 계절관리제(12~3월)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 산단·공단 등 대기질·악취 취약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2026년, 대상지 18곳)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노후차량 누적 14.8만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 대용량 수소충전소 국고보조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수소차 충전 편의를 제고(보조금 지침 개편, 2026년 1월)하였습니다.

녹조 대응체계도



낙동강유역 취수장, 정수장 추진현황



녹조 걱정 없는 하천, 안심하고 먹는 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장기화 및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선제적 녹조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낙동강 녹조검사 채수위치를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변경하고, 이동형 분석차량 도입으로 검사당일에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하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녹조빈발지역에 공기중 녹조독소를 조사하였습니다. 2026년 2월부터 2030년까지 낙동강 녹조 50% 저감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수량·수질 통합 관리로 녹조를 저감하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합니다.(2026년 5월~10월)

아울러 낙동강은 타 유역과 달리 큰 오염원(제련소, 산단·축사 등)이 상류에 집중되어 있어, 30여 년간 수질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다 실효적인 방법으로 본류 수질개선과 더불어 수혜지 인근에서 댐만큼 깨끗한 원수를 전량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2026년 4월~2027년 7월)를 수행하고 안정적 수질·수량 확보를 공개 검증하는 등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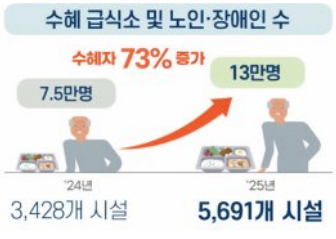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생활화학용품 등 3,876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유통차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의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243개 지자체 중 90.1% 완료)과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2023년 32개 → 2025년 40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배달음식점, 무인판매점에 대한 점검과 온라인·새벽배송 신선식품 수거·검사를 확대하였으며,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대상으로 정밀하게 선별하여 검사하는 등 국민 다소비, 고위험 품목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 약 73%

에 해당하는 166개 시·군·구에서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층·장애인에게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년간 지속되어 온 모범음식점 제도를 '식품안심업소'로 통합하여 소비자 혼선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더 높였으며, 국민들이 많이 찾는 공항, 복합쇼핑몰 등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5년 12월)하고, 표시 대상 등의 세부 기준(2026년 2월)을 정하는 등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심업소 및 식품안심구역



환경 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20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2025년 12월)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전담 소통팀 신설과 피해자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소통공간을 개소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인 국가산단·난개발 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지원사업(약 2,000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을 제공(2025년 상품·서비스·진료비 8,500명, 실내환경 컨설팅 1,500가구, 실내환경 개선 250가구)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에 힘썼습니다.

정부는 대기, 수질, 화학제품, 먹거리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매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대책



0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보 개방, 취·양수장 시설개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정산을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2025년 산불피해가 발생한 주왕산 ·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해 생태계 조기 회복을 위한 야생동물 먹이급이, 인공조류둥지 설치, 생태복원을 위한 토지매수 등 다양한 복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대강 보 관련 재자연화 지연 등에 따라 농업용 보 등 횡단구조물로 인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하굿둑 건설 이후 하천-바다 간 단절로 인한 하구 생태계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인류활동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래종 등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물다양성 안보를 확보하고, 보전된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고품질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호지역 추가 지정,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가 우려되는 종 차단 확대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호지역 · 자연공존지역 확대(목표 2030년까지 육상면적의 30% 지정) : 2024년 17.8% → 2025년 18.4%(607.5㎢ 증가, 여의도 209배)
-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 2024년 853종 → 2025년 1,005종(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 추가 지정)

4대강 재자연화 및 하천 고유성 되찾기

그간 4대강 보는 2013년 준공 후 보 개방 시 수위 저하로 인한 취양수 및 지하수 이용 제약 우려 등 농어민의 반대와 보 미철거 시 녹조를 유발하고 생태계 단절을 야기한다는 환경단체의 이견이 상충해 왔으며,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9월 지역 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계별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승촌보, 백제보에 대해 비영농기 보 추가 개방을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공주보 물 채움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었던 축제(백제문화제, 2025년 10월 3일~12일)를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물 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 극한가뭄, 녹조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취·양수장 3개소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에는 낙동강 녹조

낙동강 중적포 양수장 개선



심화 시기 물흐름 개선을 위한 보 개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에는 환경단체와 수 차례 회의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환경단체는 세종보에서 700여일 지속해 오던 천막농성을 원만히 종료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

2025년부터 담수·해수가 만나는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및 수생태계 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환경단체·농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역별 하구 생태복원 협의체를 구축·운영 중이며,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이 낮은 하천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를 진행(2026년, 48개 하천·인공구조물 401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건강성 확보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강 하구 복원 협의체
(2025년 11월 25일)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위치한 금정산은 1,78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17점(국보 1점, 보물 12점, 사적 1점 등)을 보유한 지역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수한 자연·문화자산 보전과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금정산을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하고 2026년 3월부로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하였습니다.(2026년 3월) 아울러 훼손 생태계의 체계적인 녹색복원을 위해 전 국토의 체계적 조사·평가로 복원이 필요한 복원 대상 후보 목록을 마련중(2023년~2027년)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서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등을 통해 국토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장항 국가습지복원 조감도



서천 생태관광 벨트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및 가치 증진

2025년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가 우려되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누적 1,005종)하였으며,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훼손된 생태축 연결을 위해 전국 6개소(충남 천안·청양, 광주 북구 등)에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 사육 종식을 위해 2025년 9월 구례군에 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이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식
(2025년 9월 30일)



문을 열고 2026년 4월 현재 시민단체가 구조한 곰 28마리를 보호 중이고, 앞으로도 남은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초대형 산불 확산으로 주왕산·지리산 국립공원에 상당한 산림피해(주왕산 3,260ha, 지리산 260ha)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야생동물 먹이급이(뽕잎, 건초 2.5톤), 조류인공둥지 설치(120개소) 등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2026년 3월부터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 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파종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생태계 조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복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부실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2025년 9월 상시 품셈 개선이 가능하도록 대행비용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대행 업체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를 2025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예방을 위해 사업자 대신 제3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도입·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6년 한 해 동안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공감대 기반의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2030년 보호지역 30%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였습니다. 벤처·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딥테크 맞춤형 보증', '기업성장펀드'를 도입하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ESG공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금융권 AI플랫폼 구축'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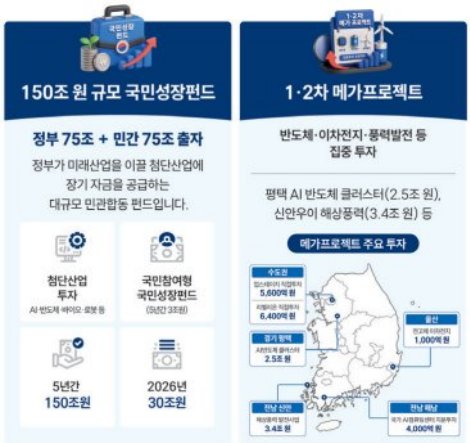
우리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벤처·지방·기후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기후위기 대응, 데이터 금융 활성화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2025년 9월 10일) 및 출범식(2025년 12월 11일)을 개최하여 향후 2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차 메가프로젝트 발표(2025년 12월 19일)를 시작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민관이 함께 3.4조원을 투자하는 결정을 하였으며(2026년 1월 29일), 이를 통해 전남 첨단산업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소재 중견기업(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에 장기·저리로 1,000억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여(2026년 2월 26일), 사업진행을 주저하던 기업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삼성전자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조 5,000억원을 저리로 대출하기로 결정(2026년 2월 26일)하는 한편, 'K-엔비디아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 NPU(신경망처리장치, Neural Processing Unit)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26년 3월 26일).

국민성장펀드



한편,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접 지자체, 지역기업 등에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

다(2026년 2월 11~12일, 26~27일). 향후에는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성과를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반도체·AI 등)에 기술개발 단계부터 오래(최장 11년), 더 많이(최대 70억) 지원하기 위한 '딥테크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2026년 2월). 또한, 혁신기술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AI(AI반도체, AI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피지컬 AI 등), 에너지(ESS,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위성체·발사체·지상장비 등) 3가지 기술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생산적 분야로 은행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를 합리화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년 3월 개정·시행).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류에 따라 RW 250% 또는 4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은 250% 적용 대상을 글로벌 사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 적(보유 3년 미만)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업력 5년 미만)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기 위한 하위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3월 17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 운용체계,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 안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2026년 2월 25일)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첫째,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2025년 총 70.3조원(계획: 51.7조)의 기후금융을 공급하였으며,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2026~2035년) 총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여 탄소 다배출 산업과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ESG공시의 '청사진'으로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단체·기관투자자는 규제명확성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로드맵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ESG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공시 일정에 맞추어 규정·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 이행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개시(2025년 12월 22일)하여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AI 서비스 개발·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AI 플랫폼은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적합한 콘텐츠(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공급하고, AI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최신 콘텐츠 공급을 확대해나감으로써 AI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 핀테크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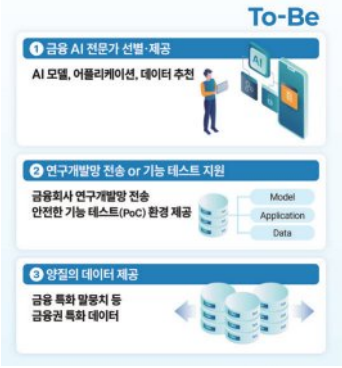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적으로 출시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2일 전체 생명보험사(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제외)에서 2차 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험사별 비대면 가입을 확대하고,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계약자의 노후대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년을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성장펀드'를 시작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흐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자금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As-Is



디지털금융 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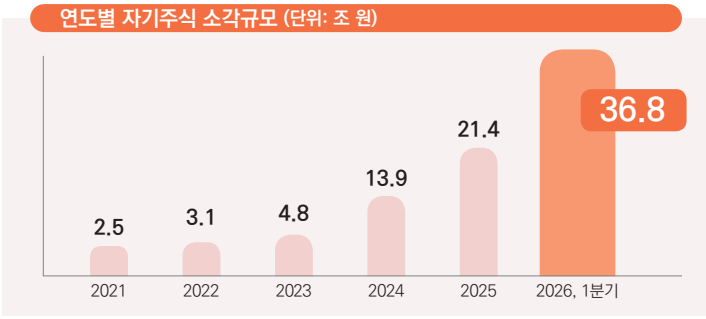


0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일련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증시를 따라다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1984년 KOSPI 지수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초의 7,000 시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증시 시가총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7,000조를 돌파(2026년 5월 11일)하며, 세계 7위권의 주식시장 규모에 도달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증시는 "한국 증시는 주가조작 세력의 투기판 같다.", "일반주주의 권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시장신뢰, 일반주주 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2025년 7월 22일, 1차 「상법」)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2026년 3월 6일, 3차 「상법」)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제한되고, 기업의 대표적 주주환원 수단인 자기주식 소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자기주식 소각규모는 약 21.4조원으로 2020~2024년 5년 평균 소각규모(5.1조원)의 4배에 이릅니다. 2026년에도 기업의 소각 움직임은 계속되어 1분기 동안 36.8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일반주주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병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2025년 7월) 및 확대 개편(2026년 1월, 1팀 → 2팀)으로 1,000억원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 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탐지·적발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과징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 위반 시 퇴출)'으로 엄벌하였습니다.

실제로 개인기반 감시체계 구축에 따라 시장감시·분석대상이 기존 대비 약 53.9% 감소*하여 불공정거래 감시 효율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시장감시 대상 감소율 = [(계좌수-감시대상 개인수)/계좌수]×100

앞으로도 포상금 상한폐지 등 신고 포상금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투자원금까지 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공정·투명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주식시장 구조개편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모험자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2026년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전격 도입 및 기술심사 전문성 강화 등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기조를 통해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의 역동적인 시장구조를 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전주, 저시가총액, 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2026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등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이 기존에는 코스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코스닥을 일정비율 추가하여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시 비합리적 공모가 과열과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IPO 풋백옵션(일정기간 IPO 주관 증권사에 정해진 가격에 공모주를 팔 수 있는 권리)의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혁신기업이 단계별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코넥스 시장의 초기 상장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을 우량기업 중심으로 별도 관리하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운영' 등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



자본시장 간담회
(2026년 3월 18일)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마련(2026년 1월)하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활성화*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였으며(2026년 2월), 한국거래소의 지수 기반 파생상품을 미국에 신규 상장(2026년 2월)하는 등 로드맵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시 외환거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2026년 7월)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2027년 본운영)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개혁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로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개시(하나증권-홍콩 Emperor증권, 2025년 10월) 및 국내 7개 이상 증권사가 통합계좌 출시를 준비 중(3개사는 상반기 출시 전망)

또한, 혁신·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등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강화하였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은 일몰이 도래했으나 2028년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한도도 평생 3천만원 한도를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IPO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물량의 25%를 우선배정하도록 혜택을 부여 중인데, 이 규모를 30%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발전 선순환 조성 목적을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 혁신 정책 추진과 함께 기업의 정책 호응과 체질 개선 노력 등이 더해져 한국증시는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을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 목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1984년 도입된 KOSPI 지수는 그간 2,000~3,000선에 머물렀으나,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로 사상 최초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증시 시가총액 역시 사상 최초로 7,000조를 달성(2026년 5월 11일)하며, 세계 7위권의 증시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완수하겠습니다.

0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디지털자산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업자와 시장 및 이용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토큰증권 법제화를 통한 사업자금의 조달 활성화 및 투자자 편의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토큰증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감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 송금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금융·실물 부문 간 접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자산을 통해 경제·금융 내 혁신 기회를 확장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이재명정부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및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금지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2025년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어 결제, 송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및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디지털지급수단이 도입되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토큰증권-1



토큰증권-2



토큰증권의 법제화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2026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토큰증권법」은 기술·인프라 구축 및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2026년 3월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켰고 기술 및 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제도를 설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블록체인 내 온체인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큰증권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토큰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III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Chapter. 03

- 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전략 3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전략 4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0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방주도의 균형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북·제주·강원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확대하는 등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 나주 에너지·오송 제3생명과학 등 첨단 국가산단 계획 승인,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확대, 투자선도지구 선정(2025년 8월 5곳 추가 선정)도 확대해 중소도시의 자생력과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공간을 중부권(충청권), 호남권(광주전남권), 대경권(대구경북권), 동남권(부울경권)을 포함한 5극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마련하였고, 비수도권을 수도권과 동등한 성장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5극 3특 성장지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역주도 성장기반 마련

정부는 그간 전례 없는 시·도 통합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국가성장 패러다임을 지방 주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정부는 대국민브리핑을 통해 시·도 통합에 연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2차 공공기관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로 발의된 총 9건의 법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농림수산·인재육성 및 복지 등 6개 분야, 385개의 특례가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2026년 3월 5일 공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일 출범할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17만명(전국 5위),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전국 3위)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워크숍
(2026년 3월 25일)



한편, 광역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 별도 조직 없이 연계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으며, 100만 대도시를 지역 주도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5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단체입니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시· 도 사무의 이양, 국가공무원 파견근거 신설, 의회 활성화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제주·강원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특화발전 지원

‘특별자치도’는 일반 시·도와 차별화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북·제주·강원 특별자치도가 광역경제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북은 농생명지구 의료기관 비전속진료 등 29개 특례, 강원은 평창올림픽 시설 양여 등 38개 특례를 추가 반영(「전북·강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3월 31일)하였으며, 제주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관련 권한 이양 등 3개 특례를 추가 반영(「제주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특화발전 특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거점 조성 및 광역교통망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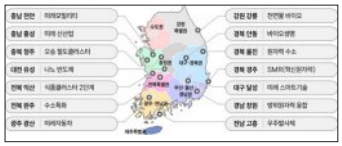
지역 혁신거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광역권 개발 및 성장지원 특별법」 발의(2026년 1월) 및 제정 지원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국가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5극 3특 육성 전략을 반영하여 2026년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프라 격차 해소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2025년 4월), 시행(2025년 10월)을 통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였으며, 맞춤형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도 연내에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충청권광역

급행철도(CTX) 등 권역별 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잇달아 통과하였습니다.

첨단국가산단 대상지



기업형 첨단도시 개념도



첨단산단 등 일자리 거점 육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나주 에너지(2025년 7월), 오송 제3생명과학(2025년 8월) 국가산단의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고흥 우주발사체, 울진 원자력·수소 등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곳도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재생사업을 2025년 11월 2곳(김해 덕암, 동두천1산단)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혁신공간 조성 및 기업 지방투자·이전지원 확대

5극 3특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지방 거점도시 기반으로,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관리하여, 혁신·산업을 집적하면서 도시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두텁게 지원하고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2026년 2월)하였습니다.

지역 첨단산업 및 기업 수요에 맞춘 석·박사 지역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2026년 3월 비수도권 대학원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으로 최종 6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북·제주·강원 특화 성장지역 조성

전북은 재생에너지/수소/로봇/식품산업 등 주력·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 성장 기반을 내실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권 주요 핵심사업인 춘천기업혁신파크는 2026년 승인을 목표로 통합개발계획 수립절차에 본격 착수하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 연장은 지난해 타당성 검증을 완료(2025년 12월)하여 수도권 1시간 교통망 구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제주권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계획 재수립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의료 및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중소도시 육성 지원

중소도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선도지구' 5곳을 새롭게 선정(2025년 8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10건을 체결(2025년 12월)하여 현장 중심의 균형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쇠퇴하는 지방도시에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51곳을 선정(2025년 9월, 12월)하였으며, 도심 내 방치된 빈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5년 10월)하고 관련 특별법을 발의(2025년 12월)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벨트 육성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축이 될 5극 3특 권역별 초광역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의 소통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정책과 지역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하여 성장엔진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초광역권 단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권 개발 및 성장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획 정비 등 견고한 제도적 기반 위에 지역 거점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MICE 복합단지
투자선도지구 조감도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현장 전경



0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에 행정·입법 핵심기능이 담길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고,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대내외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이 될 자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행정수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착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준비하는 한편,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공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상징구역 조성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종합계획도 (2025년 12월 22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가중추기능 확충의 핵심 사업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6년 1월 전담조직을 신설해 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초 2030년 5월이던 입주 목표를 2029년 8월로 앞당겨 조기 완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기능의 핵심이 될 국회세종의사당도 2025년 11월 국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1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5월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공간 배치와 기능 구체화 등 종합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6년 2월 전문가(22명)와 시민(50명)으로 구성된 72명의 국민자문단 '모두랑'을 발족해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4월 세종·대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주요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모두랑 공간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한 행정수도 교통인프라 구축

서울 1시간, 전국 주요 도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행정수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11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Chungcheong Train Express)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교통망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세종·대전·충남·충북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외삼~유성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전용차로 설치,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개량, 신동·둔곡지구 정류장 신설 등을 통해 대전 BRT 노선을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을 마련하여 2026년 1월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도로·BRT 연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와 행정수도 간 접근성을 높이고, 충청권 광역생활권을 잇는 교통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CTX 사업 노선도
(2025년 11월 4일)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 발표자료,
2026년 3월 18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족기능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복합캠퍼스 기본구상안을 2025년 12월 수립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등 헌법기관 이전을 포함한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효적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의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을 연계해 도시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병행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국토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0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2026년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100%(RE100, Renewable Energy 100) 산단 조성 전담조직(TF, Task Force) 신설, '3대 위기업종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 등 국토 각 지역의 거점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투자와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역의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질적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혁신도시·새만금·남부산업벨트 등을 정주여건을 갖춘 국가 균형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정주여건 개선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20여 년 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연내 2차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각 소관부처, 지방정부, 이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올해(2026년) 내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차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행 증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내실 있는 거점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인프라 확충 및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새만금은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형) 혁신성장 거점'을 목표로 기업의 투자 및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간연결도로는 새만금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2축도로와 관광용지를 연결하는 20.37km의 순환형 도로로, 2030년에 도로가 개통되면 국가산단·수변도시·관광용지 등 새만금 내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2025년 1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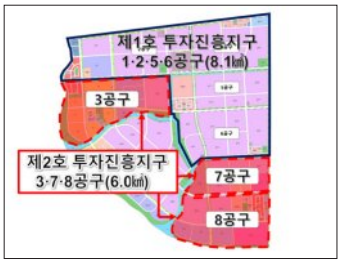
또한 RE100산단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TF, Task Force)을 신설(RE100신속추진단)하였으며,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한수원·전북도와 전력계통연계설비 적기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법인세 3년 면제, 2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약 6㎢)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만금에 동서·남북 3×3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간선관로, RE100 시범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전력시설·스마트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을 로봇, AI, 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2월 현대차 그룹과 약 9조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민간의 첫 대규모 지방투자로서 실질적인 지역 성장 효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2026년 3월 25일)



남부산업벨트 조성

3대 위기업종인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2025년 8월 20일)하여 구조개편의 방향, 정부 지원원칙을 포함한 구조개편의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2025년 12월 30일)하였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첫 사업재편으로 승인하여 금융과 세제 등 2조원 이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2025년 11월 4일)하고, 2026년부터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2026년부터 4년간 총 8,146억원)을 추진하여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의 경우,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2025년 11월 28일)하여 미래 핵심 기반 산업인 이차전지의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산업인 서산(2025년 8월)과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포항(2025년 8월), 광양(2025년 11월)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원활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의 지역 확산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내 산업단지 AX 분과를 출범(2026년 .2월 26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개별기업의 AI 도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시작으로 전국 혁신도시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화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2026년 2월 25일)



0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특별계정, 균형성장영향평가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재정분권 방안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26년 3월), 자치입법권 보장 및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핵심 전제이나, 중앙 중심의 권한 구조와 제한적인 자치 역량으로 인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국가-지방 및 지방-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와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5년 11월 12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확립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025년 9월 30일 발의)이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하여 5극 3특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별계정', '균형성장영향평가'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우선 편성 등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이 실시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시대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재개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2025년 11월)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1명에서 3명(시·군·구청장 각 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

도록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상의 위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적·침익적 분야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

지금까지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으로만 다루어져, 지방의회의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엠브레인, 2025년 6월) 콘퍼런스·토론회·세미나 등 여러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완료하여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콘퍼런스
(2025년 11월 19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권 확대·강화

그동안 시범 실시에 머물러 있던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2026년 3월, 국회 본회의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의 가치와 실천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2025년 11월)하였으며, 권역별 토론회(2026년 1~2월, 총 4회)를 통해 약 50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민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권 연령 하향(19세→18세), 개표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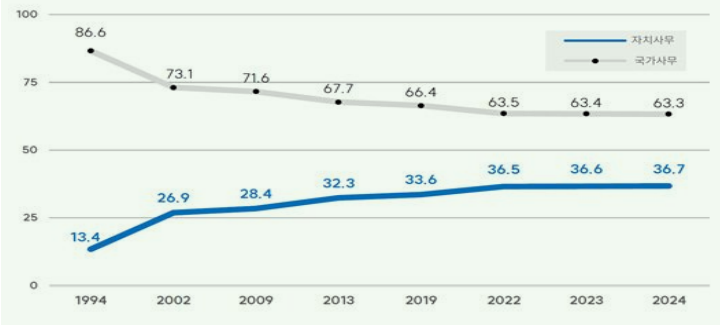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
(2025년11월 20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그간 역대 정부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총 4,757개 사무 이양을 확정하고, 3,633개의 사무를 이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중은 63.3:36.7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체감도 높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장기미이양사무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이양 사무 800여 건을 발굴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양 사무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사무-자치사무 비중 추이



한편,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심의기구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례 부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등 지역·주민 주도의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전담조직(TF)'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민 대상으로 총 13.5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의무화 및 국비지원(2025년 추경 1조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특회계 포괄보조의 규모를 10.6조원으로 약 3배 늘렸습니다.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낮은 재정자립도, 중앙 주도의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재정운용이 어려웠습니다.

■ 재정자립도(%) : (1995년) 63.5 → (2005년) 56.2 → (2015년) 50.6 → (2025년) 48.6

■ 연평균 예산 증가율(%, 2021년~2025년) : (지방예산) 4.8 < (국고보조) 7.2

이에 이재명정부는 자주재정 확대 및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재정분권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2025년 11월)에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관계부처(행안부, 재경부, 교육부, 기획처, 국조실)와 민간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2026년 1월 출범)'를 통해 국세-지방세 7:3 조정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마련하고,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새정부 출범 당시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에 머무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총 13.5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3.3%는 기존 연구사례인

소비쿠폰, 민생경제 활력





지역사랑상품권



20~3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비쿠폰 설계 방식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심리지수,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도 소비쿠폰 지급 이후 개선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5년 11월 112.4, 8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도 1.3%로, 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및 발행규모 대폭 확대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2025년 8월 4일)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조 1,500억원의 국비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여 연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창의적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상·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2023년 3,525억원 → 2024년 3,000억원→ 2025년 1조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정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유형별로 할인율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 더 높은 할인율,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보충성·포괄성 원칙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2026년 본예산에서, 지방의 여건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의 규모가 2025년 3.8조원에서 2026년 10.6조원으로 약 3배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포괄보조의 사업개수도 2025년 47개에서 2026년 121개로 74개 늘렸습니다.

2026년 1월 발표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지방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국민이 지방재정 주요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재정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페이지로 공개하였습니다.('한눈에 보는 지방재정(At a glance)' 서비스 오픈, 2025년 11월) 또한,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수립·배포(2026년 2월 27일)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3월 3~4주)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였습니다.(2026년 1월 28일, 지방재정365 누리집 게시)

「지방회계법」 개정(2025년 12월 9일)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 차이도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243개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면 진단(2025년 12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이 2024년 29.4% 대비 2025년 85.1%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191개 지방정부가 목표 80% 이상을 달성하였고 13개 지방정부는 100%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재정분권 범정부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방세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역성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쿠폰의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제2차 공유재산 정책협의회
(2025년 8월 28일)



0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율 상향(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6.5% → 33%)과 민간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연간 모금액 1,515억원을 달성(2024년 879억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의 실생활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생활인구등록제'를 시행하였으며, 복수주소제도 마련 중입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구성하여, 지방 우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격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일자리·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소멸위기지역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 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0년간(2022~2031년) 연 1조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은 기금 시행 5년 차를 맞이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배분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2026년 4월 9일)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계획 평가결과 우수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절 계기 고향사랑 기부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2025년 1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세액공제율의 2배에 해당하는 33%로 혜택을 확대(2025년 6월)및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4%로 확대(2026년 1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역대 최고 모금액 1,51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그중 1,397억원(전체 모금액 중 92.2%)이 비수도권에 기부되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 답례품 매출은 2025년 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며, 지역특산품 소비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기부접점 확대를 위해 10개의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개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기부 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외도서지역의 신속항로 개설 지원, 휴양콘도미니엄업·작은도서관 등록기준 완화 등 59건의 특례를 법제화하였습니다.(2025년 10월 2일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시행)

또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제화하고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고시(2026년 1월 1일)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지방소멸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업 간 상생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마트24'와 산청, 하동군 특산물 활용한 간편식 5종, '오뚜기㈜'와 영양군 고추를 활용한 열라면 출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의령군-'기아(KIA)'와 협력하여 인구감소지역 식품사막화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2026년 3월 24일)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실생활권 기반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 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하고 등록된 생활인구대상 주요 정보 및 숙박·교통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인구 등록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마련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제공(2025년 8월 25일)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수주소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시범 사업 및 전국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소멸정도 등에 기반한 차등 지원체계 정립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지방우대의 일반적 기준인 지방우대지

수를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7년 예산안 편성지침 내 지방우대지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사업 등 특례 발굴 및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에 대한 충분한 우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에서 우선 지원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우대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Compact City) 단계적 도입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권 단위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집약형 도시(마을) 시범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13개 지역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2개 지역의 인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례지원 등을 통해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2024년 12월 대비 2026년 3월 기준). 정부는 시설조성 중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력 제고 사업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향을 전환하고, 고향사랑기부 법인기부 도입 및 민간플랫폼 확대,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지방우대 특례 발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활력을 찾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을 2026년 8,855억원으로 2025년 4,242억원 대비 2배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대학과 인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AI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교육 혁신이 요구되나, 지역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인프라 노후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급감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지역과 교육의 공동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학교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업부터 취·창업 및 지역 정주를 함께 지원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기반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하였습니다(2025년 9월).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2025년 4,242억원 → 2026년 8,855억원) 성장엔진 산업분야에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거점국립대가 양성한 산업계 인재가 지역에서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11.6% 상승(2025학년도 5.9:1 → 2026학년도 6.5:1)하여, 수도권(2.3%) 대비 높은 상승 수치를 보였습니다.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을 국토공간 대전환 핵심과제로 확정하고(2026년 2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2026년 4월). 향후 성장엔진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신설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학부 연 1,000명 내외, 대학원 연 500명 내외).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RISE체계 재구조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의 청년이 지역에 닻(앵커)을 내리고 정착하여 ‘대학 진학-취업-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중앙·지방정부·대학·기업이 함께 구축하기 위해 2026년 2조 1,403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2026년 2월, 지방정부의 대학 육성과 인재 양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7개 지방정부는 시·도청에 대학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맞춤형 지역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추진한 고등교육 투자의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2026년 4,000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 단위(5극3특)로 대학 간 연합체계(공유대학)를 구축(2026년 1,200억원)하고, 전략산업 분야의 지방정부-기업-대학 인재양성 모델을 발굴해 지원(2026년 800억원)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지역기업-지자체-교육청 및 특성화고가 협약을 맺어 지역의 전략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2025년 6월, 10개교 추가 지정)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업맞춤형 직무교육과 채용연계를 지원하여 2026년 2월 기준, 1,196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88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2026년 1월)을 통해 일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문교과(특성화고 선택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2025년 12월 기준, 총 13개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포함한 26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생애학습 캠퍼스' 및 '개방형 전문대학' 모델을 포함하여(2026년 4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지원 강화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2025년 12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학교 주도로 학생들에게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된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을 32개 선정(2025년 7월)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총 66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2025년 133억원 규모)하고, 458개 대학 창업기업에 1,169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기준).

학교기업 연도별 지원개수(누적)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

학교 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인 학교복합시설 17개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2026년 4월).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 발생하고 있는 폐교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2025년 10월)하였으며, 농어촌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212개교) 및 농어촌 우수 학교(15개교) 선정을 통해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정부는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이룸캠프(학교복합시설)



0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 해운선사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 기반을 조성하고,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유치, 특별법 제정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적 선대 확충 및 수출입 물류 지원을 통해 역대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43만TEU, 전년 대비 28% 증가)을 달성하였습니다.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착공, 친환경 선박 지원 등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불안정한 국제정세, 친환경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 급변으로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 역량 강화로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신속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 경영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국가 해상수송력 확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로 새로운 무역로 선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2025년 12월), 해운 대기업 2개사(SK해운, 에이치라인(H-Line)) 본사 부산 이전(2026년 1월)으로 해양수도권(부산·울산·경남)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5년 11월)하여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2025년 12월 공식 출범시켰으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6년 5월)되어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2025년 12월 23일)



유엔해양총회 국내 유치
(2025년 12월 9일)



한편, 북극해 기초자료 확보에 앞장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을 체결(2025년 7월)하여 극지 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행사인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UN Ocean Conference, 2028년)를 성공적으로 칠레와 공동 유치(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1만 5천명의 전문가와 리더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으로, 북극항로 글로벌 의제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북극항로에 따른 스마트·친환경 거점항만 조성

선박 대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극항로 활성화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역대 최대 규모(12.6조원) 항만 개

발사업인 '부산항 진해신항'을 본격 착공(2025년 7월)하였습니다. 완공 시 부산항 하역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착공(2025년 12월)으로 K-스마트항만 장비 생산 실적을 축적하여,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감도



해운경쟁력 강화로 수출입 물류 경제안보 실현

글로벌 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펀드 규모를 확대(1→2조원)하여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국적선사의 경영안전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수립(2025년 12월)하고, 선박 신조·도입을 지원하여 2025년 국적 원양선사 선복량은 역대 최고수준(143만TEU, 전년 대비 28%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해운분야 친환경 전환 요구에 대응하여 2025년 민간·공공선박 총 45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하여 싱가포르, 덴마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2025년 11월)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6년 3월)하여 친환경 해운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 바다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Starlink) 등 도입을 지원(300척)하고, 원격의료장비 설치 선박도 확대(20척→40척)하여 선원 처우개선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해운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 조감도



친환경 공공선박 무궁화43호
(2025년 12월 3일)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 기반 마련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익과 미국측의 조선업 재건 수요를 종합 고려한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선박 건조 협력, AI 조선소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협력 브랜드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개발하여, 조선업을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 협력분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스가(MASGA) 모자
(2025년 8월 4일)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차질없는 유엔해양총회 개최 준비 등을 통해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국가 수출입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친환경 거점항만 조성,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조선 분야 인공지능 전환(M.AX) 등으로 미래 해운·항만 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0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 등을 개통하여 전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거점공항 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을 정상(2025년 목표 전체 공정률 70% 달성) 추진하였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과 함께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혼잡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제도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권은 교통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지역 간 균형성장과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GTX 노선도



5극 3특 광역도시권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철도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2025년 7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5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개통 시 지방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방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실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B는 2025년 8월 전 구간 착공하였으며, GTX-C는 공사비 문제를 해소하고 착공을 추진 중으로, GTX 완성 시 수도권 전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 관문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지역별 거점 공항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5년 목표 공정률인 70%를 달성하였으며, 완공 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서울-울릉도 기준, 7시간 → 1시간)되어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독도 영유권 수호 등 해양영토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기본설계중(2026년 3월~9월)으로, 2026년 말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민·군 공동 사용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민·군 통합설계·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공항 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공항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마련(2025년 12월)하고, 전담 조직인 '글로벌공항협력센터'를 출범(2026년 3월)하였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기본계획
(2025년 12월 19일)



철도·고속도로망 확충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간선철도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4x4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보성~임성리 개통으로 목포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권 간선철도망을 완성하여 운행시간을 당초 6시간 50분에서 4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균형성장을 위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8km)도 2026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개통 시 서울~거제까지 기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동서교통망 구축과 동해안권 광역경제권 연결을 위하여 2025년 11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새만금에서 전주 간 당초 76분 거리를 33분으로 단축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하고, 또한 포항-영덕 간 당초 42분 거리를 19분으로 단축하여 동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철도, 도로 위 서비스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SR 통합에 착수하였고 현재 KTX와 SRT를 연결한 운행을 통해 좌석은 늘리고 KTX 운임은 낮췄습니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2025년 9월 26일)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2026년 2월 6일)



포항-영덕 개통식
(2025년 11월 7일)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순차 착수하는 등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 대전, 안산 3개소의 우선 추진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확정되었고 2025년 8월에는 용인-과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식
(2026년 3월 6일)



경부지하고속도로 조감도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체계적으로 완화하여 출퇴근 단축 등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5개년(2026년~2030년) '혼잡도로 개선계획'(2026년 2월)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자체가 트램 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2026년 1월)하였습니다.

국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노선에 대하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교통 서비스 운영비 절감 정책 역량 지원을 위하여 '수요응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정부는 광역철도 확충과 GTX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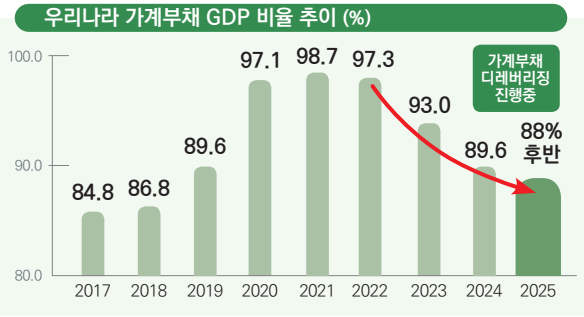
또한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거점 공항 건설과 남부내륙철도 착공, 주요 고속도로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 고속·시외 필수노선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정부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유지 및 가계채무부담 절감 노력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이후 지속 하락 중입니다.
더불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부담을 상승시키는 등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은 금리 인하, 주택시장 과열 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고, 가계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상환능력 범위 내 여신관행 정착, 건전성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을 매월 점검하여 발표하고(2026년 1월 14일, 2월 11일, 3월 11일), 필요한 경우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2026년 1월 14일) 정부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유지 및 가계채무부담 절감 노력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이후 지속 하락 중입니다.

2024~2025년 금리 인하 국면, 주택시장 과열 양상 등 외부적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고, 개인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이 지속되고 있어 고강도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금융권 차입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다주택자 등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2025년 6월)하였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제한(2026년 4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상환능력 범위 내 여신관행 정착으로 가계채무부담 절감

상환능력 범위 내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2025년 7월부터 시행하여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 등 전체 업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소유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계채무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DSR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기업과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은행권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부담을 상승시키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시행(2026년 1월)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분에 대해 위험가중치(RW)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됨으로써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자본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본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분야 대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산업을 자기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제고방안을 담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을 발표(2025년 12월)하였고,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2026년 4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및 대출제한 규제를 일정 기간(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스트레스 DSR의 확대 시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계 부문 채무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소비 여력 확충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0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금융권과 함께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을 통해 총 8.4조원,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은 여전히 과도한 채무부담과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행했으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경감, 금융접근성 확대 등 맞춤형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비용 경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2025년 9월 4일)



이재명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시장경쟁 촉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2025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상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❶ 기준금리	❷가산금리							❸가감조정금리 (우대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기타	
	업무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교육세 출연금	목표 이익률	

아울러, 2025년 9월 소상공인 간담회를 계기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개시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대상 및 항목 확대 등 제도를 개편(2025년 11월)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을 전체 결제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총 결제수수료 중심에서 자체수취 수수료

와 외부수취 수수료를 구분 공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금리산정의 적정성과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환대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안착 여부와 이용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은 결제수수료 구성요소를 명확히 드러내고 비교 대상을 확대하여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

이재명정부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민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효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2026년 1월)하고, 실질 금리를 한 자릿수대로 인하하였습니다(햇살론 특례보증 15.9% → 9.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5.9% → 6.3%). 또한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자금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의 신상품을 출시(2026년 3월)하였습니다.

*(민간+정부)근로자햇살론+(민간)햇살론뱅크 → (민간)햇살론일반보증 통합

(민간+정부)햇살론15+(정부)최저신용자특례보증 → (정부)햇살론특례보증 통합

또한, 은행권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전년대비 +20% 증가한 5.1조원(2026년)을 공급하는 한편,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민간 차원의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 목표비중(신규취급액): 2025년 30% → 2028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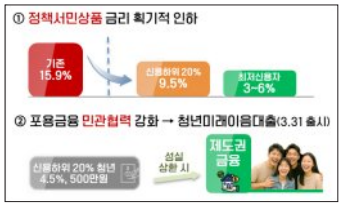
아울러, 장기소액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여 총 293만 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되었으며, 은행 점포 폐쇄 가속화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특례를 부여(2025년 12월)하였습니다.

〈"200점대 인생을 980점으로"... 신용회복지원이 바꾼 삶, 2026년 2월.13일,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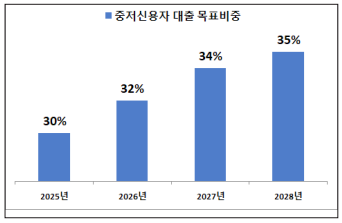
신용사면(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인해, 성실하게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200점대 신용점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900점대로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성실상환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공급기반 확립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대리업 사업을 본격 실시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문턱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확대를 독려하고,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 체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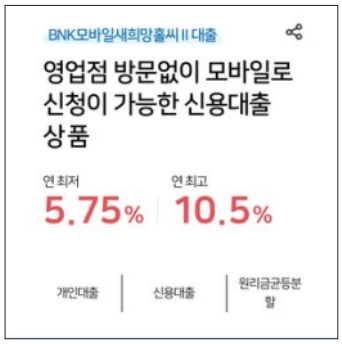
서민 등 금융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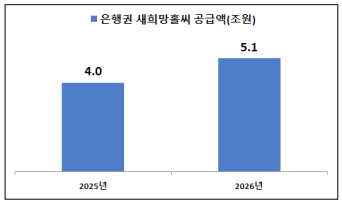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비중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액(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이재명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연체자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을 출범(2025년 10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총 8.4조원, 66만명의 채권을 매입하고,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보유채권 1.8조원을 소각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2026년 4월말 기준).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대상범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기존) '20.4월~'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 지원규모 : 취약차주의 원금감면 확대 (기존 최대 80%→개선 90%), 상환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0년 → 개선 20년)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은 연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 은행권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소상공인 119plus)을 통해 총 4,308억원 규모(2026년 2월 기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애로를 적극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포용적 금융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홍보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채무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출범식
(2025년 10월 1일)



새출발기금



0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통신 3사 데이터안심옵션 확대 및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법제화, 알뜰폰 1천만 회선 돌파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과 통신비 경감을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모두의카드'를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2026년 4월)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맞벌이 부부 각각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과 선제적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통해 주거 및 먹거리 물가를 2.0%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개편 및 기대효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신·교통·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정부는 품목별 수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계 사정을 개선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AI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비 부담 경감

정부는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2026년 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서비스 품질, QoS, Quaility of Service)'을 포함하여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어,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사 대비 40% 이상 저렴한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 결과, 2025년 12월에는 알뜰폰 이용자가 처음으로 1천만 회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전 국민 대중교통비 및 서민 주거비 등 부담 완화

K-패스를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카드'로 전면 확대 개편(2026년 1월)하여 월평균 대중교통비 환급액(3인 가구 기준)이 27.3%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시 2년여 만에 500만명의 이용자를 돌파하였습니다.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전국 229개 전 기초지자체가 사업에 동참하는 등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월평균 환급액: 2025년 16,500원 → 2026년 21,000원



2025년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 각각에게 월세 세액 공제를 허용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최대 50만원씩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2026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부터 신규 수혜자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비용부담 완화

2025년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식품 분야의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2026년 설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의 적정 물량을 선제적으로 비축 및 방출하고, 전국 200여 개 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2026년 설 차례상 비용은 전년 대비 0.3% 하락한 20만 2,691원으로 억제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2.4%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1월에서 3월까지 연속으로 물가안정목표(2.0%)에 안착하며 하향 안정세에 진입하였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026년 2월 9일)



부총리 대전 주유소 현장방문
(2026년 3월 6일)



컨트롤타워 가동 등 범부처 역량 총동원

정부는 수시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밀착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6년 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출범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핵심 품목의 실질적인 가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026년 3월 6일 대전의 주유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철저한 시장 질서 확립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모두의카드' 500만명 돌파, 물가 상승률 2.0% 안착 등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가계 사정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현장 중심의 민생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모아, 가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상생 페이백, 범부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소비촉진 정책과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병행한 결과, 약 20조원 이상의 소비촉진 효과를 견인하였고, 2025년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도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징후 조기포착부터 재기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제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통해 로컬 창업 → 성장 → 확산의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간 원자재 가격 상승부터 소비심리 위축 등 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4년 폐업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사업자를 돌파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부채) 자영업자 연체율이 '21년 이후 지속 상승 추세('21년 0.52% → '23년 0.69% → '25년 1.86%)

■ (소상공인경기동향) '25년 평균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는 66.8p기록, 전년 比 7.6p상승

이에 이재명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10회)
(2025년 10월 15일)



빚 걱정 없이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지원(2025년 약 7천개사·1,700억원)하고, 2만 9천개사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금리감면·신규대출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약 12만개사에 정책자금 4조 2천억원, 약 79만 7천개사에 보증 28조 4천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며, 금융 문턱은 낮추는 '체감형 금융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한 번에 OK,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2025년 10차례의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2025년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위기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시중은행(17개사)이 협력하여 위기 소상공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 운영 발표
(2026년 3월 31일)



인을 조기 발굴·지원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재기지원)·서민금융진흥원(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생계비 지원) 3개 기관의 협력체계를 완성하여 정부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밀착형 재기·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2026년 1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전국 78개소로 2.6배 확대하였습니다.

경영부담 DOWN!, 든든한 지원으로 살아나는 생업현장

고정비 부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경영 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디지털 포인트를 제공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53만개사에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배달·택배비'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여 총 361만개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구 부담경감 크레딧)를 신속 추진하여 접수 4일만에 신청 건수가 170만 건을 돌파하고, 약 100만명에 2,5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설 명절 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화재공제 보상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2025년 12월)하여 지원 대상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2027년 시행)하는 등 생업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 다시 활짝!, 상권 르네상스 2.0

2026년 4월 동행축제 계획발표
(2026년 4월 6일)



2025년에는 전국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약 20조원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생페이백'은 1,564만 명이 신청하며 전 국민적 호응 속에 17조 7,972억원의 소비 증가를 견인하였고, 학습형 챗봇 도입 등 편의성 개선을 더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5% 증가한 2조 8,908억원, 앱 회원 수는 2026년 4월 말 기준 1,743만명으로 2025년 4월 176만명 대비 약 9.9배 확대되었습니다. 10개 부처·3만 7천개 유통사가 참여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최초 개최에도 5조 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범국가적 내수 진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2026년 4월에도 3.3만개사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비진작을 넘어 지역상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3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로컬기업 1천개사 육성 등 로컬창업 촉진·상권 집적·전국 확산·제도 기반 강화 등 4대 방향의 입체적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디지털로 무장한 K-소상공인, 세계를 무대로

보호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육성 두 방향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2025년에는 소상공인 8만개사의 온라인 진출과 1만개 상점의 스마트 기술 보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 융자 프로그램 투자사를 기존 대비 2배인 60개사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투자저변을 넓히고, AI 활용 교육 및 디지털 확산 등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이재명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경영부담 완화부터 재기지원, 성장지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넘어 성장하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2025년 8월 25일)



강한소상공인 상생ON페어
(2025년 12월 11일)



0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서울·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 도심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6만호 공급 등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 및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선호 입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위축된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여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발표하고,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총 135만호, 연 27만호 신규 주택 공급(착공)하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년 9월 7일)을 마련하고,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년 1월 29일)을 발표하였고, 2025년 61,835호(공공분양 33,313호, 공공임대 28,522호)의 공공주택을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공공부문 착공실적은 상승 반전하였고, 2026년에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 또한 2024년 0.5만호에서 2025년 2.2만호로 1.7만호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2.9만호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준비되는 대로 추가 물량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간 주택 신속공급 제도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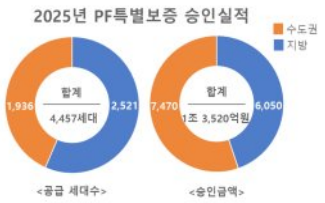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주택법」을 개정(2026년 2월)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운영(2025년 11월)하여 현재까지 약 3천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공이 선투자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개발 앵커리츠를 도입(2025년 7월)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출자한 개발 앵커리츠가 착공 전 단기대출(브릿지론)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

로, 역량 있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최종 2곳을 선정(2025년 11월)하고, 개발 앵커리츠의 설립도 완료(2025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2조원 규모의 중소건설사 특별보증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등 2025년까지 1조 3,520억원의 PF 보증을 승인하였습니다.

'25년 PF특별보증 승인 실적



공공성 기반 정비사업 활성화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 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2025년 9월)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자금융자 지원대상 확대, 한도상향(최대 60억원) 및 이자율을 인하(2.2%) 하고(2025년 10월), '26년 특판상품(이자율 1%, HUG 보증료 0.2~0.4%)을 출시하여 시행자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6천만 원 → 7.5천만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2025년 10월)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융자 상품 홍보자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심 내 우수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복합개발하여 2030년까지 2.8만호를 공급('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년 9월 7일)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만호(34개 소)의 세부 사업지를 구체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년 1월 29일)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방문 및 주민·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여 총 7곳의 복합지구를 신규 지정*하였고, 인허가 속도제고 및 추가 인센티브 적용과 일몰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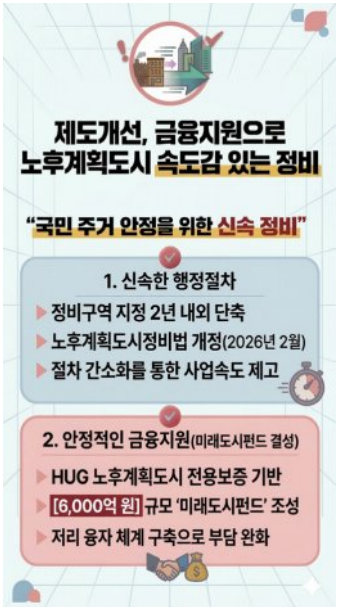
* 수유(2025년 8월), 용마산역·상봉역·창2동(2025년 10월), 불광2·고덕역·영등포역(2025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법정 계획 수립, 국가 직접 사업승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2025년 12월)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펀드 홍보자료



3기 신도시 등 개발 조기화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3기 신도시 첫 공급(남양주왕숙 1,030호, 2025년 7월)을 개시하고, 해당 지구에 2025년 11월 추가로 881호를 공급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팀을 구성(2025년 10월)하였고, 광명시흥 보상계획 공고(2025년 8월)로 신속한 주택착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최초 입주(인천계양, 2026년 12월)와 2026년 내 3기 신도시 7,500호 분양*으로 수도권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양창릉(3,881호), 인천계양(1,290호), 부천대장(498호), 남양주왕숙(379호), 남양주왕숙2(1,489호)

이재명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2026년 2월)하였고, 통상 30개월이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8개 선도지구의 경우, 단 6개월만에 신속하게 완료하여 행정 기간을 약 24개월 단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보증을 기반으로 6,000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신축아파트 사전방문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방문 대상에 입주예정자 외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주택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지자체(시·도)에서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2025년 9월)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하자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가 자격요건·장비 등 전문성 있는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서울·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 착공"이라는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공공부문 착공실적의 상승 반전(2025년 61,835호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구현하고, 중산층·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보호 강화를 위해 쪽방촌 재정비, 주거상향 강화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며, 임차인 보호,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부동산 이상거래 정밀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 등 다변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을 추진(2025년 7월)하고 있고, 육아친화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양육특화시설을 복합화한 육아친화플랫폼의 2026년 건설비 예산(38.2억원/개소, 10개소)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조감도



초기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부담이 적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2026년 1월)하였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하여 보다 많은 청년세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확대

고령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충격완화바닥재, 안전손잡이 등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자복지주택을 3,087호 공급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통해 응급관리, 돌봄·가사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조감도



또한, 은퇴자 등 고령자가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공공임대를 맞춤형 디자인, 조명, 동작감지센서 등 안전시설을 적용하여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1,048호)하고, 고령자가 안

'25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시행계획
(2025년 4월 30일)



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에 맞춘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주거지도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입주 관리를 일원화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상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25년 8월 1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시행), 2026년 구축 사업 예산 2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공공임대 입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하반기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24년 62개소 → '25년 66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보호 강화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이사비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대출한도를 최대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원활한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이 재정비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96호)를 제공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급식·생필품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평형 상향 등 쪽방 주민의 주거품질을 개선하고 소유주의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여 신속한 사업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영구·국민임대 개선)

이재명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호 노후 영구임대 등 재건축을 2025년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2026년) 서울 하계5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

택을 8,424호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하여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였고,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항력 시기를 전입신고 익일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등 사후 구제 중심의 정책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이 정보를 알기 어려워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2025년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설명하는 의무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을 제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탁원부 제시 및 확인·설명 의무화 법률 개정



부동산 이상거래 정밀조사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획부동산·허위 정보, 직거래 허위 매물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2026년 5월 본회의 의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1,729건의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6,253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각 관계기관별로 국세청 1,793건, 금융위·행안부 420건, 관세청 59건, 법무부 22건 등을 통보하였고 전세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의심거래 건 142건을 경찰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화·고도화되는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741호)를 포함한 특화주택 6,357호 선정하였고, 고령자복지주택(3,087호)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기한인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하여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심 추가 물량을 지속 발굴·발표할 계획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추진(2026년 3월~7월)하고 있으며,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설명 의무화 법률 개정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0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구글(Google)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포함한 동의의결안 최종확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가 경쟁 및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까지 확대하여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4건에 대해서는 약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하였습니다. 식료품 분야에서의 담합 적발 효과가 기초 먹거리 가격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플랫폼 독과점화 방지 및 AI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 사안에 대한 감시·대응 필요성저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가맹점주 등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경쟁을 촉진하고, AI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 적발을 통해 해당 효과가 기초 먹거리 가격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

"공정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동의의결 최종 확정"
(2025년 11월 27일 보도)



구글(Google)이 유튜브 동영상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2025년 11월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한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가 신속하게 확립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및 수급사업자 사업활동 여건 개선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등록제 도입 및 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2025년 11월)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6년 2월)하여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가 제3의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6년 2월)하여 연동제 적용 대상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2025년 11월 21일)



사익편취 근절 등 부당 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총수 2세 회사 지원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증대 행위, 부실계열사 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 4건(기업집단 중흥건설, 씨제이, 우미건설, 에이치디씨)을 적발하여 약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담합기업 엄중 제재, 기초먹거리 가격 최대 26.5% 인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여 설탕·밀가루·전분당 품목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설탕 3사에 대해서는 역대급 수준인 3,960억 원의 과징금 부과까지 완료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탕 26.5%, 밀가루 최대 8.1%, 전분당 최대 20.5%에 이르는 자발적 가격 인하가 나타났고, 이를 기반으로 담합 적발 효과가 기초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자·라면 2.9~14.6%, 빙과류 8.2~13.4%, 식용유 최대 3~6%, 빵·케이크 최대 만원이 인하되면서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도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향후에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혁신 잠재력이 큰 AI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맹 분야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가맹점주 단체등록제 및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주단체 등록 요건과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부당지원을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의 불공정약관 및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시정하고,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법원에 직접 법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변화된 디지털 거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소비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과 공정거래 감시·제재 역량 및 분쟁조정제도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소비생활 밀접 분야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출산·건강관리·상조 등 소비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2025년 9월에는 52개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위약금 및 감염 관련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고, 2025년 10월에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육시설 업체의 환불 금지 및 환불 시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는 10개 결혼 준비 대행 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가격·위약금 등 거래조건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본인 또는 고인의 상조 서비스 가입정보(납입금액, 보상가능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소비자의 가입정보 조회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름은 '내상조'로 정함) 서비스를 시범 개시(2026년 1월, 사업자 재무상황, 주요 변경사항 및 법 위반 내역 등을 시범 제공 중)하였습니다.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구매 후기 관리 기준 공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5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2025년 10월)을 완료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 당근마켓 등 27개 온라인 쇼핑사업자로 구성)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체결(2025년 12월)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독려하였습니다.

온라인 의류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함량이 미달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2026년 1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을 통한 공정거래 집행 체계 강화

'기술탈취 근절대책'(2025년 11월)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5년 12월 시행)을 통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법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술탈취 근절대책」
(2025년 11월 4일)



공정거래 감시·제재 역량 및 분쟁조정제도 강화

공정거래 감시·제재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공정거래 조사·심의인력 16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인천 지역의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는 등 공정위 조직을 정비(2026년 3월)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액사건에 대한 단독 조정이 허용되고,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플랫폼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소송 활성화 및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2026년 3월~)하여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위 인력증원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 및 교육도 적극 추진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Anti-phishing Sharing and Analysis Platform)'을 구축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범죄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T기술 발전, AI 확산 등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나 금융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수법의 고도화 등으로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침해위협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책임 있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책·감독이 다소 건전성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관련 법·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정부와 은행권은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보호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정(2025년 8월)하였고, 은행도 이를 자체 내규에 반영(2025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실적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영업관행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2025년 12월 17일)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민간전문가는 '정책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접근성 제고 등 편익 증진

정부는 보다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로 5세대 실손보험을 2026년 5월 6일 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맞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선택형 특약옵션도 마련하였습니다. 선택형 특약은 3대 비급여(도수

치료 등,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면책 옵션 선택 시 보험료가 할인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2025년 11월). 그 동안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이체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임직원·대주주 등의 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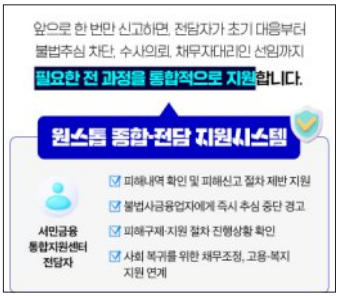
최근 빈발하는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025년 10월)'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추진과제로서 국민의 재산에 직결되는 금융보안 사고에 대하여 징벌적 과징금 도입·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정보보호 업무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닌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로서 자리매김하여 금융권 전반의 보안책임·역량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24년 7월 시행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26년 1월 14일). 또한, 부적격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도입을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였습니다(2026년 1월 20일).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통신·금융·수사 기관에 분산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데 모아 신속하게 전파하고 AI기반 패턴학습이 이뤄지도록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구축하였습니다(2025년 10월). ASAP 운영 12주(2025년 10월~2026년 1월)만에 약 186.5억원 규모의 피해를 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전 차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보다 폭넓은 정보공유 및 안전한 정보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026년 2월)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재명정부는 ASAP을 고도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간 이자율 60%가 넘는 사채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은 더 이상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도록 「대부업법」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2025년 7월 22일 시행).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 방문하면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2026년 3월 9일). 출범 3주간 123명의 피해자를 상담하여 총 760건의 사채 관련 불법추심 대부분을 중단시키고 123건은 채무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1,284건을 적발하고 불법사채업자 1,553명을 검거하였으며,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7.5%, 검거 인원 19%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융범죄·금융사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금융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067 기술탈취는 근절 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추진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 범위를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탈법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안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연장과 함께 상생협력 영역을 온라인플랫폼·금융·방산으로 확장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제품 생산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공급망의 각 단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된 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과 같은 산업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호 및 보안 담당인력 : (대기업) 9.9명 〉 (중소기업) 1.4명
기술보호 투자금액 : (대기업) 1,220.8백만원 〉 (중소기업) 21.4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 : 연간 약 300건,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

이에 이재명정부는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거래·협력 관계를 포괄하고, 상생협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공정과 상생의 범위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촘촘하고 강력한 기술보호 제도 구현으로 기술탈취 근절

2025년 9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이후, 2025년 12월에는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피해기업이 보다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26년 1월에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법정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추진 절차



기술탈취신문고 출범
(2026년 3월 26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차단 브리핑
(2026년 2월 12일)



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기관인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요 기술탈취 사건을 공동 대응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6년 3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범정부의 기술보호 제도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탈취 신문고'를 신설하여 신고·상담부터 조사·수사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수제맥주 기업인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상표권 관련 이견으로 발생한 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에 따라 분쟁 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종결되었으며, 이는 분쟁을 넘어 회복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이차전지·전고체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적발·차단하여 수 십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국내외 영업비밀 관련 기술유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2025년 7월, 2026년 2월 브리핑). 또한, 산업스파이(산업 기밀 유출자) 신고포상제 시행(2026년 5월),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 수사·조사기관 대상(경찰, 국정원 등) 기술자문 제공 등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화, 납품대금 제값 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2025년 12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뿌리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연동제 회피를 위해 미연동 약정을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6월 처음으로 실시한 직권조사를 통해 3개사를 적발하였습니다. 연동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인 상생결제의 지급액이 2025년 1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2028

대통령 주재
상생 실천 기업인과 대화
(2026년 3월)



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최대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6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을 발표하여 상생협력기금 규모 및 출연금 지원용도 확대,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제조업 중심의 동반성장지수를 금융·플랫폼·방산 분야까지 확장하여 산업별 생태계 전반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2026년 1월)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2026년 1월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의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이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외국 유학생 인재 발굴 → 중소기업 인재 양성 → 취업 매칭 → 비자 추천 등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협약 체결
(2026년 1월 31일)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 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과 부처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대기업은 상생결제 확대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성과를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0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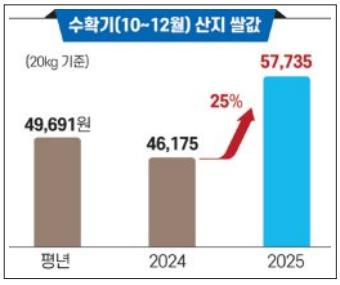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유통비용 감소효과가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K-푸드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인 103.9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일상화된 기후위기,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와 먹거리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안정적 공급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수출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급 확대

수확기 산지 쌀값



이재명정부 시작과 함께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5년 8월)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사후 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대여, 수확기 대책 수립 등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역대 최고치로 수확기 쌀값을 회복하고, 설·추석 등 수요 집중 시기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명절 상차림 비용을 낮추고 김장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체계적 농지 관리를 위해 「식량안보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국산 농식품 소비를 늘리면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도 함께 개선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2024년 148억원 → 2025년 381억원)하고, 쌀 소비 정책 중 호응이 높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식사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2025년 10월~)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 끼(점심)를 새롭게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2024년 종료되었던 초등학교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재

개합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임산부·영유아·아동 → + 청년)하는 등 보다 촘촘한 식생활 돌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2025년 정부는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신규 지정(2025년 6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첫 시행(2025년 10월) 등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선정(2026년 7개소)하여 청년층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식품산업에 IT·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2025년 12월)하였으며, 스타트업(혁신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K-푸드 농식품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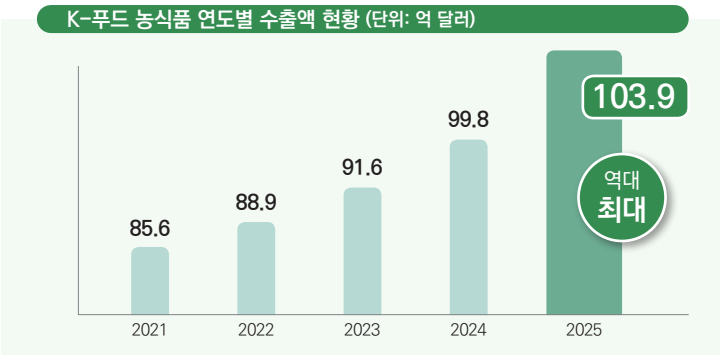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

2025년 K-푸드 농식품 수출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인 103.9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라면은 최초로 15억달러를 돌파하였고, 신선 포도·딸기 등 수출액도 각 0.86억달러, 0.72억달러로 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K-푸드 및 한식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K-푸드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글로벌 한식 열풍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2026년 3월)하였습니다.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라학교'도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란 등급판정 표시 개선사항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정부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2026년 3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2025년 기준 유통비용률 11.1%p 감소(오프라인 18.8% → 온라인 7.7%), 농가 수취금액 5.1% 상승

계란 등급판정 표시 개선(2026년 3월 12일까지 108만개 유통),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를 위한 농협 권장판매가격 제시 등 축산물 유통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개발(2026년 9월), 삼겹살 부위 세분화(앞삼겹, 돈차돌, 뒷삼겹), 계란 중량명칭 개선,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 구축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식량 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가치사슬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내실화를 토대로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등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0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3,800억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2025년 8월)하여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 급등 시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농자재법」을 제정(2025년 12월)하고, 청년 대상 농지·자금·주거 등 맞춤 지원을 통해 농업인 세대교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이상기상 발생과 유가·환율 상승, 원자재 수출제한 등 국제 공급망 위험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은 농가 경영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업생산성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 무기질비료(요소, 중동): (2월, 전쟁 전) $485/톤 → (4.27. 기준) $900/톤 (전쟁전 대비 증 85.6%)

■ 농가인구/65세 이상 비율: ('10) 306만 명/32% → ('20) 231만 명/42% → ('24) 200만 명/56%

이에 이재명정부는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인력·농자재 지원, 청년농업인재 양성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공익직불제 홍보포스터



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84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농업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더라도 실제 보상 전까지는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농업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에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국가책임제 도입

2025년 벼 수확기(9~11월)에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 재해로 처음 인정하여 피해·조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기준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등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2025년 8월)하였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155개 시군 대상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일반기상' 정보보다 정확한 '농장단위'의 상세한 기상과 작물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력·농자재 등 필수 농업자원 지원 강화

「필수농자재법」 제정(2025년 12월)을 통해 국제 공급망 위기 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필수농자재(비료, 사료, 전기, 유류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2024년 61,248명 → 2025년 86,680명 → 2026년 상반기 93,503명)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25년 91개소 → 2026년 142개소)를 통해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속 확대하여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인력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청년농 간담회
(2025년 9월 16일)



정부는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 청년농을 선발하여 초기 소득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 외에도 농지, 자금, 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과거 매입·제공 위주였던 농지 지원은 임차농지를 확보하고,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청년농의 농지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공공임대용 농지(비축농지)와 선임대·후매도 물량을 2025년 각각 2,500ha, 50ha에서 2026년 4,200ha(+1,700), 200ha(+150)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임대 상한도 기존 3~6ha에서 4~7ha로 늘렸습니다.

특히,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 용도인 후계농육성자금은 202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3,500억 원 확보하여 청년농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들의 창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예비농업인을 모집(최대 200명)하여 멘토링·교육을 시범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농가 단위에서 대응이 어려운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농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으로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0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2026년 2월)하여 대상지역 인구가 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필수서비스를 배달형으로 제공하고,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2026년 3월), 동서트레일(849km 숲길) 운영,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청년농 육성, 농촌공간계획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농촌은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소멸 위기에도 도시민·청년 등의 농촌 워케이션(원격근무 휴가), 러스틱라이프(전원생활)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농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은 농촌의 기회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 농촌(읍·면) 인구('24) 9,739천명(총인구 51,806천명의 18.8%)

■ 고령화율(데이터처) : ('00) 14.7%(읍 9.6%, 면 18.1%) → ('24) 26.6%(읍 20.1%, 면 34.1%)

이에 이재명정부는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농촌창업 활성화, 필수서비스 지원 등 기존 정책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신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농촌빈집은행 카드뉴스



각종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공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각 시·군이 정주여건, 경제활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10년 단위 전략인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협약(5년, 최대 400억원)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촌협약 : 2025년까지 누적 96개 시·군, 2026년 16개 시·군 협약 체결 계획

농촌 빈집 철거·재생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농촌 빈집 관리 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함께 누리는 농촌공간을 만들고자 다시온ON:溫마을(3개소) 등을 신규 추진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확대(2023년 9개소 → 2026년 32개소)하여 귀농·귀촌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이재명정부는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과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그로부터 창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단지



한 소득을 마을에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합동, 2026년 700개소)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농촌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 마을주민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 수익 창출, 소득으로 환원

향후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지원하여 농촌 재생 에너지 생산·공급을 확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식
(2026년 3월 18일)



정부는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와 상호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2026년 3월)시켜 농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범 운영(2025년 8~11월)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2025년 10~11월 시범 운영(45일)하여 탐방객 8만명이 이용하는 등 산촌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 확산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정례 운영하고, 2027년 '동서트레일' 전면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백패킹 숲길 조성 : 태안군 안면도에서 울진군 망양정에 이르는 849km 구간

왕진버스 재택진료 현장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어촌 구현

정부는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왕진버스 방문 시·군을 2025년 91개에서 2026년 112개로 늘리는 한편, 2026년부터 공동경영주 제도를 개선(취업제한 완화)하여 여성농업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51~70세에서 51~80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 공동경영주: 부부 공동 경영체 내 여성농을 경영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 보장을 위해 도입('16)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며, 대상지역의 인구는 사업 선정 전에 비해 4.7%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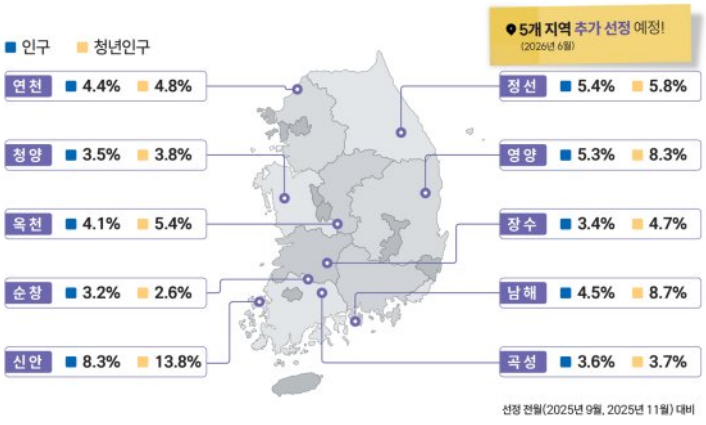
■ 대상지역 :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군 동이면에서는 마을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26년 3월부터 마을공동슈퍼를 운영하고, 남해군 이동면 정거마을에서는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 등이 빈 점포를 활용한 '뽀빠이거리'를 조성하여 반찬,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전달식
(2026년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인구 변화



정부는 앞으로도 농산어촌 주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농산어촌을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0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2025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인 33.3억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김 수출은 11.3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역대 최장기 바다 고수온에도 선제 대응하여 양식어가 피해를 전년 대비 87%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선사 유치활동으로 2025년에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과 어촌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환경 급변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업계의 영세성, 전문인력·자금·인프라 부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 1.44℃ 상승(세계 평균 2배 수준)
-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규모: ('21)290 → ('22)10 → ('23)438 → ('24)1,430 → ('25)180억원
- 세계 해양관광 시장은 '22~'30년 연평균 5.7% 성장, '30년 5조 달러 도달 전망(GlobeNewswire)
- 국내 해양수산기업의 매출규모(2022년 기준, 244조원)는 증가세에 있으나, 평균 매출액(12억원)은 전체 산업 평균(14억원)의 85% 수준으로 상대적 영세(해양수산통계조사)

이에 이재명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수산업 혁신과 국내 해양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어촌과 연안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수산업 혁신

K-스마트수산업 AX 플랫폼 조감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참여 업종을 2024년 19개에서 2025년 21개로 확대하여 산출량 중심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역대 최장기 바다 고수온(85일)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 신속재난대응체계 구성, 양식어류 긴급 방류 절차 간소화, 대응장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년 대비 피해를 87% 저감(2024년 1,430억원 → 2025년 180억원)하였습니다.

수산 분야 AI 대전환을 위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2025년 12월, 전남 고흥군)하고, 육·해상 첨단양식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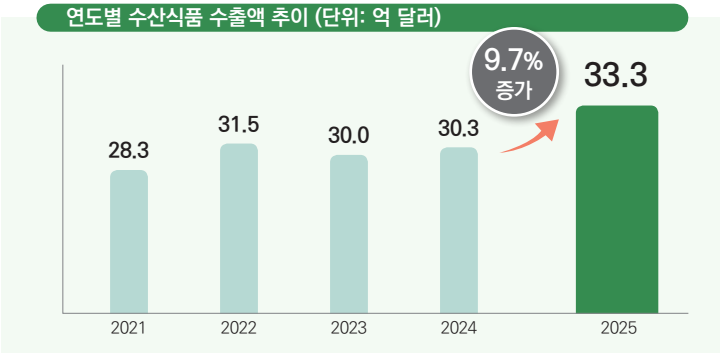
수산물 신선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2025년 11월)하고,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을 2배 이상 대폭 확대(60 → 134개)하여 간소화된 유통경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제주 1개소, 설계중)하고, 콜드체인 구축과 유통 집적화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충남·전남·경북)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 지원,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한류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K-씨푸드의 경쟁력을 높여 2025년 수산물 수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33.3억달러, 전년 대비 9.7% 증가).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김'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 역량 확충, 유망 상품 개발 등 전략적 수출지원을 통해 역대 최고치인 11.3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어촌·어항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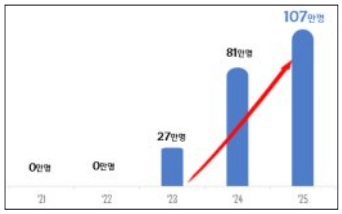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섬·어촌 어업인 대상으로 의료·생활·식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 사업'을 통해 비대면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물론, 신선식품을 찾아가서 판매하는 '어복장터'와 무인점포로 생필품·식품 등을 판매하는 '어복점빵'도 개시(2025년 9월)하였습니다.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2025년 10월)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해양관광자원에 민간 투자와 재정지원을 연계·집적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착수(통영·포항, 2026년 2월)하였습니다. 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크루즈 관광객 현황



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지정(4개소, 2025년 12월)하였습니다.

해외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 포트세일즈 활동과 인센티브 도입으로 2025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107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업인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지원,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

어업정보도



계획입지, 이익공유 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상풍력법」이 시행(2026년 3월)되었습니다. 계획입지 추진을 위해 293개의 해양수산 정보 등이 포함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 완료(2026년 3월 26일)하였으며, 2026년 내 1단계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작업자 교육과정을 신설(2025년 8월)하고,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고예방·대응 전문인력을 233명 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풍부하게 보유한 해양생태자산인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이 신규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국제 인증(2025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탄소 크레딧 확보 등으로 연간 약 720억원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민·관협력 모델로 개발된 용융염원자로(MSR) 탑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025년 9월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하여, 우리 해양 기술의 글로벌 안전 표준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높은 초기 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는 R&D 등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가 2025년 9월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업 혁신, 수산식품 수출 확대, 청년 어업인 육성 등으로 수산업·어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양 관광 활성화로 어촌·연안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해양 신산업 적극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V 기본이 튼튼한 사회

Chapter. 04

-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0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생명안전기본법」 및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난관리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조직·인력 확충과 산업 육성, 해외 협력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철도·항공 안전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재난 제도화, 화재 등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및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양상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안전권)를 명시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안전권' 구현과 안전약자 보호,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18회) 및 시민단체(8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2026년 5월 7일)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2025년 10월)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2025년 12월 19일~1월 28일)하였습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재난·안전분야 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마련(2025년 9월)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 현장 대응 인력을 확충하도록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하고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을 최대 월 24만원 인상, 승진·포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난안전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2025년 9월)를 개최하고, 베트남 시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2025년 8월·10월)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여 약 4,503억원의 수출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이와 함께, 총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결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육성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재난·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관계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1월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탈리아와 재난관리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베트남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도 시작하여 해외에 우리나라 재난안전 기술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재난관리 MOU



항공·철도 등 중대형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강화

2025년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 교량 2개소 전면 개량과 옹벽·배수로·낙석방지망 등 재해 예방시설 555개소 설치하여 2024년 대비 중대 수해 피해 발생 개소가 57.1%(7 → 3개소)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항·경주 등 5개 공항(7개소)의 방위각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교체(2026년 2월)하였고, 종단안전구역(240m) 확보가 어려운 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공항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동선 재해예방시설



포항경주공항 방위각 시설



주민 밀착형 교통안전(보행·전기차·이륜·PM) 체계 고도화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12개소의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86억원을 지원(2026년 1월)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법제화(2025년 8월)하고 고령 보행자 등 사고 위험 구간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주차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2026년 2월)하였고, 만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지원하였습니다.

'26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대책 마련

지반침하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 재난'을 신설(2025년 10월)하고, 지방정부의 지하안전관리 평가(업무평가 지표 신설·실시, 2026년 3월)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26년 4월)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우려구간인 도심지·대형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5년 11월), 국토부 직권조사 체계를 보완하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등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사고·지반탐

사 결과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Jiha safety Inforamtion System)에서 대국민 공개(2025년 6월)하였습니다.

건축물 화재예방 및 건설 안전 강화

비탈면 IoT 상시계측 시스템



기존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보강하여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배치기준'을 현실화(2025년 6월)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개선(2025년 9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증감리인 제도(2025년 9월)를 도입하여 감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모니터링 설비를 502개소로 확대 설치 및 터널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AI 기반 원격진압 설비 개발(2025년 9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 안전관리를 가속화하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열차 운행·경합 자동 분석·관리하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역시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구현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제7기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2026년 3월 5일)



2025어린이안전박람회
(2025년 7월 24일~ 26일)



주민점검 신청시설 점검
(2026월 3월 16일)



의용소방대 운영



자율방재단 활동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안전사고까지 확대를 위해 주민대피지원단 등의 재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년자율방재단도 활성화하여 방재활동에 젊은 층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용소방대는 교육과정을 신임·기본·전담교육으로 체계화해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고 대장·부대장 임기 시작일을 통일해 대원 간 결속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7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위촉(2026년 3월 5일)하여 안전거버넌스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1회 어린이안전박람회(2025년 7월 24일 ~ 26일) 개최로 어린이의 안전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해 국민이 점검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확인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여 2025년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등 438개소를 점검·정비하였고, 2026년은 해빙기 안전점검까지 확대(2026년 2~4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재난안전산업 해외 수출 계약 4,503억원 추진 및 일본·이탈리아 등과의 협력 등 재난관리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재난 신설,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502개소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제도 정비를 완성하고, 현장 재난관리 기반 확충,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민관 협력과 국민 참여를 확대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사회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73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혁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피난약자를 위한 '119화재대피안심콜' 전면 시행과 홍수 위험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 및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 수립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극한의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발생이 증가하면서 재난 대응체계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피해 규모에 비하여 제한적인 보상으로 피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로 개편하여 신속한 대응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재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2025년 여름, 평균기온 역대 1위(25.7℃)의 더위와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 등 일상화된 이상 기후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어 정부는 범정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2025년 10월)하여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을 혁신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 다중 해산 권고 등 지방정부의 예방조치를 구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년 10월 2일)으로 지역축제, 공연장 등의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별 자체 대피계획 수립을 완료(2025년 7월)하는 한편 '4단계(2026~203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6년 1월), '2026년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안내자료'(2026년 2월) 등 수립으로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속히 발견·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2025년 7월)하고, 이를 기반으로 CCTV 영상을 활용한 AI 침수탐지모델을 개발(2025년 12월)하였습니다.

'AI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2025년 9월)을 마련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

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경험 위주의 재난관리에서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



헬기 통합출동체계 개선내용



재난 현장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민관 협력으로 인명 탐색·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첨단 무인소방로봇 개발하고, 기증식(2026년 2월)을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시범운영기간 중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 최초로 투입되어 현장 정보 수집 및 방수 임무를 수행하며 실전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구급에 국한되었던 '119안심콜'을 사회재난 영역으로 전면 확대하였고, 화재 신고 접수 시 사전 등록된 화재취약 가입자 정보를 자동 표출하는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개시(2026년 5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국가가 주도하는 통합출동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협의체'(경찰·소방·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를 구성(2025년 6월)하였으며,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2026년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접경지역 보상강화

그동안 재난피해 규모에 비하여 제한적 지원을 받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농·어·임·소금생산업의 경우 주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소득과 무관하게 농·산림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의 재난 피해를 지원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건축물·기계설비 시설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2025년 11월)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남 소음방송 등 북한의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2025년 8월)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 작성 용역을 완료(2026년 3월)하는 등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회복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

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26년 1월)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수습 관련 정보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등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에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초청하고 추모 사이렌을 울리는 등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2차 가해 방지, 치유휴직 신청기한 및 휴직 기간 연장 등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2026년 2월)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2026년 3월)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
(2025년 10월 29일)



빈틈없는 홍수·가뭄 재해대책 마련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홍수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지능형 AI CCTV 약 1,000대를 시범 도입(2025년 12월)하여 홍수 시 하천변 사람이나 차량을 자동 인식하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로 전국 댐과 하천의 물정보, 홍수 예측결과를 가상공간에 표출하여 홍수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여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근 하천 수위가 범람 위험수위인 '심각단계'에 도달하면 안전안내문자와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홍수시 하천변 사람,
차량 자동인식 AI CCTV**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2025년 10월)하여 산불 예방에서 진화까지 대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를 확대(96천톤, 전년 대비 11% 증대)하고, 강력한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2025년 216대 → 2026년 325대)·전문인력 등 진화자원을 선제적·압도적으로 투입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봄철(1월 1일~5월 15일 기준)에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소각산불은 32%(71 → 48건) 감소하고, 대형산불 발생 건수는 67%(6 → 2건) 감소, 산불확산예측에 따른 주민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는 "0"명으로 줄였습니다.

봄철산불대응 성과



정부는 다양화·복합화 등 재난양상 변화를 대비하여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수립, 무인소방로봇 도입, AI·CCTV 확산 등 대응체계를 혁신하고, 119안심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등 국민 중심의 지원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AI·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감시 등 과학적 재난관리로 고도화하고, 고성능 산불진화 장비 확충·등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신원확인과 촘촘한 피해 지원으로 유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 일상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을 법제화하고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범죄피해 구조금 현실화, 주말·야간 심리지원을 위한 '365 스마일' 운영 개시 등 범죄피해자 지원도 내실화하였습니다.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발생은 2026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고,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2025년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대한 국가 조력 또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도 조직화·지능화되고, 범죄수익이 해외로 은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지속 관리와 일상 복귀가 연계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교제폭력·보이스피싱·마약 등 각종 범죄 근절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관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여 인적사항을 경찰과 공유하여 예방 순찰에 활용하는 등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적 개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인적사항을 경찰과 공유하여 예방 순찰에 활용하는 등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스토킹 범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모바일 앱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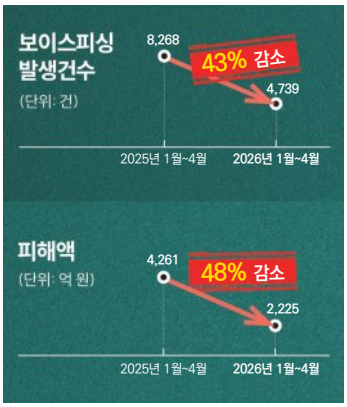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예정(2026년 12월)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



초국가범죄 대응, 해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2027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범죄피해자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비'를 신설(2026년 1월)하였으며, '범죄피해 구조금'을 상향(2026년 3월, 하한 약 1,600→8,200만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하여 주말·야간 심리상담(365 스마일) 운영을 개시(2026년 3월)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생계 공백 완화와 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민생침해·금융범죄 근절 및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강화

조직적 비대면 악성 사기 범죄 가담자를 발본색원하고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였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 중인 사기범죄 조직을 와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22년 7월(출범)~2026년 3월 1,206명 입건, 481명 구속(구속비율 39.8%)

또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신설(2025년 9월)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 43%, 피해액 48% 감소),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캄보디아 등 해외도피사범 894명을 국내 송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외 스캠범죄 대응을 위해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여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6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출하였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일선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전담 수사관을 증원(2026년 1월)하였고,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2026년 6월 시행)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규정 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2025년 12월 시행) 하였습니다.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 성분을 2024년 '펜타닐'에서 2025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배수 지점 추가 정밀조사 및 분석 대상 대폭 확대(15종→200종)를 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였으며,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마약류 범죄 재범률을 1%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중독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중독재활 전담부서를 신설(2026년 1월)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확대(2025년 9월, 2026년 2월)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범죄 취약계층의 일상 속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계획(2025년 10월)'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 및 1인 가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별 조례를 개정하여 범죄예방 물품(비상벨·CCTV 등)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동기범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공중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전조증후를 포섭하는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2026년 1월)하였습니다.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폭력 및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의 88.2%를 격리(구속·입원)하는 등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범죄분석관 등 전문인력 중심의 범죄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음성변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급변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 AI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2026년 2월), 12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민원업무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한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는 향후 국민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AI 챗봇이 각종 치안 민원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민생중심의 AI 기반 마약탐지기 도입, 수사 지원 AI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치안 분야 AI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범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 협력 및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단속과 예방을 아우르는 각종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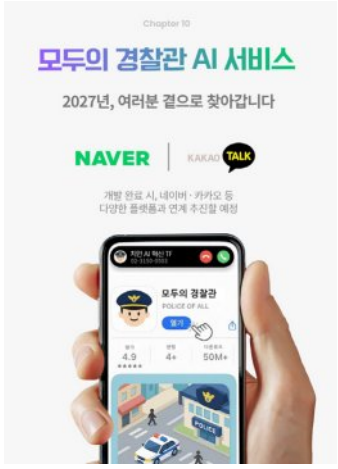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전조증후 위험성 평가



모두의 경찰관 AI 서비스



0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2025년 9월)하고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일터안전 및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중심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에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113명)가 전년 동기(137명) 대비 17.5% 감축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상뿐만 아니라 근본적·구조적 원인까지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년 9월 15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기반 구축

이재명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및 국민이 함께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2025년 9월 15일)하였습니다.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작은 사업장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기술지원 등을 위해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1.6조 원)로 편성하였고,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현장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장관과 전국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함께 고위험사업장(2만 2천여 개소)을 불시점검하여 4만 7천 여개의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2026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1,200명을 증원(2025년 895명 → 2026년 2,095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감독 사업장 수를 대폭 확대(2만 4천개소 → 5만개소)하였습니다.

작은 사업장의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민간과의 협력 강화

2025년부터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 사업장에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후·위험 시설·설비를 개선·지원하는 예산 430억원을 2026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였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자격을 갖춘 민간의 전문가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채용·위촉(932명)하여 현장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 요인·특성을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신설하고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예산 143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5년 7월 17일)을 통해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마련하였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과징금 부과)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프로젝트 안내



안전한 일터 지킴이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2026년 4월 16일)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구축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와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및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사고를 예방의 근본인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2026년 2월 19일 개정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위험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전국민 산재보험, 신속 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이내인 2025년 9월 1일에 신속 추진 과제로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 228일이던 평균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2025년 1분기 대비 처리 기간을 30.6일 단축했습니다.

아울러 법정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보험급여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산재 신청·증명을 어려워하는 노동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변호사·노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
(2025년 9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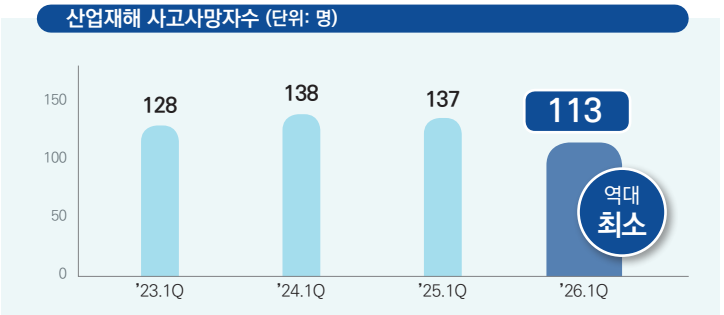
2026년 3월부터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구성해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개선·지원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 보호

심야·휴일 택배 배송에 따른 관련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야간노동에 기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1,860명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였고,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된 콜센터 등 218개소의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폭언 금지 음성·안내 문구 게시, 고객 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도하였으며, 전국 2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산업재해 목격, 직장 내 괴롭힘 등 심리적 고통을 받는 노동자 8,200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 정부와 산업현장의 노력이 더해져 2026년 1분기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2025년 1분기 137명 → 2026년 1분기 113명). 그간 어렵다고 생각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 등 작은 사업장의 추락사고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2025년 1분기 62명 → 2026년 1분기 31명). 변화의 흐름을 보다 굳건히 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공고한 국제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형 함정과 위성 인프라 보강 등 해양감시·단속 역량을 보강하였습니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2025년 해양사고 인명피해(137명)가 2024년(164명) 대비 16.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등 신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폐어구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잦은 기상악화, 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 증가 등 다양한 해양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쓰레기, 해양오염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해양경비력 강화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왕돌초해양과학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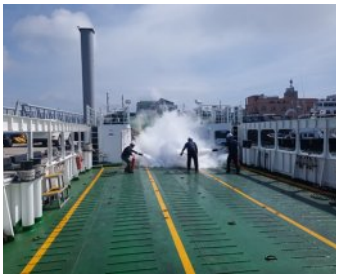
흔들림 없는 확고한 해양·영토 관리로 해양주권 수호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중국측에 해상인계하여 한-중 양국에서 모두 처벌받게 되었으며, 우리수역에서 발견되는 중국 불법어구 강제철거 대상도 확대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4,500톤급 LNG 국가어업지도선 3척이 취항(2025년 12월 5일)하여, 기상악화가 잦은 먼 바다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양 대응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2026년 3월 31일)하였으며, 동해 해양관측 공백 해소와 감시역량 확충을 위해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첨단관측기술을 접목한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도 설치(2026년 1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항해 관련 해양정보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인프라센터를 한국에 유치하여 2026년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정보 국제표준 선도와 함께 세계 항해장비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안여객선 화재대응 훈련
(2025년 6월 18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안전관리

사고에 취약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2025년 10월)하고, 편의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체 연근해어업인에 보급(11.3만 벌)하였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모든 연근해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운영 확대(서해 먼바다 → 먼바다 전 해역) 등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로 2025년 해양사고 인명피해(실종·사망)는 137명으로 2024년 164명 대비 16.5% 감소하였습니다.

소방세력의 즉시 지원이 불가한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여 연안여객선 9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와 배터리 진단기를 보급(2025년 12월)하고, 민·관 합동 소화·대피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늘어나는 전기차 선적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남해 권역
광역경비구역 전담 3020함



해양안전·감시장비 확충 등 스마트 관리역량 강화

이재명정부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주변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구조물 감시 등 주변국과 경계미획정해역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서해와 남해 권역에 광역경비구역 3개소를 신설하고, 전담 대형함정 1척(3020함)을 배치하였으며 2027년까지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해양경찰 위성센터를 착공(2026년 2월)하는 한편, 함정·드론·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융합·분석하여 해양상황을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출범하여 동·서·남해에 이어 제주권의 해양사고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안 위험구역 민간 순찰요원(연안안전지킴이) 활동 확대(월 51시간 → 80시간), 출입통제장소 추가 지정, 무단출입 시 과태료 상향(100만원 → 300만원) 등 연안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청정한 우리바다 조성

해양쓰레기를 유발하는 어구의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통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총 3개의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가 도입(2026년 4월)되었습니다. 폐어구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2026년 1월, 자망·부표·장어통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2025년 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국민-지역사회-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해안가 새단장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양 집중정화 노력의 결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14만 4,615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내 해역 243개 정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조사체계를 유지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든 해역에 대해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견고한 해양 감시역량과 국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해양재난시스템 개발 등 해양재난 R&D를 통해 복잡·다양한 해양재난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구 책임 관리 강화, 해양 폐기물 전주기 관리 등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로 해양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안정화의 날
(2025년 9월 20일)



0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초로 2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월 최대 208만 원)까지 높였고, 26년 만에 의료급여의 부양비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 문턱은 현실에 맞게 낮췄습니다. 2026년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선정 기준의 문턱을 낮추고 급여 수준을 꾸준히 상향하며, 국민 곁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변화에 따른 부양의식 약화, 1인 가구의 증가, 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불합리 제도 개선과 선제적 위험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상, 합리적 기준 개선으로 생활안전망 강화

2025년 7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 80여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민의 복지 기준선을 높이고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월지원금이 2025년 대비 12만 7,029원 올라, 최초로 월 최대지급액이 200만원을 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6년 2월 기준 285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부터 유지되어 오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제도를 폐지하여 5천명의 수급자가 추가로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사전협의는 2013년 61건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2,445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지역 복지사업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2025년 11월 개편하여 적기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은 정확하게, 신청은 쉽고 편리하게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찾아 손 내밀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2025년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137만 명을 찾아 상담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87.4만 명(64%)은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공무원을 도와 초기상담을 지원하는 AI 상담은 향상된 음성인식 정밀도와 데이터가 쌓여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약 137만 명 중 68만 명(49%)의 초기상담을 수행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해내던 초기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게 복지 욕구를 파악해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위하여 2025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5월 18일 '그냥드림' 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소의 사업장에서 운영되어 97,926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상담을 통해 1,533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300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확대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확대

업무와 관계없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본사업의 전국 시행에 앞서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에 2025년 1년간 1,959명을 지원하였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제도의 안정적 도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보건·노동·복지·법률 등 전문가, 노동자·사용자·의료인 등 관련자와 적용대상 및 지급액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형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포스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전체회의
(2026년 4월 14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점검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14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2025년 11월), 정부혁신박람회(2025년 12월) 등을 계기로 기본사회 정책과 우수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정책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0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2026년 3월 27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 기반(조직, 인력, 법령, 예산, 시스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로 의료·요양 등 복합적 돌봄수요가 증가하나,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으로 돌봄 체감도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요양 등 돌봄 욕구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노인 의료·요양 재정이 급증**하였으며, 국가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 차지(2024.12월, 행안부)
** 건보 노인진료비: (2020년) 37.5조→(2024년) 52.1조원, 장기요양 급여비: (2020) 8.9조→(2024) 14.8조원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과 불필요한 입원·입소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7일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였습니다.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25.9.30)



지역사회 통합돌봄 범정부 정책추진단 구성 및 지자체 책임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력·재정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예산·인력 및 시스템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시군구 전담조직·인력 배치 및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시범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에 지역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하여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전년 71억원 대비 약 13배 증가),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기준인건비) 배정하고, 인건비 일부(2,400명, 1년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행안·국토·농림·문체부)·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복지부장관)를 구성하여, 통합돌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였습니다.(총 3회 논의, 2025년 9월 30일, 12월 22일, 2026년 3월 5일)

아울러, 본 사업 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발표(2026년 3월 5일)를 통해 제도의 비전·목표, 단계별 추진방향(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 등 주요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및 장기요양, 돌봄, 의료, 주거 등 서비스 확충

복지부 1차관 경북 봉화군 현장방문
('26.3.6)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지역 및 기관을 확대해 왔으며, 2026년 1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 의료기관 참여)

또한, 지자체와 병원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회복 및 일상생활 지원체계 필요에 따라 퇴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을 기획하여 약 1,200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에 맞춰 퇴원환자 연계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합돌봄체계로 연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영양·가사·외출동행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4회)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의료·요양기관, 보건소 등 기능 확대 및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 서비스 기관 육성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기관과 협업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2026년 1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인프라 편차를 고려한 보건소 전담형, 협업형 모델 등 의료취약지 모형을 다각화하고 사업 공모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의료 취약지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보건소 참여 시군구 70개, 지방의료원 참여 시군구 28개)

또한, 통합재가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308개소에서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350개의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안내



고령자 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로 주거와 돌봄 문제 해결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026년 1월) 하였습니다.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2026년 3월) 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 원년을 맞아, 제도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회적 입원·입소는 줄이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의 제도적 보장,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 예산제, 장애인연금과 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 이동권 강화 등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법적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자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건강, 소득, 고용, 돌봄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를 대구와 경상북도에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과 대구에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각 1개소 추가 지정(총 14개소)하여 전문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발달지연 등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개입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또는 자립 훈련이 필요한 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 사례관리 제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에 필요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위기지원 등 동료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동료지원쉼터 5개소(종일형 3곳, 주간형 2곳)를 신규 선정 및 통보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

이재명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법안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2년 이상 계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쟁점 조율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입법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주거 선택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2027년 3월)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을 2025년 4명에서 2026년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을 지정하였고,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배포(2026년 2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예방 중심의 거주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2026년 4월 15일)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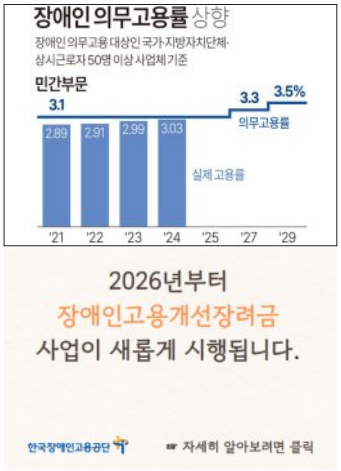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26년 2월),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또는 전문장애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방문재활 신규도입(안)을 장애인 건강주치의 협의체 구성·운영(2025년 9월)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2026년 5~10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바우처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개별 필요에 따른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33개 시군구 960명을 목표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할 기회 확대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고용개선장려금 배너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기회확대, 장애인 고용생태계 구축, 장애인 근로여건 개선을 담은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2025년 10월)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2026년 1월)하여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10,715명 지원(2026년 2월)하여 장애인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고 있으며,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을 전년 대비 월 7,190원 인상하고,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2,300개 확대하여 총 3만 5,846개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역량 및 근로여건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직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안내



이재명정부는 교통약자가 열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6년 2월 1일 자로 개정하여 교통약자 전용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예약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난 2025년 9월 29일, 대전·세종·충북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 내에서라면 어디든 특별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 지원을 위해 시외 및 전세버스의 구조 개선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천(3대), 경기(2대), 전남(1대) 총 3개 지자체에 6대의 휠체어 탑승 가능 전세버스 도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를 공고히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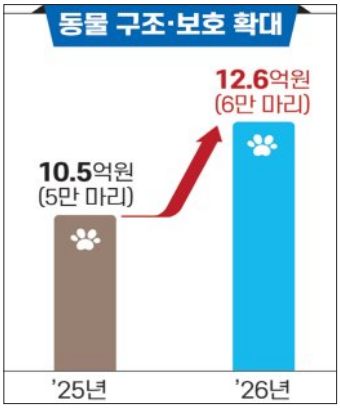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보호 지원비와 동물보호센터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학대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시행(2025년 10월 4일)하여 반려문화 확산의 계기를 만들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2026년 3월)하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급증으로 동물은 단순한 사육의 대상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인프라 등은 정착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지적과 함께, 개물림 사고와 같은 안전문제로 인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사회적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5년 반려동물양육현황 조사 / 농식품부) : (2012년) 17.9% → (2025년) 29.2%

이에 이재명정부는 그간 도입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물 구조·보호 예산현황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매년 10만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지방정부의 동물보호센터 신·증축 사업의 지원 한도 및 비율을 광역 지방정부 수준으로 상향하고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련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16.7%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예비 입양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에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026년 2월)하였습니다.

그간 부처별로 운영해 오던 동물실험 대체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공동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2025년 12월)하였으며, 2026년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현황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전국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최저·최고·중간·평균값 등을 공개(2025년 12월)하여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합리적 병원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모두 게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8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2024년 102종 → 2025년 112종)하여 구취, 변비, 식욕부진 및 치주질환 등의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2025년 9월 26~27일)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2025년 9월 첫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통해 동물의 지위 및 생애주기 복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헌장을 마련·발표하는 등 동물복지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 세계 동물의 날(10월 4일)에 맞춰 법정기념일 '동물보호의 날' 지정
■ 첫 동물보호의 날 행사(2025.9.26.~27., 부산): 방문자 약 1만 2,000명

사육금지제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2025년 12월 29일)



또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현행 동물판매업(경매), 미용업 등에서 동물판매업(일반), 전시업, 생산업, 수입업까지 확대하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2025년 7월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2026년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안을 마련(2026년 12월)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6년 3월)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벤처 · 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특구 지정, 연구 · 기술개발 지원,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체계 마련

아울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2025년 9월)을 통해 기존 가축용 사료와 다른 반려동물(개, 고양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사료 표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 업체의 신제품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조성 중(2024년~)에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 지정에 이어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정책 전환을 위한 법과 정책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웰페어 밸리 조감도



0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2025년 11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확산과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74억원의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2026년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 등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돌봄, 양극화, 기후변화, 지방소멸 등 복합적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기존의 개별법 중심·조직육성 위주의 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가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예산 지원, 금융 지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법 제정
(2025년 8월 14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이재명정부의 사회연대경제가 지역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여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2025년 11월 25일)

한편, 당·정·대 협의, 범정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에 공청회, 2026년 3월에 국회 상임위원회, 2026년 4월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안정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5년 8월 14일에는 「마을기업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실행 체계 구축과 마을기업 지정·운영, 마을기업의 날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경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월 29일 민간자문단 위촉, 2월과 3월에는 분야별 자문·공동기획 세미나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돌봄·주거·공공구매·인재양성 등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범정부협의체 회의와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부처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부처 간 조정·협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회연대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중앙·지방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지원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와 공모사업을 추진(2026년 2월~3월)하고,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및 지방정부 연계 세미나(2026년 2월)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확산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활성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정부 지원과 기초단위 혁신허브 조성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체계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전문가특강
(2026년 1월 26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2026년 4월 27일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지원 확대 계획(2026년~2028년 중 총 4.3조원)을 점검하고 담당부서 신설, 보증기관 연계 특별출연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 사회연대금융 강화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5월 8일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연대금융 실적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을 연평균 6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도 연평균 2,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2026년 총 2조원(2025년에 비해 2,633억원 증가)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4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2026년 4월 27일)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2026년 5월 8일)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지원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팩트 보증을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1,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사회연대경제 조직 전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지원 중이며,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ESG 부문을 신설하여 R&D 사업 선정 시 소셜벤처 등을 60개사 우선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6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유망한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80개를 발굴하고, 조합원 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조직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사회연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확산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지원과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0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취약세대 및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강화로 자산 불균형의 실질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재원규모·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2026년 2월)하고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2026년 2월)하였습니다.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고령층은 노후소득 부족 등 생애주기별 금융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저축·투자·연금 등 자산형성 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산형성과 금융교육 제도 등을 통해 전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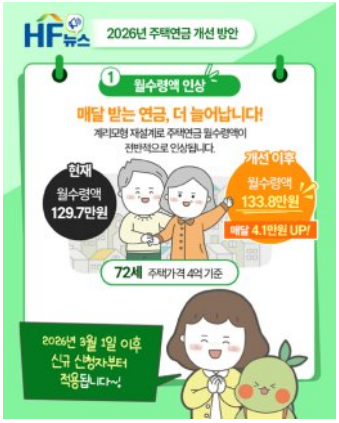
청년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청년 지원 정책상품으로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추진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재원규모·세제혜택, 상품 세부내용 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 유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층에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본 상품구조를 확정하여 2026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2025년 12월, 2026년 2월)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갈아타기 방안을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여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의 상품 선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미래적금



향후에는 2026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세부내용 확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 금융회사 협약 및 금리 확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른 청년금융상품 및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개선사항-1



주택연금 개선사항-2



주택연금 개선사항-3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2026년 2월 5일)을 발표하고 주택연금 월 수령액 인상,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 가입자 편의성 제고 등 제도개선사항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2026년 3월부터 평균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을 3.13% 인상(기존월 129.7만원 → 개선월 133.8만원)하였고, 초기보증료 인하(주택가격의 1.5% → 1.0%) 및 환급기간(3년 → 5년) 확대를 통해 가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선방안 시행 이후, 2026년 3월 23일 기준 주택연금 신청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중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가입자를 기준으로 일반형 대비 월 12.4만원을 우대할 예정이며,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청년 등 전 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고령층까지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에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2026년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청년층에게는 금융범죄 예방과 재무상담을,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대비 자산관리, 연금 활용 및 학부모 금융교육을, 고령층에게는 금융사기 예방과 은퇴자산 보호, 디지털 금융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본인의 자산·부채·소득·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전문적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사업 추진방향을 2026년 2월에 발표하고 추진 TF를 출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시행하여 전 세대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실제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재무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재무진단과 재무상담, 그리고 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다른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세제혜택 부여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주택연금 제도개선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이재명정부는 생애주기별 금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산형성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자산형성 구조와 자산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전 세대가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12.7조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75개소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필수특화 분야 24시간 진료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한 상대가치 조정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환자기본법」 제정, 감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지속적인 위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65세 이상 가입자(전체 가입자 중 비중) : 2022년 875.1만명(17.0%) → 2023년 921.6만명(17.9%) → 2024년 970.9만명(18.9%) → 2025년 1,024.9만명(19.9%)
* 보험급여비(전년 대비 증가율) : 2022년 83.1조 원(9.8% ↑) → 2023년 88.7조 원(6.8% ↑) → 2024년 95.2조 원(7.3% ↑) → 2025년 100.2조 원(5.2% ↑)

이에 이재명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를 합리화하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국고 지원 예산을 전년 교부금 대비 2,258억원 증액한 12.7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인부담률 차등 기준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6년 1월 1일 시행)하였고,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가 제도 측면에서는 제네릭 약가 산정 체계 개편을 포함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

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2026년 3월 26일)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 예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약가제도 개편안의 원만한 이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보장성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 홍보



지속가능한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고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진료권 기반의 효율적인 의료 공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함에도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한 특정 분야에 대해 29개 종합병원·병원을 선정하여 24시간 진료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175개소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중증·필수 진료, 응급 등 배후진료 역할 및 포괄 2차 병원과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마련(2026년 1월 29일)하는 등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필수특화기능강화 지원사업 시행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 매년 신규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필수특화 분야에 급성 알코올 중독 분야를 추가하고 매년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하는 등 지역 내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아급성기 병원의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내실화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제도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에 대안적 지불제도 추진, 상대가치 조정 등 방향성을 담아 발표(2026년 2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급여(舊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용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법 개정 절차 완료 후 2027년 1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하위법령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중증도에 맞는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5년 12월 11일)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과 환자의 권리·안전 보장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2025년 12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하여 의료 혁신 의제를(3개 분야·10개 의제) 선정(제3차 의료혁신위, 2026년 2월 26일)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운영(3월 말~)하여 의료혁신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환자 안전 분야에서는 CRE 감염증(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목 감염증) 감소를 위해 2025년 32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선별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90개소로 확대하고, 중소병원의 의료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기본인증제' 기준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기본법」을 제정(2026년 4월 공포)하여 환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연말 목표로 의료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의료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CRE 감소전략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성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0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정부는 공공·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사 인력 양성규모(안)'을 발표(2026년 2월 10일)하고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법」을 제정하였으며, 소아, 산모·신생아, 심뇌 등 응급의료 분야별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인구 및 의료자원의 대도시·수도권 집중, 불충분한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 공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여 필수의료 제공 인프라 부실과 함께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치료가능 사망률(2023년)) 서울 39.55명 vs 충북 49.94명(10만명당)
- (공공의료기관 비율(2023년)) 한국 5.2% vs OECD 평균 56.5%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 법제화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필수의료법」의 제정(2026년 3월 10일 공포)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필요한 곳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6년 5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등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의료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액배상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세입(연 약 1.1조원)

❶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❷ 수입 담배 관세(농특회계분 제외)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1월 1일 신설) →

세출(법률상 용도)

❶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❷ 진료협력체계구축·운영
❸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시설·인력·장비 확충
❹ 취약지 지원
❺ 지자체 지역필수의료 강화 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심의·의결하여 2027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기존 의대의 신규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의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2025년 12월 「지역의사법」을 제정하고,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및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2026년 3월). 또한, 「국립의전원법」이 제정(2026년 5월)되어 공공의료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속 수련시간 상한 단축, 임산부 보호 강화 등 「전공의법」을 개정(2025년 12월 30일 공포)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국립대병원을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2026년 2월 19일)하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고난도·중증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인프라(2026년 812억원), AI전환(AX)(2026년 142억원) 및 연구 R&D(2025년~2027년 500억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2026년 790억원) 및 인프라 지원(2026년 1,418억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 육성대책 및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과제를 담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하여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2026년 3월~5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12개소 → 2026년 5월 14개소)와 야간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2025년 5월 115개소 → 2026년 5월 14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분만 기능 강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소를 지원 ('2025년 8월 10개소, 2026년 2월 5개소 지정)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권역 1개소 및 지역 4개소, 2026년 2월)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 중심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기존 인력·시설·장비만이 아닌, 진료기능까지 고려할 예정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현재 44개소에서 60여개소까지 확충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시범사업 브리핑
(2026년 2월 25일)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2025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주관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 56개 지표 중 52개에서 최고 수준(5점)을 달성하여 우수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5점 비율) 2017년 1차평가 61% → 2025년 2차평가 93%

또한,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을 300개(2025년)에서 800개(2026년)로 확대하고 2026년 2월부터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여 지역 단위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발표 및 「국립의전원법」·「지역의사법」 제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수행 및 분야별 인프라 확충, WHO 합동외부평가시 93% 영역에서 최고 수준 달성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으로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며, 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WHO 합동외부평가(JEE)
(2025년 8월 25일)





0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개편하여 금연 정책 등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빠짐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다각적 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주치의제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병상 확보와 자살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치의제 시행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환자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26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여 1차 332개소, 2차 2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하여 한의계 강점 질환 중심의 어르신 한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모형개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연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담배 정의 확대 및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시행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연초의 잎을 원료로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해 왔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등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담배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였고,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제품에 대해서도 가향물질 표시 제한, 담배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변화되는 규제 사항들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담배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2025년 11월부터 첫 시행하고,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운영체계 및 행정절차, 분석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에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연길라잡이
(2026년 2월 12일)



담배 정의 확대와 합성니코틴 규제
(2026년 2월 9일)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화상통신·전화를 이용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후 그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 및 진료의 질 향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안정적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제도화 과정에 의료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를 해소하고 제도화 방안에 합의하여, 2010년 「의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 및 진료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한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진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에 의료를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를 2025년 12월부터 시행하여 506개 집중치료실 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급성기 입원 환자 발생 규모인 3만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응급입원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2,000개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외(고립·은둔) 청년층 대상으로 자살예방상담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내 주기적 말벗형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5년 10월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140명으로 충원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소득조건을 폐지하여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심리검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살사망자(13,900명)는 2024년(14,872명) 대비 972명 감소하였으며,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연속 5개월 감소 추세입니다.

자살사망자수



이재명정부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 담배 및 정신건강 관리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국가 책임 간병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75개의 신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산정특례 혜택을 1,413개 질환으로 확대하고,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 신속 등재 시범사업과 당원병 환자를 위한 지원 품목 확대 등으로 희귀·난치 질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사적 간병비와 고가의 비급여 진료, 희귀·난치질환 등 의료 사각지대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본인부담 실태

간병인 : 환자	최소	평균	최대
1:04	월 43만원	월 90만원	월 137만원
1:06	월 26만원	월 64만원	월 101만원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간병비 급여화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확대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정부는 간병 부담 경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2025년 9월 25일)하였습니다. 추진방향 공청회,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간병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5년 11월 4일)을 거쳐 장기근속장려금 및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요양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및 간병 표준교육 과정을 연구·개발하여 간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니트케어 3차 시범사업의 시설·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간병에 대한 국민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급여 정보포털 홍보자료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경감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비급여 적정관리 개선방안'이 발표(2025년 3월)됨에 따라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26년 2월 19일)하였습니다. 이후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통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도수치료 등 가격·급여기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전체 의료기관 대상의 비급여 보고항목 확대를 통해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하였고,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방식을 개편(2026년 4월 30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급여 적정관리 및 가격공개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강화방안 브리핑
(2026년 1월 5일)



희귀 및 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1형 당뇨병 등 국가책임 강화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가의 희귀질환 의약품이 신속하게 보험 급여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대책을 발표(2026년 1월 5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합동)하고 70개의 신규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산정특례를 확대하고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2026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025년 1,338개 → 2026년 1,413개(+75개))하고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확대(대상인원 2025년 810명 → 2026년 1,150명(+340명)) 시행(3월 말)하여 진단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희귀·필수 의약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국민의 적기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총 2,837개 제품을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공급하였고, 2025년 7월에 1형 당뇨 치료제인 글루카곤주사를 긴급도입하여 공급하고, 같은 해 12월에 약가 인정을 받아 환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제도화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고, 기 수립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후 6개월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더욱 정교화할 방침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존 13세까지 지원하였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청소년(14세)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임플란트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부담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및 일부 과잉의료비 부담을 축소하고, 간병부담의 경감, 비급여의료비 경감,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경감을 통해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0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최대 13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면 개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 확대,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취약·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발표된 2025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 25.4만 명, 합계출산율(잠정)은 0.80명으로, 2023년 0.72명 이후 2년 연속 출산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이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아동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지원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아동은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은 1만원, 특별지역 아동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난임부부 및 임산부·영유아 지원

2026년 1월부터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난임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통지서 재발급에 따른 난임부부의 현장 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산후 우울증 또는 난임과 유·사산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간 5.8만 건 상당의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제주에 센터를 추가 선정(2025년 11개소 → 2026년 13개소)하여 지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 사업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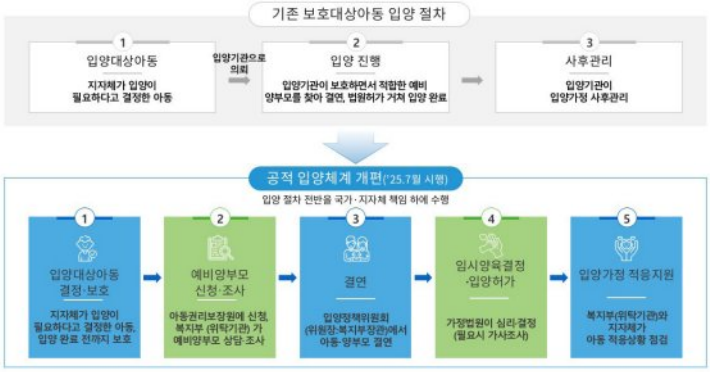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카드뉴스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5년 7월, 한국전쟁 이후 지난 약 70년간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입양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업무를 종료하였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양 절차 전반을 결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입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또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2013년) 이후 10년 만인 2025년 6월 비준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경남·전남 지역까지 넓히고, 사회복지·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양성하여 아동별 특성에 맞는 후견인 추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필

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취약·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금액 및 횟수를 상향(30만원, 최대2회→50만원, 최대3회)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이 국가의 보호 아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며,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부부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양육 부담을 덜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위기 아동은 적기에 발굴·보호·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의 창의적인 미래역량 제고를 위해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살·자해, 고립·은둔 등 위기·취약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민간까지 포함하여 돌봄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확대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0대 자살 및 우울증, 고립·은둔 등 정서적 고위험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AI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부담은 여전히 과중하여 저출생 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과 건강권 증진 사업 추진과 함께, 아이돌봄 시스템 강화 및 다양한 가구유형별 정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참여지원 강화

2026년부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을 복원하여 청소년들이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청소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룹활동(동아리, 인문 프로젝트팀)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 단가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였고, 통학버스 운영 확대로 등하원 편의를 높였습니다.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야외 모험활동 체험장비를 신규로 교체하는 등 낙후된 시설과 숙박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신설(「청소년기본법」 개정, 2026년 4월)하였습니다.

마음건강 증진 및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2026년부터 확대 배치(105명 → 124명)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매뉴얼 제작 등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화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1388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경찰·응급실과 핫라인 구축 등을 위한 '1388 통합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및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 구

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온라인상담을 통해 43만건(작년 대비 6.5% 증가)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기시간도 2026년 3월 기준 9분으로, 2024년 18분 대비 9분이 단축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2025년 12월 30일 개정)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 관리 대상 인원 513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작년(309명) 대비 1.7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을 완화(2025년 9월)하고, 인턴십 연계 등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26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캠프 수료식
(2025년 9월 16일)



플랫폼 사업자 협력회의
(2025년 10월 29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2025년 약 67만건) 및 조치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AI 등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을 청소년수련시설 등 대상으로 시범 운영(3~4월) 하였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하여 돌봄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에 대한 지원도 종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을 인상(5%)하고, 유아돌봄수당(1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당 5,000원)을 신설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 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025년 4월)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2026년 4월 23일). 지방정부에 등록한 민간 기관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3% → 기준 중위소득 65%)하고, 지원단가를 인상(미혼·조손·청년한부모 월 28만원 → 월 33만원)하여,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2025년 7월 1일)하였으며, 6개월(2025년 7월~2026년 4월) 동안 6,646가구의 자녀 10,499명이 양육비 선지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을 개정(2026년 4월)하여 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낮춰 당장 양육비 해결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명단공개)의 소명기간을 단축(3개월 이상 → 10일 이상, 2025년 7월~)하여 제재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자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025년 227개소 → 2026년 232개소)하고,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2026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예정). 이주배경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전담관리사를 배치하여 정착·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4개 센터 시범 운영).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활동과 참여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정부는 2025년 9월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2025년 12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역량 지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 직업훈련 강화, 청년월세 계속사업 전환, 청년 공공주택 40만호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여 청년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산업구조 급변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도전기회 축소,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청년세대가 미래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고, 2025년 12월 26일 정부의 청년정책 종합판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취업역량 향상 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이재명정부는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추가 지정)을 운영하여 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매칭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재학 중 조기에 진로를 설계·설정하고 그에 맞는 취업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나 생계급여 인상을 감안하여 2026년 1월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 직업훈련 확대 및 교육지원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AI 중심대학 10개를 설치하여 AI 전문인재 5백명을 배출할 계획이며, AI 단과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거점대학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2025년 3만명에서 2026년에는 전체 50만명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5년 12월 청년 공공주택 4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6년 공공분양주택(2.4만 호),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4.3만 호) 등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등의 1인 가구를 위하여 수혜계층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의 특화시설과 주택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을 6,934호 선정했습니다. 더불어 2026년에 청년특화시설 건설비 예산을 개소당 8억원을 신규 편성(3개소)하여, 청년특화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국·공유지 및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등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국·공·사립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행복연합기숙사가 수도권 국립대 부지에서는 최초로 한국체대에 개관*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서울과기대, 인천대, 서울 용산 국유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3개 더 개관할 예정입니다.

* 수용인원 704명, 2026년 3월 기준 48개 대학 학생들 입주

또한, 전국 국립대 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BTL기숙사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3개 대학(충남대, 군산대, 강원대)을 확정하여 총사업비 1,024억원을 투입, 1,410명 수용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스터디카페,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한시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2026년 3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 7만여 명에게는 주택 전·월세 자금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개정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2026년 2월 6일)



제 1차 미래대화 1·2·3
(2025년 7월 24일)



청년 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최근 청년 일자리 악화 등으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25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청년인재DB



맞춤형 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동양육시설(복지부)과 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 등을 퇴소한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등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당사자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제도 기반 구축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 청년정책을 종합 검토·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외에 별도로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2026년 2월 6일). 특히 이 회의체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여야정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결정 과정까지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6년 4월)하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문위원회(6개 분야 총 60명)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청년문제를 정부와 함께 토의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청년의 시각이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교육·주택·연금개혁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를 당사자인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청년과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2025년 7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이슈별로 현장을 찾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젊은 한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 전달체계인 “온통청년”을 통해 AI 챗봇,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검색 등 청년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달체계인 중앙-지역별 청년지원센터(전국 243개)를 통해 지역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 4만여 명이 프로필을 등록한 청년인재 DB를 계속 확충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정부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청년공공주택 40만호 이상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의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생활,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090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 노후소득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를 신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는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가입자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규모 역시 해를 거듭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짧은 제도 역사, 가입 사각지대, 불충분한 연금액,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안정성 약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現) 세대 청년 가입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7.6년(2025년 말 기준)입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가입기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기에 군 복무·출산·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군 복무·출산으로 인한 가입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크레딧 인정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12개월·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12개월로 확대된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이 전체 복무기간으로 추가 확대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현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비교



해외 주요 연기금



2022년부터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감안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재개자에서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합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장기 가입기반이 조성, 노후소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기준 31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연금 수급권은 보험료를 납부해 '획득한 권리'로서 소득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근로 유인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319만원 이상 ~ 519만원 미만의 월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은 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기금규모는 1,458조원(세계 3위)에 달하며, 2025년 기금수익률은 18.82%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수익률 역시 8.0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투자 다변화,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 책임투자 원칙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 장기적 재정 안정을 달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구조개혁 논의 지원

보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초·퇴직·개인·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특위 논의(2025년 4월·9월, 2026년 3월 전체회의 업무보고 실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4차 전체회의
(2025년 9월 30일)



이재명정부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18.82%, 기금규모 1,458조원으로 세계 3위의 기금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노후를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0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이재명정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5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1인 가구 급증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은퇴 세대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변화된 가족 구조에 맞춘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서비스 도입

이재명정부는 2025년 천만 노인인구 10.4%에 해당하는 1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2026년에는 수행기관 내 안전 전문인력 613명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20개의 신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개시하였고,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생애역량과 경험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2026년 2월에 마련하였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4월 도입하였습니다.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
(2026년 3월 27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 지원

어르신의 영양 관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사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쇠 단계 전부터 예방이 가능하도록 노쇠예방 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로당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였으며, 향후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 100세 운동교실 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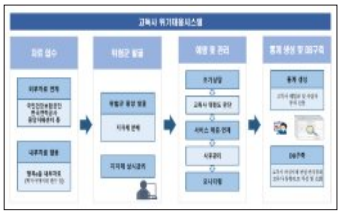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고독사 예방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독·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구축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026년 2월 27일 본격 개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기정보가 입수된 발굴대상자를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지역 간 위험자 기준·발굴 편차를 완화하고,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년·중장년·노인의 고립 양상 및 특성·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과 조기 발굴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2026년 2월 27일)



AI 로봇 등 은퇴세대 수요에 맞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 돌봄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AI,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 9만대를 교체하기 위한 5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AX 스프린트(AI Transformation(AI 전환) sprint) 사업'을 추진해, 재가·시설에서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시니어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Age-Tech 종합지원센터'를 2026년 4월 17일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홈·시설 교류회
(2026년 1월 22일)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2025년 대비 3.5%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10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율(가이드라인 대비 종사자 인건비 지급 수준)을 2025년 96.4%에서 2026년 98.2%로 1.8%p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야간근로수

당 가산분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사업수행지역을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인구변화 적극 대응

2025년 합계 출산율(잠정)
(2026년 2월 25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하며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추이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개편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은퇴 세대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0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중장년 맞춤형 지원으로 중장년고용률(50~69세)이 2026년 3월 69.0%를 기록해 2025년 3월 대비 0.5%p 높아졌습니다. 약 13만명에게 AI 교육훈련을 지원해 2024년 대비 80% 이상 확대했으며, 산업전환 기업에는 직무전환 컨설팅 575건과 훈련지원금 12억 6,800만원을 지원해 2024년 대비 2.25배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9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해 외국인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초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AI·디지털 전환,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장년 고용안정·퇴직연금 강화, AI 인재 양성, 정의로운 노동 전환, 이주노동자 통합지원을 포함하는 '노동대전환'과제를 추진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1:1 맞춤형 경력 설계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중장년고용률(50~69세)은 2026년 3월 69.0%로 2025년 3월(68.5%) 대비 0.5%p가 증가(취업자수 12.5만명 증가)하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강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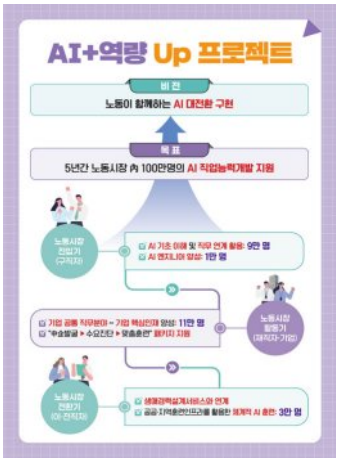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2026년 3월 17일)하였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퇴직연금 구조개선 방향에 합의(2026년 2월 6일)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단계적 확대·의무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AI 인재 양성

2025년에는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노동자, 이·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 약 13만명에게 AI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2024년 약 7만명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AI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였고

AI+역량 UP 프로젝트 주요내용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2025년 12월 1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2025년 11월 25일)



이주노동자 타운홀 미팅
(2025년 9월 28일)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2026년 4월 9일)



(2025년 12월), 이재명정부 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

2025년도에는 산업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취업 지원 컨설팅(575건)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도 훈련지원금(1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부터는 산업·일자리 전환 채용장려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전략적·능동적·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AI 전환과 탈탄소를 포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병행하여 신고·상담의 날(매주 수요일)을 운영,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주노동자 상담·교육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개소(2025년 9개소)로 확대합니다.

이재명정부는 인구·디지털·기후라는 세 가지 큰 전환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AI 역량 향상 훈련 지원, 2026년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발표, 이주노동자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등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부터 청년, 이주노동자까지 누구도 노동 대전환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90.2%로 2024년 대비 8.5%p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해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는 기존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노동보호 체계와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지속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
(2025년 10월 23일)



콘텐츠, 미디어 분야 종사자 타운홀 미팅
(2025년 10월 22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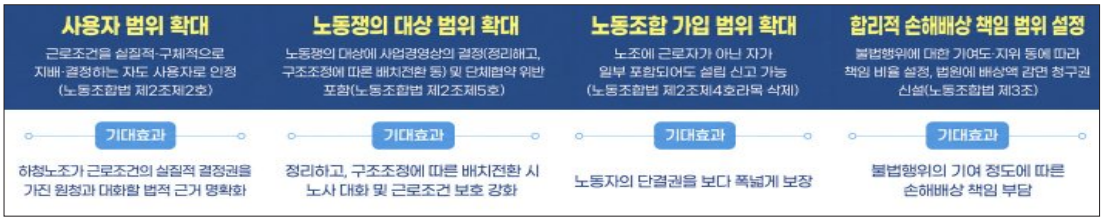
이재명정부는 일하는 사람, 노동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30회)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설계·마련(2025년 12월 발의)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인권과 사회보장 권리를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은 피해자 상담부터 협의·조정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고,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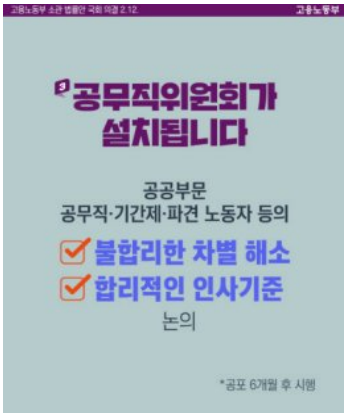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2025년 9월 개정하여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하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완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2026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하에서도 하청 노조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2025년 9월 2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이재명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격차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2026년 9월 시행)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2026년 4월 28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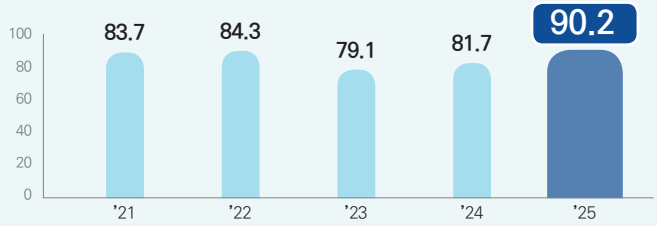
아울러 30인 미만 기업이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혁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2025년도는 1,350건(체포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144건, 구속 14건)의 강제수사와 국토교통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숨어있는 체불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2025년 12월)하였습니다. 2025년 체불 노동자 수는 26.2만명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2024년 28.3만명 대비 7.4% 감소)하였고,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90.2%로 2024년 81.7% 대비 8.5%p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임금체불액은 4,764억원으로 2025년 1분기 5,161억원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해 체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연도별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



▶ 전년 81.7% → 2025 90.2%, +8.5%p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추진단'을 2026년 2월 발족하고 하반기 중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임금직업포털(wagework.go.kr)'을 구축, 2027년 하반기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을 약 6만 6000개 기업, 200만 명으로 확대하여 임금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설 분야의 '임금구분지급제'와 '적정임금제'를 2027년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공제부금' '기능등급제' 교육을 확대하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2025년 8월)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택배·배달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2025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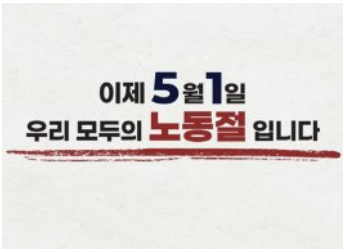
이재명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관련 법 개정과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한 일상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에 집중하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제정하여 보호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0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이재명정부 경사노위 1기가 출범하였습니다(2026년 3월 19일).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미수금 회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노동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 인식과 공감대 역시 부족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절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전 생애 노동교육 도입·시행까지 기본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노동법원 설립,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및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명칭 변경 안내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과 전 생애 노동교육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

2025년 11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4월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개정 후 처음 맞이한 5월 1일 노동절에는 노사정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 5.1km 걷기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민 모두가 청소년기부터 중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실시, 평생학습시스템에 노동교육 콘텐츠 탑재(2026년 3월 20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생애 노동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원 설립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에 앞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입법 논의경과 및 노동법원 관련 주요 쟁점,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노동법 분야 전문가와 함

께 노동법원의 전속관할, 심급구조, 재판부 구성부터 노동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방안까지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발의를 지원하였으며, 법 제정 전이라도 취약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미수금 회수 관련 변호사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미수금 회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과 밀접한 '민간 노동센터'에서 노동법 상담, 권익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대상 지원제도 안내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에 관하여 연구(2026년 3월~2026년 8월)를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사례 조사(2026년 2월~2026년 6월) 중입니다.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업종·직종·직무 등이 유사한 단위에서의 교섭단위 통합 제도를 도입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교섭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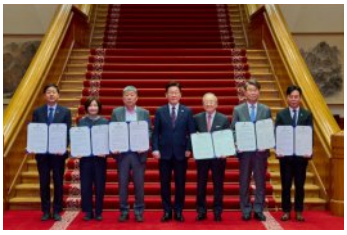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초기업단위 집단 교섭모델 개발 연구'(2025년 10월~2026년 3월)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각 공공부문의 교섭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공공부문에 맞는 초기업단위 교섭모델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대화 강화 및 각종 의사결정 노동자 참여 보장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하였습니다(2026년 3월 19일).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임금·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국민 체감 의제들에 대해 7개 위원회, 4개 연구회, 1개 포럼을 발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조속히 위원회와 연구회, 포럼을 구성하여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2026월 3월 19일)



이재명정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전 생애주기 노동교육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원하청 간 대화가 촉진돼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0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사정이 함께 2025년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공동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6만 7,200명으로 2024년 대비 60.7% 증가하는 등 맞돌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과 관련한 연구, 사회적 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지만 장시간 노동, 경직된 휴가 문화 등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가족의 건강·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출생 문제와도 일정 부분 연관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공정한 보상, 육아 지원 강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 우리나라 2024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 대비 151시간 많음

(시간)

	'20	'21	'22	'23	'24
대한민국	1,927	1,928	1,904	1,874	1,859
증감	⊿30	1	⊿24	⊿30	⊿15
OECD	1,672	1,714	1,717	1,712	1,708
격차	256	214	187	162	151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제 개선과 쉼이 보장되는 일터

이재명정부는 노사정의 신뢰와 합의를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2025년 9월 24일 노사정이 함께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노사정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보호, 연차휴가 활성화 등 과제를 확정하였고, 이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로 현장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중소기업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선언
(2025년 12월 30일)



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법 개정·지침 마련·사업장 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노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금지했으며, 시간 단위 사용 등 편의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퇴근 후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 중이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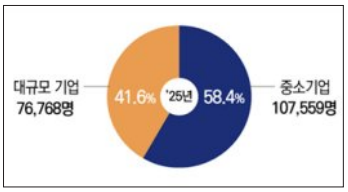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인원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이재명정부는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여성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자는 2024년 대비 33.3% 증가한 34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는 2024년 6만명에서 2025년 9만명으로 53% 증가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중입니다.

2026년에는 부모가 함께 "필요할 때" 일·가정양립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하였습니다(2026년 2월 법 통과, 9월 시행).

일하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2026년 1월) 자녀 입원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짧게(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였습니다(2026년 1월 법 통과, 8월 시행).

일하는 부모의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였습니다(2026년 4월 법 통과, 11월 시행).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원으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2026년 1월 시행).

정부는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이 여성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등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며, 협약 특성과 주요 비준국 사례를 연구(2025년)하고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우수기업 제도를 통합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해 2026년 3월에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은 2026년 하반기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실천 과제를 추진하여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휴식·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해 활용 여건을 확장하겠습니다.

0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AI 고용서비스를 도입해 AI 일자리 매칭을 통한 2025년 취업자가 2024년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신설(2025년 7월)해 7개 지역을 지정하고, 2026년 3월까지 3만 명에게 25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2026년 1월)해 구직자 생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잦은 이·전직, 구직·구인난, 청년 취업 장기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포괄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일자리 매칭서비스 안내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전 국민 역량강화 지원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취업과 기업의 채용을 더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AI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AI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년~2027년)'을 수립하고, AI구인공고 작성 등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위한 4종의 AI 서비스와 고용센터 직원용 AI 직업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구직자, 구인기업, 행정직원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AI 인재추천, AI 경력설계 등 12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2025년에 취업한 인원이 17만 2천명으로 2024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 이용도 41만 2천건으로 2024년보다 29% 늘어났습니다.

2025년은 80개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수요 기반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9,977명, 일학습병행으로 6,379개 기업, 29,646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했으며, 훈련 대상을 입직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재량권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이재명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의 주력 산업

의 위기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2025년 7월 도입했습니다. 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 지정지역의 고용둔화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가동·지원하고 있으며(버팀이음 프로젝트, 2026년 본예산 450억원), 2026년 3월 말까지 3만명에게 251억원을 지원해 고용유지, 직업훈련과 생계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7곳을 2026년 2월 20일부터 운영해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와 구직자 특성을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디지털·AI 전환을 도약 기회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도 일자리 시대'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범 10개월 시점의 비수도권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6.6만 명 증가하는 등 지방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직지원금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등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이재명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구직자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대응해 제도 개편과 취업취약계층 발굴·취업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잦은 입직·이직으로 발생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월에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개정,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부과·구직급여 지급 기준 등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사회적기업 등 사회통합적 고용–취업지원

정부는 2025년 9월 10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시행해 '준비중(쉬었음)-구직-재직'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대학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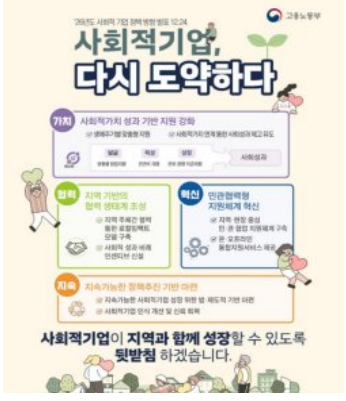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안내



리플러스센터를 통해 2025년 28만명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122개 센터 중 10개소를 일거리 첫걸음 보장센터로 지정해 지역 미취업 청년을 집중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에 6만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10.7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와 기업에 동일 수준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비수도권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9개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해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에게 심층상담, 심리치유, 신고 연계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하여 2025년에 경력보유여성 3,933명(2024년 대비 38.4% 증가)의 재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민간 협력 기반으로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2025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창업과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1,180억원 편성(2025년 대비 318% 증가)하는 등 정책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해 현장 전문가·지방·민간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AI 고용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 청년·여성·취약계층 모두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차별 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축소되었던 성평등정책 협업·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소통의 장을 통해 성평등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창업 서비스와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성별임금격차, 젠더 폭력 등 풀어야 할 성평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의제들은 중앙-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추세적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성격차지수(GGI) : 2025년 148개국 중 101위(경제참여와 기회 : 114위, 정치적 권한 : 92위)
■ 성별임금격차 : OECD 평균 10.3%, 한국 29.0%('24년, 29위/29개국)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등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비롯해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을 2026년 4월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대응·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설 추진 중인 성평등정책담당관에 지원할 표준 운영안을 2026년 상반기 준비하고, 분기별 운영되는 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강화하여 현안·협력사항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성평등부의 부처별 성평등정책담당관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2021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개최(2026년 4월)하고 17개 시·도 성평등정책회의 등 중앙-지방정부 간 성평등 정책 협력·소통 채널을 2년 6개월 만에 복원(2025년 10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등 성평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도 성평등국장 회의
(2025년10월 28일)



청년공존공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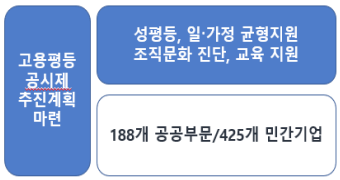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은 현장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계·직능단체 등과의 소통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여 성별 인식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소통하는 청년들이 성평등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팝업(pop-up) 콘서트)을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국민 온라인 및 현장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청년들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성별 인식격차 해소 주체로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남녀 모두가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시 남녀 화장실에 각각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지역 축제 기획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2026년 3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습니다.

성평등한 일터조성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원발의, 2026년 5월 등))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에는 1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고, 425개 민간 기업에는 다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2026년도부터 500개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6,971곳에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관세조사 및 세무조사 유예, 금리우대 등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 및 지속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2025년에는 171천명(2024년 168천명 대비 1.7% 증가)에게 취·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에

는 재직여성에게는 경력설계 및 직장적응 지원을, 기업에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80개에서 9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이 사회진입 초기 단계부터 본인에게 적합한 경력경로를 설계하여 커리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지역 여성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별 인구·산업구조, 일자리 규모 등을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는 '지역핵심산업' 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총 52개 과정(17개 시·도별 3개 내외)을 운영합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개편 운영, 17개 시·도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민간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및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고용 격차를 해소하는 등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새일센터 홈페이지

0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판별 및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종 젠더 폭력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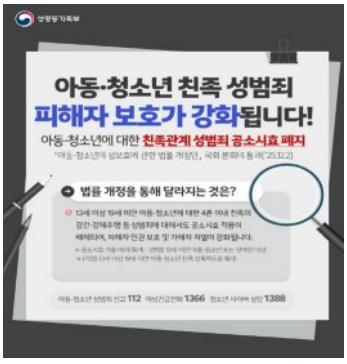
정부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전통적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강력한 대응을 통해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성폭력,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제폭력·스토킹 상담건수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정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유형 반영,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친밀관계 살인·치사 범죄율 분석 등의 신규 지표를 여성폭력통계에 추가(2022년 152종 → 2025년 169종)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2025년 12월)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추진 등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2025년 9월 24일, 법무부·경찰청 등 협업)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13세~18세) 대상으로 한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시설 유형 불문 최대 25세가 될 때까지)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여 불법 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부터 수사·의료·법률 지원 연계까지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센터 지원 건수는 (2024년) 33.2만건 → (2025년) 35.2만건으로 5.9% 증가, 지역센터 지원 건수는 (2024년) 2.5만건 → (2025년) 2.9만건으로 14.5% 증가하였

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물 판별, 삭제요청 자동화 등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2026년 4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신고할 수 있는 AI 기반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2026년 4월)하였습니다. 나아가,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설치(2026년 5월)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제재, 접속 차단 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선
(삭제시스템 고도화) • 딥페이크 여부 식별 불가 • 수동으로 삭제요청 및 조치결과 모니터링 (성착취 대응) • 수동으로 성착취 게시글 검색·모니터링	(삭제시스템 고도화) • AI기반 탐지 기술로 딥페이크 여부 판별 •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재통보 자동화 (성착취 대응) • AI 활용 365일 24시간 자동 수집·분석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

정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월 1.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절차 간소화와 지원방식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우처 이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구매처는 2024년 48개 → 2025년 54개 → 2026년 5월 65개로 확대하였고, 2026년부터는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16.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 결과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은 2024년 87.4%에서 2025년 91.0%로 3.6%p 상승하였고, 실제 이용인원도 2024년 170,767명에서 2025년 176,905명으로 3.6%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성 건강권 제고를 위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부터 시범지역(10여 곳) 내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7년에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리대 제도 개선

	현 행	개 선
지원 대상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 일부지역 일반 청소년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 (소득무관)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 일부지역 무료자판기·현물배송·지역화폐 등	기존 바우처방식 + 추가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 비치(현물지원 병행)

또한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12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림의 날 기념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 개최(2025년 8월 14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광복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작품공모전을 실시(2025년 5월 9일~6월 30일)하여 총 644명이 참여함으로써 단순 추모를 넘어 미래세대 역사·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정부가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조례안 마련·배포(2025년 10월)로 공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2026년 3월)을 통해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에 적극 대응하며, 친밀관계폭력 재발방지 및 선제적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과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운영(2026년 5월)하는 등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AI 시대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부터 평생까지의 전 생애주기 AI 교육을 강화하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수요에 맞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대학원을 최초로 개원하고,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확대하여 우수 외국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였습니다.

AI 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학생부터 성인까지 단계별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AI 중점학교 현황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AI 관련 교과 수업을 확대 운영하는 'AI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2026년 3월)·지원하여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방과후 시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AI·디지털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새싹' 프로그램도 31.7만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2025년 12월 기준).

기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공고(2026년 3월)하였으며, 2026년 4월에 7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영재학교·과학고의 AI·SW 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교를 2025년 14개교에서 2026년 27개교(공립 영재학교·과학고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홍보이미지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초등부터 평생까지 전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을 수립(2025년 11월)하여,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I 부트캠프 37개 대학을 선정(2026년 2월)하여, AI 실무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BK21(Brain Korea 21) 사업에서는 AI 분야 교육연구단 17개를 운영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AI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2025년 11월, 4개 교육연구단 추가선정). 2025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 사내대학원(LG AI대학원)을 최초 개원(2026년 3월)하여 기업이 AI 분야 현장 수요에 맞는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강화

30세 이상 성인이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만명에게 1인당 연 35만원의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2026년 3월, 지원계획 발표). 아울러, 성인 학습자 대상 'X(직무)+AI 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 및 매치업(Match業) 사업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통해 제조 AX, ICT 로봇 기술 등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2026년 2월, 기본계획 수립).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AI·DX 직업기술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2026년 2월)하여, 24개 내외 사업단(전문대학)이 AI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도한국교육원 개원
(2026년 1월 15일)



글로벌 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2026년~2028년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원 R&D 과정 수학대학을 선정하고(2025년 12월, 25개교, 60개 학과), 2026년도 GKS 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2026년 1월). 또한, 한·중·일 3국 및 아세안 대학이 참여하는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복수학위 취득자 709명(약 5%)을 포함한 총 14,510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2025년 11월)와 인도(2026년 1월)에 각각 한국교육원을 개원하여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외국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비자 취득을 쉽게 하는 'K-STAR 비자트랙' 제도 확대를 추진(2025년 12월, 27개교 선정)하여 우수 외국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의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단계부터 질문 중심 수업으로 학생의 주도성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308개

교 선정하여 운영합니다(2026년 2월).

대학에서는 인문사회 교육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1인당 연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2025년 9월, 100명), 인문·사회 분야 우수 대학생 지원 장학금인 '인문 100년 장학금'을 약 4,400명의 학생(총 309억원)에게 지원합니다(2026년 2월 기본계획 수립, 2026년 상반기 최종선발).

정부는 지난 1년 간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등부터 평생까지의 AI 교육을 지원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여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전국 초·중·고 357개교 운영하고,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험과 탐구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10개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예술동아리(6,117개교)와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지원하여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신체적 소양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의 핵심 책무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교육, 역사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과 예술·체육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
(2026년 1월 30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2026년 1월)'을 발표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의 실천적 민주시민교육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전국 초·중·고 357개의 선도학교를 선정·운영(2026년 3월~2027년 2월)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헌법 교육, 토의·토론 수업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2026년 1월) 학교 헌법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협업하여 2025년 4분기에 전국 초·중학교 913학급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특강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 규모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학교(550개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2026년 2월, 추진계획 발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2026년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교실에서 확산되는 역사 왜곡·부정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원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인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탐구와 체험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역사체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2026년 2월).

한편, 전국 16개소에서 운영 중인 독도 체험관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2025년 경기·강원·대전·제주 독도체험관 완료),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체험 중심 독도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서를 배포하고,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즉각 대응하였습니다(2026년 3월).

교육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협약
(2026년 2월 6일)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

비문해·저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등의 정보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생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한글햇살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합니다.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를 20개교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2026년 3월~).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및 취업 과정에서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도록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의 실제 현장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2026년 1월).

한글햇살버스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음악·미술 등 학생의 소질을 살리는 학생예술동아리를 2025년 6,117개교 지원하고,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2025년 11월)하여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관리자 대상 직무연수(2025년 6월)와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및 초·중등 교사 대상 직무연수(2025년 8월, 2026년 1월)를 운영하여 예술 교과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축전(2025년 9월~10월)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축전을 개최(2025년 10월 ~11월)하고,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팀 축전(농구 2025년 8월, 배구 2025년 12월)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체육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대한민국 학교체육 축전(2025년 7월)'을 통해 초·중등 교원의 체육수업 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2025년 11월 18일~19일)



정부는 교육과정 중심의 헌법 교육, 토의·토론 수업 등을 통해 학교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탐구와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생애 초기부터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에 바탕을 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특수학교를 3개교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아이 한 명 한 명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생애 초기부터의 촘촘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학업·정서·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2026년 3월)하여 기초학력 수준과 학습태도, 사회·정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학생의 진단·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하여 학교의 맞춤형 지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처음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도입하여 올 3월 초등학교부터 집중 배치(2025년 313명(5%) → 2026년 639명(10.3%))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48개소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2026년 1월에 발표하여 학점 미이수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기초학력 보장지도 연계 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홍보이미지



지역사회-학교 간 협력을 통해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광역·기초 단위)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2026년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초3을 대상으로, 연 50만원(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을 개시하였으며,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초3·4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초1·2 중심의 '동행 귀가' 원칙을 지속 적용하고, 귀가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2026년 3

월 기준 7,809명)하는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25년 대비 7.3%p 늘어난 52.9%로(초3은 18.0%p 늘어난 62.3%) 늘어났으며, 향후 돌봄·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향상과 사교육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2025년 5세(지원대상 약 27.8만명)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4~5세까지(지원대상 약 50.3만명)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기준으로 학부모 유치원 납입금이 전년동월 대비 약 41.4% 경감하였으며, 5세 학부모 대상 무상교육·보육 평균 만족도는 약 9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2026년 77.0%)과 야간·휴일·24시간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2025년 12월 기준 7,851개소)을 확대하였고,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2025년 56개소 → 2026년 220개소)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2025년 9월)하여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26년 4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 학원의 모집 시험 등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2026년 3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확대 홍보이미지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경기 모두학교와 2026년 3월 부산한별학교, 전북 덕유샘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6년에 특수교사 정원 600명을 증원하고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정을 추진하여 특수교사 배치율을 확대(2024년 98.0% → 2025년 100%)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 확대(2025년 284개교 → 2026년 328개교)와 통합학급 협력교사 시범운영 및 '학교장애인식검사' 적용(2026년 3월~)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합교육 여건 개선 홍보이미지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사항 홍보이미지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정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목표, 학습내용 등을 재구조화(2025년 11월)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콘텐츠(총 144종)를 보급(2026년 1월)하여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검사(마음EASY 검사) 시스템 개선(2026년 2월)을 통한 검사 편의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긴급지원팀'을 확충(2025년 56팀 → 2026년 65팀)하고, 위기학생 대상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기존의 치료비에서 상담비까지 확대(2026년 1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6년 2월)을 통해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도입·시행(2026년 3월)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관 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2025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안전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소통·협력할 수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 및 협력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안전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학부모 의견을 청취·환류하기 위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2025년, 5,391명)을 운영하고, 지역별 학부모에게 직접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2025년 6월~12월,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운영 사항 등을 담은 '2025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9년 만에 개정·배포(2025년 10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후보자 단계부터 운영 위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서식을 정비해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2026년 3월).

교권 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2026년 1월)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을 안내(2026년 3월)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 교원에게 5일에서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현장 적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급식통합플랫폼 웹페이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시·도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인력을 충원하고(2025년 10월, 총 30명),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2026년 3월).

질 높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변화된 위생관리 제도와 법령,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개정(2026년 3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2026년 3월)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등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식단, 영양상담 프로그램, 교육자료 제공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외부인 무단 침입과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CCTV를 약 2.6만 대 추가 설치(2025년 12월 기준)하였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 직무연수(2025년 7월~9월, 1,200명), 교육영상 개발·보급(2026년 2월, 2종) 등 학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
(2025년 12월 23일)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위원 모집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는 제60차 본위원회(2025년 9월 19일)부터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전체 공개하고, 실명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께 직접 알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를 열었으며(2025년 12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2026년 2월).

또한, 국민과 함께 중요한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를 신규 모집하였습니다(2026년 3월). 제2기 위원회는 학생·청년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위원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국민이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인원 기준을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개정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 및 협력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안전한 학교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콘텐츠산업 펀드·보증 공급, 최대 규모 R&D 편성, 세액공제 확대 등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영화·영상 지원 확대, 게임 규제 완화, 대중음악 인재 양성, 웹툰·출판 IP 발굴 등 핵심 장르를 육성하였습니다. 더불어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추진하였으며, 해외비즈니스 센터 설립과 K-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K-드라마, 음악, 게임 등을 통한 한류의 확산은 식료품, 화장품 등 타 산업의 수출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콘텐츠산업은 역대 최고 수준 매출·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정책금융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AI 생태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 동력 발굴을 위해서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K-콘텐츠 2025년 수출] △게임 86억$(58%) △음악 24억$(16%) △방송·영상 13억$(9%)
■ [연도별수출액]→(2021)124억$→(2022)132억$→(2023)133억$→(2024)141억$→(2025)149억$

콘텐츠산업 글로벌 선도 및 성장기반 확충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대규모 공급(2026년 7,318억원) 추진, 2,527.5억원 규모 문화산업보증 공급 개시 등 영세 콘텐츠 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2026~2028년), 공제율·공제범위 확대, 웹툰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창작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영화관람 할인권 지원 캠페인 홍보자료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1,515억원)로 편성하여 문화산업 AI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R&D 전문성 및 기획력 강화 등을 위해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K-콘텐츠 핵심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시장 전반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악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사업(30억원, 2026년 신규)을 추진, 실무형 인재를 양성, 중소기획사 해외진출 지원(30억원, 2026년 신규)과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확대

(2025년 74억→2026년 84억원)로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산업 회복과 성장을 위해 2025년 영화 할인쿠폰을 배포(456만 장)하고, 중예산 영화제작 지원을 두 배(2025년 100억원→2026년 200억원)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버추얼 스튜디오를 개관(2025년 12월)하고, 국제방송영상마켓(2025년 9월) 수출 상담실적(2억 4천만 달러)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인디게임 지원 규모를 확대(2025년 55개→2026년 130개)하고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3개 종목, 14개 지자체/2025년 5월~10월)'를 개최하여 지역기반 이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웹툰과 출판산업은 원천 IP 기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번역 등 현지화 지원과 함께 영국, 독일 등 해외 행사 참가를 통해 웹툰·출판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 웹툰 페스티벌·어워즈' 개최(2026년 11~12월)와 웹소설 IP 2차 저작화 지원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2026년 292억/만화웹툰 IP 활성화 지원 62억, 만화·웹툰 해외 진출 지원 128억, 출판수출 등 지원 84억, 웹소설 산업 지원 18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
(2025년 10월 11일)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2025년 10월 19일~22일)



2026 런던도서전 수출상담관
(2026년 3월 10일~12일)



AI 기반 콘텐츠 산업 혁신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상생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6월 30일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등록·분쟁 예방 안내서」 2종을, 2026년 2월 26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5년에 총 5종(전통문양, 전통복식, 국악음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정부보도자료), 397,576건의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AI 텍스트 데이터 4.15억자를 구축하였으며, 2026년에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공유서재(http://nl.go.kr/aiocr)를 통해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를 개방·공유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총 74건의 과제를 지원했고, 특히, 경주 미디어아트 전시관 '플래시백 계림'(2025년 11월 개관)은 매출액 16억 3천만원(2026년 3월 기준, 누적) 및 7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해 후속 전시관 조성도 검토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공공누리' 신유형(제0유형, AI유형) 도입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통복식



플래시백: 계림 '신단수' 이미지



K-콘텐츠와 한류 연관 산업의 글로벌 도약

캐나다 K-박람회
(2025년 8월)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4년 25개 → 2025년 28개)하여 비즈니스 매칭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 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박람회'를 개최(3회/캐나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하여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콘텐츠×연관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데이' 개최(3회/2025년 6월, 7월, 11월)를 통해 콘텐츠 기업과 연관산업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강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2026년 2월 10일)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의 정밀한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불법사이트 관련 약 4조원의 저작권 피해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재명정부는 모태펀드 7,318억원 공급, 역대 최대 R&D 예산(1,515억원) 확보 등을 통해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음악·영상·게임 등 핵심 장르 육성과 AI 시대 저작권 기반 강화,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여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여 일상 속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한국어·전통문화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문화여건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생활 만족도는 2016년 이후 최고치인 64%를 기록하였고, K-컬처의 중심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역대 최대 관람객 65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 3대 박물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문화 거점을 확충하고 글로벌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K-컬처의 세계 확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2025년 방문객이 사상 최대치인 1,781만명을 기록하고,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2025년 7월) 되는 등 국가유산의 보존·전승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보다 넓고 두텁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기반의 지역재생과 생활문화 활성화가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넘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문화교류와 협력으로 K-컬처의 저변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국가 정책인프라 마련

범정부적인 정책 역량의 결집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문화창조산업 리더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2025년 10월 1일 출범, K-컬처 해외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K-컬처를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7.8조원으로 2025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국립중앙박물관



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창의적인 전시기획과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누리카드 홍보물(포스터)
(2026년 2월 2일~12월 31일)



꿈의 페스티벌
(2025년 8월 6일~8일)



문화도시 콘퍼런스
(2026년 2월 11일)



2025년 관람객 수 기준 루브르, 바티칸에 이어 세계 3대 박물관(650만 명)에 등극하여, K-컬처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 또한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우리 전통문화 및 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리구제 서비스, 자동재충전 제도 등을 지속 추진하여 2025년 발급률 103.1%, 이용률 93.7%를 달성하는 등 실질적 향유기회 보장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세 청년 16만 명에서 19~20세 청년 28만 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연·전시·뮤지컬 분야에 더하여 영화와 도서 분야도 추가함으로써 청년의 문화생활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한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2025년 18만명 이상 참여)하고, 전국 28개 지역에서 '인문문화축제'를 통해 일상 속 인문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포함 아동·청소년 '꿈의 예술단' 거점기관 확대 계획(2025년 110개소 → 2026년 150개소)을 수립하였으며,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2025년 8월 6일~8일) 및 2026 '꿈의 스튜디오' 신규 거점기관 공모를 추진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예술 인재 발굴 ·육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6년 4월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경제계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문화요일' 시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참여기관 2026년 3월 796개소 → 2026년 4월 1,721개소, 문화향유 프로그램 2026년 3월 834개 → 2026년 4월 4,756개).

문화시설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 지원 사업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동아리 지원 2025년 50개→2026년 300개).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2025년 46개관→2026년 300개).

문화가 이끄는 지역성장

문체부·산업부·국토부 합동으로 문화선도산단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구미, 창원, 완주 최초 선정 후 2026년 현재 공모 선정 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더 많은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예술·산업·관광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하고(13곳→37곳),

청주시, 부산 수영구의 우수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도시 국제콘퍼런스 개최(2026년 2월) 등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역량 제고를 지속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신규 문화도시를 지정, 권역별 문화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 보존·전승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

2025년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에 1,781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경주 '황리단길' 정비모델을 전국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비문화유산 10건 발굴, '나주의 샛골나이' 미래전승자 5명 선정, 2026년 1월 국가유산 긴급보호조치 제도 신설 등 국가유산 보존·전승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하고, '반구천의 암각화'를 우리나라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일본에서 '관월당'을, 2026년 2월에는 미국에서 '척암선생문집' 등 조선 후기 문집 책판 3점을 환수하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관월당



K-아트, K-컬처 세계 확산 지원

전 세계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플랫폼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운영(87개국 252개소)하고 한국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고품질 체험형 문화강좌를 제공(세종문화아카데미 55개국 105개소 운영)하는 등 한국어 학습 수요를 창출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약 23.9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2023년) 21.6만명 (2024년) 21만명 (2025년) 23.9만명

한국문학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려(2025년 99억원→2026년 206억원) 해외 번역·출판을 확대하고, 문학과 K-콘텐츠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2027년 개교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작가를 해외 미술시장에 소개하고 약 60억원의 한국작품 판매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700명을 최초로 선발하여, 미래세대를 통해 K-컬처의 세계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우루과이대사관 세종문화아카데미
(2025년 11월 10일~11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2025년 8월 26일~28일)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의 색〉 전시 개최
(2025년10월 24일~2026년 8월 29일)



교류·협력을 통한 K-컬처 네트워크 구축

APEC 최초의 문화 분야 고위급 대화인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하여 '문화창조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을 확인하고, 회원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현지에서 'K-엑스포 in 파리'(6.17.)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K-컬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와는 문화창조산업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화 등 콘텐츠 공동제작 및 인재 양성 등 협력을 도모하여, K-컬처 확산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 확산, 전통문화 보존·전승, K-컬처 글로벌 확산을 통해 문화가 일상이 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경쟁력, 나아가 K-컬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재원 50억원 출연으로 빠짐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거점 청년예술단 창단(연희, 전통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및 청년대상 창작 지원금을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2026년 180억원) 신규 도입 등으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국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및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창작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술인 직업 특성상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며,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창작지원과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청년·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창작 기반 확충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집필공간 지원에 더하여 24시간 이용 가능한 도심형 창작이용실 지원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2025년 250명 → 2026년 350명(예정)) 한편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민간 전시공간 및 레지던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년 지원 대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2025년 14개소 → 2026년 16개소(예정))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민간 공연장의 공간 운영 및 기획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다년지원 대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2025년 24개소 → 2026년 30개소(예정))

한편 예술인 복지 업무와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여(2025년 12월), 예술인 복지 및 권리 보장 정책의 추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기존에 임시조직이었던 예술인지원팀을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권리침해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례집



예술활동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예술인 복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2026년 3월)하고, 정부예산 50억원을 출연하여 공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전세자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확대(2025년 180억원 → 2026년 280억원)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시간이 비정기적인 예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2025년 2개소 → 2026년 4개소로 확대)으로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술인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2025년 1개소 → 2026년 2개소로 확대)을 통해 예술인 간 교류와 협력, 지역 사회공헌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인 임대주택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2025년 9월 4일)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지역에 매력적인 콘텐츠를 집중 공급하여, 지역민이 보고 싶은 문화콘텐츠를 우리 동네에서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 내 우수한 민간단체의 공연과 국립예술단체의 주요 공연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
(2025년 10월 14일~11월 16일)





2025년에는 전국 511건의 공연, 710회 공연을 지원하여 약 24만 명의 지역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약 37억 원의 티켓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공연 관람객이 2024년 대비 11.6% 증가(2024년 16.4만 명 → 2025년 18.3만 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공연이 지역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26년 843건 예정) 지역 문화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서울아트마켓'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공연예술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국내 우수 공연예술 작품 20여 편과 피칭 프로젝트 50여 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110여 개 홍보부스 운영과 890여 건의 1:1 미팅을 통해 약 1,65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유통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2025년 10월~11월)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140여 개 공연장의 208개 작품을 홍보하고, 총 185,270명의 전국 관객을 유입하여 공연 소비 확대 및 지역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하며 국내 공연시장 활성화를 견인하였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역 문예회관 등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우수 전시의 지역 유통을 확대하여 2025년 총 60건의 전시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 비엔날레와 주요 아트페어를 연계한 대한민국 미술축제(2025년 9월)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키아프 서울 등 주요 미술행사의 입장권 할인 프로모션, 전국 권역별 미술 여행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하여 124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주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자부담 의무를 폐지하여 보조금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단순 창작 지원을 넘어 전시·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미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포스터



청년·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전국 순수예술 청년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2026년~2027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실증적·객관적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체계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으로 구성된 시즌단원제의 국립청년예술단을 2025년 창단하여 세종, 강원 원주, 충남 당진,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청년연희단,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국립청년극단, 국립청년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은 총 114명의 시즌 단원 등을 선발하여 창단 공연 등 총 56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으며, 청년예술인에게 소중한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함으로써 공연예술 지역 불균형 해소 및 문화향유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애예술인 첫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우수 작품 지역 유통을 돕기 위한 사업 신설로 <야호야호(무용)>, <푸른나비의 숲(뮤지컬)>, <젤리피쉬(연극)> 등을 지역 주민이 관람하게 됩니다. 또한, 수어 통역, 자막 제공, 음성해설 등 무장애 문화향유 관람 여건을 문화시설 등에 조성하여 장애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이 불편함을

2025년 국립심포니
콘서트오케스트라 '변주의 서막'
(2025년 7월 29일)



느끼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사회적 투자관점에서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K-컬처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2026년은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된 해로, 이재명정부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 속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등 참여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폭력 근절 대책과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체육인 복지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2025년 주 2회 이상 52.2%, 주 1회 이상 62.9%)은 지난 10년 꾸준히 증가했으나,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하여 선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고, 전 생애에 걸친 참여 확대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은 물론, 장애인 체육과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튼튼머니 홍보 포스터



이재명정부는 전 국민의 평생 운동 습관화를 위해 개인의 체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튼튼머니' 사업(2025년 약 33만명 참여)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2025년 약 13만명 참여)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도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2025년 726억원)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2025년 659억원)을 지속 추진(공모)하고, 노후 육상경기장 개보수를 통한 어르신 친화형 체육시설 조성(2026년 2개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체육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자연스러운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하고, 체육관 편의시설 및 야외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등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포스터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안내 포스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026년 1월 27일~1월 30일)



수 있는 개보수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체육 투자 확대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유지

이재명정부는 국제대회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수 육성체계를 고도화하고, 훈련 인프라 확충과 지원체계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내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2025년)하는 한편, '예비국가대표'를 신설(2026년)하여 꿈나무부터 국가대표까지 이어지는 선수 육성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체육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확대하는 「체육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2026년 2월 시행)하는 등 체육인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규모 대회 등에 인권보호관을 파견(2025년 31개 대회)하여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은퇴 이후 진로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2025년 50억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재명정부는 국가대표 훈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강화, 포괄조사제도 도입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육성

이재명정부는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기반 혁신과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스포츠 기술개발 R&D를 확대하여 개인운동기록 및 간편도핑검사 기술 개발을 위한 약 65억원 규모의 12개 과제를 추진(2026년)하고, 스포츠 기술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예산(2026년 8억원)과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거점 조성 예산(2026년 4억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와 연계된 스포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단체와 소통하여 AI 기반 신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등 산업 전반의 혁신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2026년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거점 2개소를 선정(공모)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차별 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환경 조성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포용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확대하여 국고 지원 단가를 30억원대에서 40억원대로 상향(2026년)하고, 신규 건립을 지속 지원하여(누적 108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약 3만명에게 월 11만원 수준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2025년), '통합체육교실' 170개소 운영(2025년)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친화 종목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선수 발굴단'을 운영하여 유망선수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이재명정부는 국제대회 참가 지원과 국제기구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지속 높이고 있습니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2026년 2월)에서 선수단 약 130명을 지원하여 종합 13위를 달성하고(금3·은4·동3),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3만 2,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 홍보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동계패럴림픽에서도 종합 13위(금2·은4·동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2025년 12월, 163개국·1,871명 참가)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2025년 9월)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태권도 시범단 해외 공연(2025년 13개국)과 평창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며 K-스포츠를 세계화하며, 올림픽 유산을 지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 참가를 지원하고,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입국 환영행사
(2026년 2월 24일)



2025 IPC 정기총회 집행위원 만찬
(2025년 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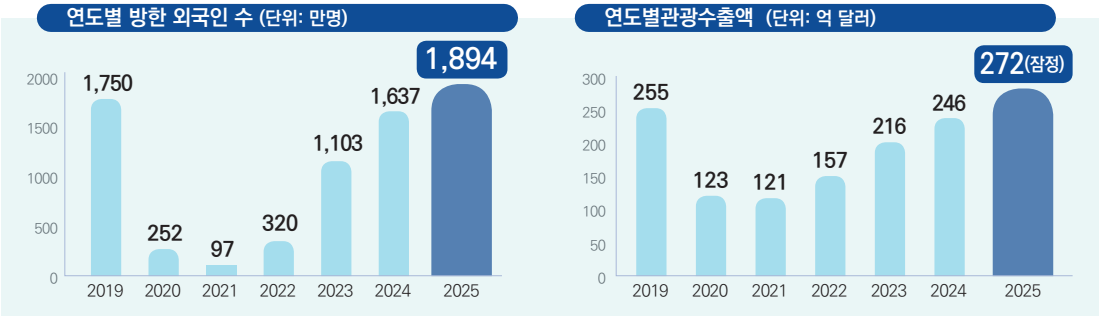


이재명정부는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국제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2025년 방한관광 마케팅의 전방위 전개와 함께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마이스·의료 관광규제 완화 등 제도적 노력과 지역 교통망 확충 병행으로 역대 최대 외래객 1,894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부처 회의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2차례 개최하고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축제 육성 등 관광콘텐츠 확충과 반값여행 시범추진, 역대 최대 규모 숙박할인사업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2년 외래객 1,000만명 돌파 이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2025년 외래객 1,894만명 유치, 관광수출액 272억달러(잠정) 달성이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수립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방한 수요를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확장하고 외래객 증가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2차례 개최(2025년 9월, 2026년 2월)하여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25일 제1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수립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에 따라, 출입국 제도 개선, 숙박업 통합 진흥체계 구축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한 범부처의 '원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래객 입장에서 마주하는 한국 여행장벽 대폭 개선

2026년 3월부터,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 12개국 국민들이 매번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복수비자'를 확대 발급합니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에만 적용되던 자동 출입국 심사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까지 넓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입국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4월부터 마이스(MICE) 참가자의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가족 2명까지 확대하여 고부가관광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래객의 지역 관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2025년 충청권을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공항-기차역-버스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수요응답형 노선(DRT)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패스트트랙



방한 외국인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 확충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낙화놀이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1천여 명의 일본 관광객과 3백여 명의 대만 관광객을 모객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방한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축제 3개를 선정·지원한 결과 화천산천어축제에 외국인 12만 3천여 명이 방문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출시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대상을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안 낙화놀이축제



K-컬처 및 K-라이프스타일의 관광자원화로 방한시장 확장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K-컬처 속 장소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코스를 110개 운영하여 K-컬처가 단순히 감상하는 콘텐츠에서 실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콘텐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면서 진짜 한국인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이 관광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인의 일상음식을 소개하는 'K-로컬푸드 33선'을 활용한 음식관광 지도를 제작하는 등 K-푸드 콘텐츠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2026년 세계 주요 방한거점 23개 지역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홍콩·선전·칭다오, 4월 오사카·도쿄·후쿠오카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반값 여행



국민여행수요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 주입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 사업을 2026년 상반기 1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 하반기 1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합니다. 또한 2025년 9월~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약 82만 3천명이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할인 혜택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이용하였으며, 2026년 4월~5월에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산불 및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대상(총 18만장) 추가 할인권 배포를 추진함으로써, 피해지역의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대한민국 각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K-관광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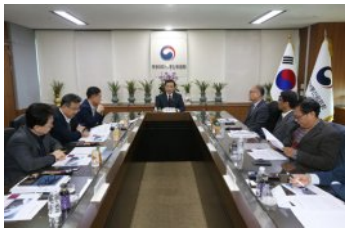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등 미디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콘텐츠 제작지원, 인재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1인 크리에이터 등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용자 권리보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미디어 융합 및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규범체계 구축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불법·유해 정보 등 대응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플랫폼 상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피해 방지의 중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미디어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법제 개편 전문가 간담회
(2026년 1월 19일)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방송·OTT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아우르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을 위해 미디어 법제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2025년 12월), 전문가 간담회(2026년 1월)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및 소유·겸영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 R&D 사업설명회
(2026년 1월 14일)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송미디어 분야 한국형 특화 AI 모델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만여 시간의 고품질 학습용 방송 영상 데이터를 구축 완료(2026년 3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AI 기반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및 시각효과 제작 기술로 매출 15억원, 투자유치 30억원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그간 분

'아시아 TV 포럼' 연계 방송콘텐츠 홍보
(2025년 12월 2일~5일)



AI 방송기획 교육
(2025년 5월 13일)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2026년 1월 21일)



2025 KOREA LBS DAY
(2025년 12월 17일)



산된 방송·미디어 R&D 사업을 예타 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728억원)한 바 있습니다.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에는 총 21편의 우수 방송콘텐츠를 AI 기반으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TV 포럼' 등 해외 마켓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2025년 투자 상담액 26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방송예비인력, 재직자, 퇴직(예정)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AI 신기술 교육을 통해 AI·방송 융합인재 및 미래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7개 TV홈쇼핑사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방송 판매를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원한 결과, 21개 참여기업의 지역 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48회 방송 판매하여 8.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에는 전업 크리에이터 및 유망 신직업 90개팀을 육성하여 약 90%의 취·창업률을 달성하였으며, 크리에이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박람회에 10개팀의 참가를 지원하여 총 122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약 88억원 규모의 상담실적, 7건의 계약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158편의 콘텐츠 제작 및 재제작을 지원하여 대만, 중국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하며 해외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치정보 분야 중소·영세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5 KOREA LBS(위치기반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2025년 7월)하고, 투자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하여, 2025년에는 84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점검하였으며, 의무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2025년 12월)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 공개(2025년 7월)하였습니다.

또한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물 등 사회적 해악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기 위해 소관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직

접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6년 2월 발의).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제재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26년 3월)하였으며, 불법스팸 발송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이통사에서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딥페이크 피해예방 윤리교육을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 보장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2025년 7월)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구성·운영(2025년 9월~12월)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시책 시행에 앞서 시장현황 파악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단말기 시장 정책간담회를 개최(2026년 2월)하였습니다.

현행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해 2025년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회 이상 적발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미디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말기 시장 정책간담회
(2026년 2월 23일)





V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Chapter. 05

-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전략 2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전략 3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영실함 진수와 KF-21 양산 1호기 출고,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로 독자적인 감시·타격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AI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사이버정책과 보안업무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첨단 국방운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대전은 AI 기반의 신속한 지휘결심과 첨단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며, 전장도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우주,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병역자원 감소와 북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어려운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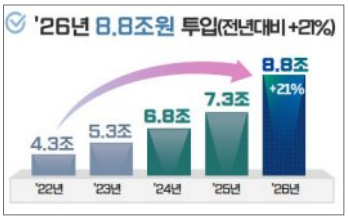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무인 복합체계와 AI 등 첨단기술을 무기 및 지휘통제 체계 전반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로 북핵 등 위협 대비태세 확립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가한 8.8조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킬체인(Kill Chain)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2026년 3월)와 KSS-Ⅲ Batch-Ⅱ 1번함(장영실함) 진수(2025년 10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2025년 12월) 확보를 통해 은밀침투와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Ⅱ)을 추가 배치(2025년 6월)하고, 장거리·고고도 요격체계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 완료 및 양산 착수(2025년 12월)와 함께 패트리어트(PAC-3)급 성능의 M-SAM-Ⅲ 개발(2025년 9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고위력미사일을 최초로 작전배치하여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과 변화하는 전쟁환경을 반영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압도하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천궁Ⅱ 추가 전력화



고위력 미사일 전력화



국방우주전략 고도화 및 우주전력 확충

정부는 2025년 11월 2일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에 성공하며, 총 5기의 군 전용 고성능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전 지역 주요목표에 대해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우주에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우리 군의 정보·작전부대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우주안보 환경에 발맞춰 초소형위성체계와 국방우주발사체 등 핵심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직을 보강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우주 작전 수행 역량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2025년 11월 2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시험인프라 확충

장병들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교육용 상용 드론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7년부터 연차별 도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육군 36사단을 실증 전담 부대로 지정하여 민간 상용 드론 기술의 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2026년 9월에는 민·군이 개발 중인 드론·대(對)드론 무기를 상호테스트할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인이동체 사업 엑스포(2025년 7월), 드론봇 챌린지(2025년 9월), 드론쇼 코리아(2026년 2월) 등을 통해 국내 드론·대(對)드론 업계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아울러 무인기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활주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사단 실증전담부대 지정
(2025년 9월 4일)



드론봇 챌린지 드론 전시
(2025년 9월 22일)



드론봇 챌린지 설명회
(2025년 9월 22일)



국방 AI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정부는 AI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내 AI 전담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차관보실과 그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을 신설(2026년 1월 2일)하여, 흩어져 있던 AI 기능을 통합하고 AI 정책 수립부터 데이터 수집·활용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자 「국방인공지능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2026년 1월 27일)하였으며,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군별 핵심데이터 150건을 선정(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정부는 군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여 민간에 시범 제공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5개소에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군이 안전하게 AI 기술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데이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국군 지휘통제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합동작전능력 향상

한국군 지휘통제체계의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합참과 각군의 지휘통제(C4I)체계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유사통신망 통합구축 사업을 2025년 12월 계약 체결과 함께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분산된 C4I체계 서버를 통합하기 위한 전장데이터센터 발전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를 마치며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군 지휘통제체계(KCCS) 1.0 구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타당성 조사를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어 9월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12월 제안요청서 작성과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2027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체계개발 및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N2SF 보안 가이드라인
(2025년 9월 30일)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범부처 현장대응반을 운영(2025년 10월 27일~11월 1일)하며 행사장과 인프라 전반의 사이버보안을 점검하여 사이버공간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등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확산과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국가 망 보안체계(N2SF)'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1.0)' 배포(2025년 9월 30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합동 N2SF 실증사업 계획 발표(2026년 3월 12일)를 통해 AI 기반의 공공부문 데이터 중심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국제사회의 합동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 사이버훈련(APEX)(2025년 9월 8일~10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5개국 52개 기관 200여 명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사이버안보 연대를 강화, '사이버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2026년 9월에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사이버넷(CyberNet)(2025년 10월 28일~29일)에서 4년 연속 우승하며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이버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이버작전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과학군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군 3축체계와 우주전략을 고도화하고, AI와 드론의 군 적용 및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정예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으로 한반도 상황에 맞춤화된 한미 핵·재래식통합 개념을 발전시켜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조건 검증 추진에 합의,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분기점 마련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로드맵 발전 합의를 통한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및 이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합사령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1970년대 이래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주국방 기조 아래 지속적인 전력 증강과 국방 현대화로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해왔으며, 최근 K-방산의 비약적 발전과 국제 군사력 지표 등은 이러한 우리 군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작권 회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5차 NCG 회의
(2025년 12월 11일)



한미 확장억제 내실화를 통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확장억제 협력 심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지속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2월 제5차 NCG 본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신정부 출범이라는 전환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보여준 것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국 대표는 핵·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정보공유, 공동연습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NCG 활동이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 위기 상황 발생 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국방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한미 국방당국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고,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국방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

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2025년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측은 對韓 방위공약이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방비를 지속 증액하는 등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조선 및 MRO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항공기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정상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5년 11월 4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동맹의 능력과 안보환경 평가 등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이라는 기반 위에 전작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는 2025년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과정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추진'(2026년)과 '전작권 전환 로드맵 발전'(2026년)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5년 10월에는 연합사 예하 부대인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였고, 2026년 3월에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미래연합사령부 FOC 검증을 완료하여 전작권 회복 시기를 가시화하는 한편, 전시에만 구성되던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6년 연내에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6개 구성군사령부 중 5개(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2022년), 연합해군군성군사령부(2022년),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2022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2025년),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2026년 예정)사령부가 상설화될 것이며, 이는 더욱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구축됨을 의미합니다.

전작권 회복을 통한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은 자주국방 실현과 한미동맹 발전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2026년 1월 28일)



이재명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고, 한국군 주도의 전·평시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완전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드론부대' 시범운영, 해병대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준4군 체제' 개편 추진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새로운 국방개혁을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국방개혁2020' 수립과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역대 정부별 안보환경과 국방여건의 변화에 맞춰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상용무력 병진정책,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심화,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 등 새로운 국방 차원의 도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은 2040년 미래에 요구되는 군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병과체계 개편 및 인사관리 개혁, 여군 복무여건 개선, 병력감축을 고려한 민간자원 활용 확대,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감축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

다가오는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40년대에는 현재의 50만 현역 정원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목표로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대·병력·전력구조 등 군구조 개편을 새로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군사전략, 작전개념 발전과 연계한 군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운영체제 개혁과 병영여건 개선 관련 핵심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구체화할 실무조직으로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2025년 9월 17일)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병력절감형 군구조로

의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미래 군구조 개편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출범·운용 중이며, 이를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5년 12월 9일)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 국방개혁 관련 특별자문을 담당할 국방개혁특별자문위원회도 구성(2025년 12월 19일)하여 개혁 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정부는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준4군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개편방안을 발표(2025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50년 만에 해병 1사단(2026년), 2사단(2028년)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체계 개편 및 인사관리 개혁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의 확장, 유·무인 복합의 첨단무기체계 활용 등 변화된 미래전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병과 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한 병과체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와 각군 및 해병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군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병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 가능시기를 전역 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2026년 2월 3일)하여 전역 후 다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군 복무 중 축적된 고도의 직무 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군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군비율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등 여군 복무여건 개선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여군 인력 확대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 수립된 '여군인력 확대 종합계획'에 따라 여군 비율 확대와 여군 복무여건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감소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여성 간부 선발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간부 중 여군의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여성 근무자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여성 화장실과 필수시설 600여 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야외훈련장 여성 화장실 개선 표준모델을 착공(2025년 10월)하는 등 복무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병력 감축을 고려한 비전투임무 민간자원 활용

미래 상비병력 감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이른바 '국방 총인력' 관점을 도입해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 역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이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화된 민간기업이 군의 비전투임무를 전담하도록 민간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2025년 10월)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동 평가체계를 활용해 비전투임무 아웃소싱 분야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비전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전력 전(全) 분야에 대한 2040년까지의 종합적 발전계획인 '2026~2040 예비전력정책서'

구분	2025년	2026년
기본훈련 훈련비 신설	-	10,000원
작계훈련 훈련비 신설	-	10,000원
동원훈련 Ⅰ형 훈련비 인상	82,000원	95,000원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인상	40,000원	50,000원
급식비 인상	8,000원	9,000원

를 발간(2025년 12월)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처우 차원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완전예비군부대'와 '예비군 드론부대' 시범운영 사업(2026년 3월)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위기 속에서 예비전력이 평상시 상비군의 부담을 덜고, 전시에 즉각적인 전투력 보강이 가능하도록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 군의 자발적 노력을 바탕으로 병력은 줄이되 첨단전력은 보강하여 전투력은 더욱 강화된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사기진작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및 당직직위 감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식비 인상과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을 통해 장병들의 생활 안정과 자기개발 여건 개선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해제·완화, 무안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군사시설 규제 완화와 민·군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여와 당직비 현실화를 비롯한 실질적 경제적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이동을 겪는 군 가족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군무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민·관의 군 유휴지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은 물론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민·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 협약식
(2026년 2월 24일)



군인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정부는 군인의 경제적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2026년 3월 3일)하는 등 군인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과 우수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복무 군인·군무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의 실효적 지원을 위해 2026년 34.9억원의 지원예산을 반영하였고,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을 개정(2026년 1월 1일)하여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청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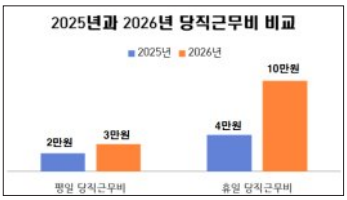
병 복무 중 휴학 상태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업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홍보를 통해 참여대학을 확대하는 등 사업 기반 강화를 추진한 결과, 수강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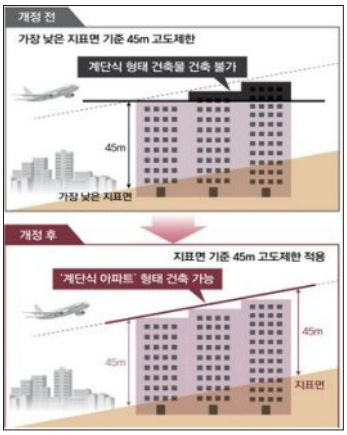
수강인원 및 참여대학



당직근무비 인상 비교
(2026년 1월 1일)



군공항 주변 높이제한 완화
(2025년 8월 26일)



년 기본급식비 단가를 1인 1일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위탁 급식을 식수인원 대비 1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군복무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복무체계 개선

2026년 1월부터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및 경찰 수준으로 인상(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하여 지급하고, 2026년 2월 기준으로 당직근무 직위를 23.4% 감축(2023년 7월 대비)해 월별 당직근무 횟수가 2~3회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간부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복무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및 군공항 등 군 점유부지 이전

2025년 9월,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한보호구역 133.3만㎡와 비행안전구역 327.7만㎡를 해제·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를 완화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을 위한 작전성 검토기준을 재정립하고,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군 작전여건 보장과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조화롭게 달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환공여지 장기임대, 정부 주도 위탁개발 등 12가지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지원방안은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2025년 11월 14일)에서 발표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은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 의정부시장, 동두천시장과의 간담회(2026년 1월 28일)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향후 정부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 방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군사적 필요성이 없는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접경지역 등 4.3만㎡의 지뢰를 제거하였고, 2026년 말까지 3.1만㎡의 지뢰를 추가 제거할 예정입니다.

2026년 국방부와 관계부처,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지

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도 지뢰탐지·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 타운홀 미팅(2025년 6월 25일)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내 전담반(TF)을 구성·운영(2025년 6월 26일)하여 관계 지방정부간 이견 및 갈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지원방안 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조율한 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2025년 12월 17일)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무안군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4월 1일)하고, 무안군을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4월 2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군 구성원의 사기와 복무 의지를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과 각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당직근무 직위 감축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군인가족과 자녀들의 체감도 높은 복지혜택 지원을 위해 대외협력 강화와군무원의 가족들도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장병 및 군무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민·군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장 접견
(2026년 1월 28일)



6자 협의체 공동발표
(2025년 12월 17일)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2025년 방산수출액 154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2024년 96억달러 대비 60.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국방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산 중소 ·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정비와 혁신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른바 K-방산으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며,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정부는 방산 수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 생태계 조성과 AI·첨단 무기체계 산업기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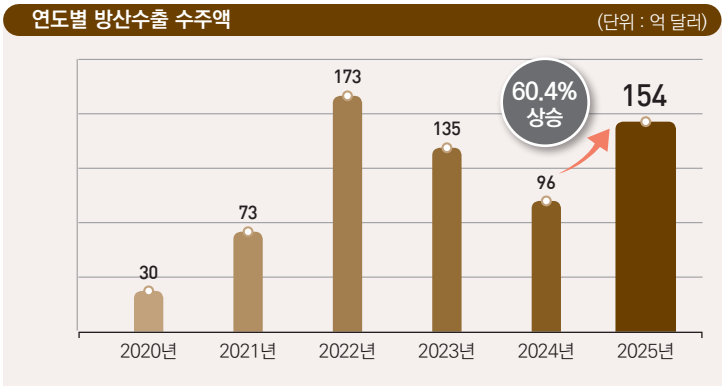
방산 수출 범정부적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방산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범정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이 2025년 8월 출범하였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2025년 7월)을 통해 방산수출 투자 관련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인 'K-방산수출펀드'를 총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6년 6월부터 본격 투자를 시작하여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UAE, 노르웨이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더불어, 브라질(2025년 10월), 말레이시아(2025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2025년 11월) 등 정부 간 방산협력 양해각서 신규체결로 우호적인 방산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2025년 7월)



이를 통해 2023년~2024년 2년간 연속 하락하던 방산 수출 추세가 반등하여 2025년 실적은 2024년 대비 60.4% 상승한 154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K-방산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여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전주기 집중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방산 진입에 필요한 기술·인프라·컨설팅을 지원하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자체 개발품의 '군 실증시험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우수 민간 업체의 방산 진입을 지원하는 국방벤처센터를 경기, 인천 지역에 2개소 추가 신설(2026년 2월)하여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의 지속확대(2024년 713개→2025년 813개)를 통해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K-방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026년 2월에 발표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 매출 천억 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정부와 대기업(체계기업)의 공동 재원으로 중소기업(부품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2026년 3월부터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지원,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 대기업의 상생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노력에 따라 원가우대, 수출 산업협력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상생 유인을 제공하는 상생수준 평가를 2026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 선행연구와 소요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민간 업체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와 연구개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설명회'를 2025년 8월 처음 개최한 이후로 2026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정례화하였으며, '방위사업정책발전컨퍼런스'(2025년 7월), 국회 '국방획득체계 혁신세미나'(2025년 9월), '방방톡톡 상생워크숍'(2025년 9월), '방위사업 입찰제도 토론회'(2026년 2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 이슈(RFI)



AI·첨단 무기체계 산업기반 육성

2026년 국방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원으로 확대하고, AI·드론·로봇, 우주·항공, 국방반도체 등 첨단 핵심기술·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2025년 11월), KF-21 양산 1호기 출고(2026년 3월)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의 특성에 부합하는 획득체계 혁신을 위해 보다 유연한 방식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마련하여 2026년 2월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2026년 3월 25일)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 및 무인기용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2026년 1월), 「국방반도체특별법」 제정(2026년 6월) 등 AI·첨단 무기체계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첨단·상생·글로벌화 기반의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K-방산이 자주국방의 근간이자 국가경제를 이끌 새로운 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사라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2023년 12월) 등으로 남북관계의 단절이 지속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장의 정치적 필요나 일시적 협력에 그치는 남북관계가 아닌,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대북전단 살포 중지



민통선 이북 주민과 평화토론회
참석자 88%, "변화된 일상에 매우 만족"
(2025년 11월 10일)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2025년 6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 민간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살포를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2025년 7월)하고, 「항공안전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25년 12월)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였습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하였으며,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던 대남 오물풍선 살포도 중단되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의 오물풍선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발생한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로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2026년 2월)하였으며, 대통령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하여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2026년 4월)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2026년 5월)하였고,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광복절 경축사-3원칙 제시
(2025년 8월 15일)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2025년 8월 15일)를 통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일관된 평화통일정책 추진 기반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2026년 3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과 '남북기본협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
(2025년 9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정상화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8.15 경축사, 3.1절 기념사, 유엔총회 연설(2025년 9월) 등 주요 계기마다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2023년 4월 이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자 기존에 남북이 합의하여 운영하던 방식대로 대북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해 남북대화 추진 기반 및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2025년 12월)하여 남북 합의사항의 단계적인 이행 준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둘러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측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2025년 11월)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정부 첫 남북회담 제안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회담 문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9월에 공개한 문서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를 통한 평화·협력 추진역량 강화

2025년 11월 개편 조직도



이재명정부는 2023년 9월 축소·폐지된 통일부의 핵심기능을 복원·정상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형해화된 상황에서 남북대화 및 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구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고 평화교류실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 신설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편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북평화·협력 추진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일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재가동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계 등 민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민간단체 ·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장기간 남북 교류협력이 위축되었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가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등 민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재건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26년 1월 22일)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재건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우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관련 입법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제22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2023년 6월 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단순 접촉신고는 전면 수리하는 방침으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정부 시기에 낮아졌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율도 62.9%에서 98.9%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2026년 1월 22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8건의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7일에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칭) 건립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산·실향 등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교류협력 경험을 공유하며, 평화·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사업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성만월대, 처음으로 상설전시관 개관 추진

정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한 개성 만월대 유적(고려 왕궁터)에 대한 조사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그간 개최해온 순회전시를 상설전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7년 말 개관을 목표로 상설전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2026년 1월)하였습니다. 세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학생·청소년·학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상설전시관을 만들고자 하며, 현재 설계용역과 여러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시관 콘텐츠 역시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 만월대 상설전시 관련 업무협약식
(2026년 1월 27일)



종교계 소통 강화를 통한 사회문화협력 기반 조성

정부는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겸 성균관장 예방(2026년 1월) 등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천주교의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2026년 2월)에서 통일부장관이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관련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 입장이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7대 종단 정책간담회(2026년 3월) 등을 통해 종교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2026년 2월 10일)



7대 종단 정책간담회
(2026년 3월 10일)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정부는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주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2025년 11월 21일)



보건의료 세미나(2025년 6월·12월)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한 내 감염병 대응과 병원 현대화 등 남북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인도적 위기 대응 국제협력 세미나(2025년 7월)에서는 인도협력 분야의 향후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후·재난 분야 관련 포럼을 세 차례 개최하여(2025년 7월·9월·11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녹화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 등 향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호혜적인 남북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에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하여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2025년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주민(6명)의 의사를 존중,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회의 및 인도-인권 상호대화 행사를 통해 남북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향민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북향민의 남한생활 만족도가 81.2%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직도 고령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가족들은 여전히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북향민은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위로 방문
(2025년 12월 24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실향민 간담회(2025년 10월 3일) 및 제3회 '이산가족의 날' 축사(2025년 10월 4일)를 통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25년 12월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년)'을 수립하고, 남북대화를 속히 복원하여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추진방향을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이산가족 1,568명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1,01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8년간 누적 관람객 약 30만명)에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전시 납북자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8월 28일 시행 예정)하여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의 법정단체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2025년 서해와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의 의사를 존중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7월 9일). 북송을 희망하는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이재명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을 정책 기조로 정했습니다. 인권을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이라는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키웠습니다. 정부는 남북 협력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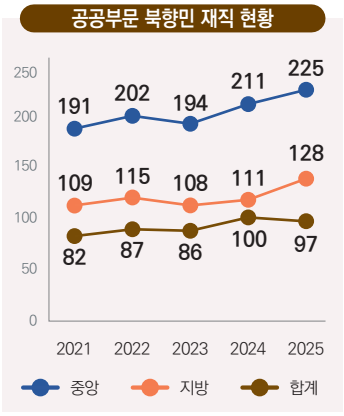
제3차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2025년 10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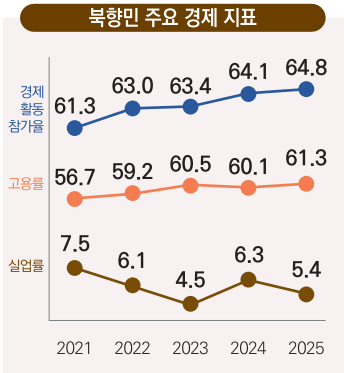


적 삶의 질 개선을 이룸으로써 협력·평화·인권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 여성, 아동 부문 협력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접점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주변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 및 민간 부문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미래지향적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 평화, 발전, 인권'이라는 주제로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인권협력에 대한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토크콘서트(8월 29일, 9월 24일, 10월 17일)·라운드테이블(11월 13~14일) 행사를 진행, 전문가·청년세대와 의견을 교환하여 젊은 세대의 공감을 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북향민 220명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관련자료를 법무부로 이관·보존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사회통합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우리 사회로의 통합 강화를 위하여 2026년부터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포용적 단어입니다. 이외에도 연간 7만명 이상 이용하는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 주민간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지원 확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25년 12월)하여 교육지원 대상을 북향민에서 이들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북향민의 어려운 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초기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도 북향민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2026년 1월), 면회 제한 폐지(2026년 1월), 주말 지역문화 체험 도입(2026년 2월) 등 다방면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응 기본교육에서 남녀 통합교육을 실시(2026년 2월)하고 성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결과, 2025년 북향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는 실태조사 역대 최고치인 81.2%를 기록하고 경제활동참가율(64.8%)과 고용률(61.3%) 등 주요 경제 지표 또한 2024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정착 성과 지표가 꾸준한 개선을 보이며 북향민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이산가족·납북자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평화·협력의 실용적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향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합의 형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일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국민의 북한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요국 정부와 전문가 대상 국제대화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인식은 세대·계층별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6차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2025년 9월 30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2025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국민(5회), 청년(3회), 오피니언 리더(1회)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를 권역별로 운영한 결과, 대화에 참여한 국민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참여 의향도 4.62점으로 조사돼 정책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사회적 대화의 폭과 대상을 확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 설립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AX 시대에 발맞춰 AI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숙의·토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하고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2026년 3월)하였습니다.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2026년 2월)하여 향후 5년간 통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의 최신 현황을 담은 새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2026년 3월)하였습니다.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유아·어린이·재외동포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출강학교를 42개 추가 선정하고, 대안학교 및 도서벽지학교 등을 포함한 '학교 통일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신규)', '통일교육 현장체험(성인 대상)', '통일미래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세대·계층 대상 체험형 교육 확대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기본방향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북한자료는 대부분이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국민과 연구자들의 정보 접근이 제약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는 '북한자료 공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2025년 12월)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별도 공간에 보관된 자료를 신분과 목적 등을 기재하고 신청해 열람하던 방식에서,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을 소장하고 있는 전국 108개 기관 중 79개 기관이 일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역사적 조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자료 공개 확대와 북한 사이트 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직접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여, 남북 간 상호 이해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



노동신문 대국민 열람 서비스 현황



국내 평화분위기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확대

지역 주민들의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도권 위주로 개최되던 통일문화행사를 지방과 접경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통하나봄' 행사를 충청권에서 개최(대전, 2025년 10월)하여, 가족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평화로 하나되는 미래'를 그려보았습

평화통일마라톤
(2025년 11월 16일)



충청권 통일+센터



유럽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2025년 9월 28일~10월 4일)



니다. 또한, 임진각-남북출입사무소 간 하프코스(21.0975km)를 달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2025 평화통일마라톤(2025년 11월)'을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4,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파주에서 출발하여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인 통제구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소통 창구로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인천, 호남권(목포), 강원권(춘천) 등 3개소에 이어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2025년 9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홍성, 2026년 3월)를 추가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제도 개선과 함께 One-Stop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 이용편의성을 높임으로써 2025년에는 통일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년 대비 2.8배(2024년 16,619명 → 2025년 46,927명)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 정부와 의회 및 주한공관 등의 관계자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유럽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2025년 9월 28일~10월 4일, 독일·벨기에), '제14차 한독통일자문회의(2025년 11월 17일~18일)',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등 계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사회적 대화 추진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의 전환, 국제대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 형성과 국내외 지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정책 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고 국제사회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정부는 한반도 공동성장을 위해 평화가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 정상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 절차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단절, 접경지역의 긴장고조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평화·경제의 선순환 이행기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경제 협력 청사진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및 이행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2025년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거쳐 2025년 12월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협의체와 협동연구에 착수하였고, 효과적인 대국민 공론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협력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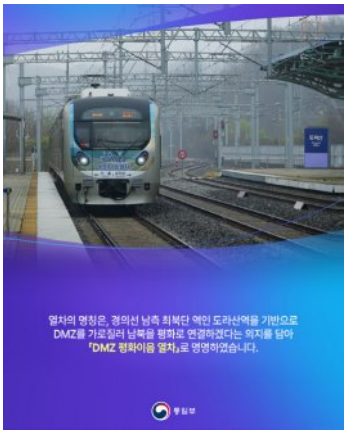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협의회 의견 수렴,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2025년 12월)하였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2027년 8월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를 지

경기지역 평화경제특구 공감대형성 세미나
(2025년 8월 27일)



DMZ 평화이음열차 운행 재개
(2026년 4월 10일)



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10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 인접 지역의 범위를 15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장 방문,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국내·외 특구 사례 조사, 용역 추진 등 평화경제특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정부는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행체계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제정 법률안들의 입법을 지원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기반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발족한 'DMZ 평화적 이용 범정부 협의체'에서 매 분기별 회의를 통해 현안 논의와 사업별 협업 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이후 중단된 'DMZ 평화의 길' 내부 구간 재개방을 준비하며 'DMZ 평화의 길'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통일부장관이 고성코스를 체험하며 재개방 의지를 표명하였고, 2026년 3월에는 정부합동으로 테마노선을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한편, 6년 6개월 만에 서울역-도라산역 관광열차를 'DMZ 평화이음열차'로 운행을 재개(2026년 4월)하여, 국민들이 평화 관광지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DMZ 평화걷기'를 2년 만에, 'DMZ 국제포럼'을 4년 만에 재개하여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관광, 철도·도로 등 주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수립(2025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을 수립하여 한·중·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고속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 협력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연구원과 공동 학술회의(2026년 3월)를, 한국수출입은행과 포럼 행사(2026년 4월)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북 교역 기업인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교류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를 제·개정(2026년 2월)하였으며, 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개성공단 기업 대표 간담회
(2025년 7월 31일)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7월 통일부장관은 취임 직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공단 중단 10년이 되는 2026년 2월 10일, 다시 한번 공단 중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과거 개성공단 운영과 개발에 관여하였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경제 실현 로드맵을 바탕으로 평화경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147일) 내 한미 정상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를 발표(2025년 11월 14일)하면서 한미동맹 이행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2025년 11월) 및 9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방중(2026년 1월)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7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위상 제고에 걸맞는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및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개국과의 교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 미중일러 4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나아가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2025년 8월 25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2025년 10월 29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이재명정부는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양 정상의 동맹 발전 비전을 구체화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를 발표(2025년 11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우리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측의 공개 지지를 최초로 확보하고, 한미 조선·방산·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양국 최고위급의 의지를 확인하며 전략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관세합의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다층적 아웃리치로 동맹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상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정책연설(2025년 8월) 및 연이은 상·하원의원 접견(2025년 8월·9월, 2026년 3월·4월) 등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연방의회·학계·주정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05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2025년 12월) 등을 통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JFS 전분야를 내실 있게 이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번영한 삶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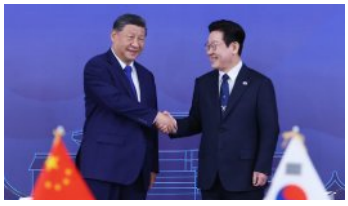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방한(2025년 11월)하고, 2026년 한중 양국 정상의 새해 첫 국빈 외교 일정으로 9년 만에 우리 정상이 국빈방중(2026년 1월)함으로써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통화스왑 계약(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을 연장하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정책(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을 개시하였으며,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이후 중국이 비자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 발표(2025년 11월 3일)하는 등 양국 간에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방문 편의 개선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상 국빈방중 이후 중국측은 서해구조물 중 하나인 관리플랫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중국 측의 동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이자 변화로 평가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일관된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2025년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2025년 11월 1일)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7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찾아 2025년 8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하여, 2025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시바 당시 총리도 2025년 9월 부산을 방문하여, 이재명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도 APEC 및 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회동 등 셔틀외교를 지속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일본 나라시를 방문하여,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이시바 총리 방한 계기 부산 한일 정상회담
(2025년 9월 30일)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2025년 10월 30일)



도출하고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여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구

한러 외교장관회담
(2025년 9월 26일)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사업 행사
(2025년 9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의 한러 외교장관회담 개최(2025년 9월 26일, 뉴욕) 등 다자회의 계기 고위급 만남을 지속 추진하여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한러 간 고위급 교류 실적이 2배 이상 증가(3회→7회) 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러시아 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세미나 등을 20회 이상 개최하는 등 러시아 내 우리 기업·국민 보호 노력을 경주하면서 단계적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수교 35주년을 맞아 2025년에는 학술행사 개최 횟수를 2024년 대비 2.5배 이상 증대(2회→5회)시켜 한러 학계 간 교류·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한러 간 주요 민간협의 채널인 '한러 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러시아에서 '박경리 문학제'를 6년 만에 개최(2025년 11월 14일)하는 등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러 간 호혜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실용 관점에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미중일러 4개국과의 관계 심화·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였습니다. 임기 1년차(2025년 6월~2026년 4월) 중 순방 9회, 14개국 방문, 126건의 MOU 체결 등 활발한 순방 외교를 전개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우리 정상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등 최상위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G7+ 외교 강국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최근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우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K-이니셔티브 실현과 K-컬처 확산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순방 외교 성과 (2025년 6월 ~ 2026년 4월)

해외 순방	방 문 국	MOU 체결
9회	14개국	126건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2025년 10월 27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확대회담
(2026년 2월 23일)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심화를 통한 외교 다변화 추진

이재명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25년 10월)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 각국과 10회 이상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교역·투자, 방산, 에너지, AI 등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는 3차례 정상회담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있으며, 또한 2025년 12월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점증하고 있는 몽골 및 중앙아 5개국과는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내실화하였고, 중남미와는 브라질·멕시코·칠레 등과 정상회담 5회 개최 등 고위급 교류를 심화하였으며, 남아공, 가나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도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실질 협력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유럽, 인태 유사입장국 및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지평 확장

2025 G7 정상회의
(2025년 6월 17일)



글로벌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유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재명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G7 내 모든 유럽 국가 및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을 실시하였고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와 상호 방문 계기 각각 11건, 3건, 3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는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내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태 유사입장국인 캐나다와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2025년 10월 30일)하였고, 호주와 두 차례 정상회담(2025년 6월 16일, 10월 30일)을 개최하였으며, 뉴질랜드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2025년 10월 30일)하였고, 2025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유럽-인도태평양 8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아프리카·중동 핵심국 방문을 계기로 중동에 대한 외교 구상인 S.H.I.N.E.(Stability(안정), Harmony(조화), Innovation(혁신), Network(네트워크), Education(교육))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는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 안전과 국익을 수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2025년 9월 24일)



신흥안보 위협 및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 추진

이재명정부는 국제평화·안보·인권·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2025년 9월)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안보·인권·신기술·기후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상 최초로 'AI와 국제평화·안보'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동시 수임하면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발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2028년 유엔해양총회 유치 성공 등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왔고, 또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대한 대응으로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동향 보고서 발간(2025년 10월, 사이버 분야) 등을 통해 국제안보 분야에서의 기여도 확대했습니다.

제4차 개발재원총회
(2025년 7월 2일)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이재명정부는 우리 공적개발원조(ODA) 시행 이래 최초로 무상원

조 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저성과·부실 사업을 정비하였으며, AI 기본사회, 문화강국 위상 제고라는 국정철학에 맞추어 우리 무상원조 전략에 AI와 문화를 핵심 분야로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무상원조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에 걸맞은 전략적·효과적 원조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인 '세비야 합의'에 '개발효과성'이라는 우리 주도 의제 및 4대 원칙을 반영하여 동 의제의 국제적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팔레스타인 난민 사태, 미얀마 강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시리아 인도적 지원 플래그십 사업 합동 착수식
(2025년 9월 30일)



국민과 함께 세계와 연결되는 공공외교 추진

이재명정부는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 정책, 지식,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 기업, 교민과 협력하여 문화공공외교 행사를 개최(2026년 167개 공관 한국주간행사 개최 예정)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AI, 방산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해 2025년 기준 9개국 29개 대학에 한국어(학) 교수직을 설치하였고, 총 구독자수 180만 명 이상인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지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통합·조정 역할 강화를 통한 대외정책 집행 체계 혁신

K-이니셔티브 협의체
(2026년 3월 10일)



전 재외공관(173개)이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 회의 개최를 완료(2026년 3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장 주도 하에 공공기관·기업·동포 등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K-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팀코리아' 총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효과적 ODA를 수행하며, K-이니셔티브 확산을 통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핵심 성과문서 채택에 이어,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확정하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제안보 및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 경제안보 위기 대응 능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AI, 퀀텀, 우주 등 첨단기술 중심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의 지속, 디지털 전환의 가속 등 글로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이재명정부는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하고 주요국과의 과학기술외교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대외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 안보 조정·통합 기능 강화

이재명정부는 재외공관장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등을 설치(2025년 11월)하여, 재외공관 내 평시와 비상시를 아우르는 경제안보 현안 점검·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본부는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2025년 11월 6일)하여 경제안보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및 관계 부처와 그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안보 연구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환류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이재명정부 출범 원년에 개최된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행사인 2025년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복합적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계기였습니다. 어려운 협상 끝에 미·중·일·

러 등 21개 회원 전원이 합의한 공동문서인 '경주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협력 질서를 복원하고 연대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AI·인구구조 등 미래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아태지역내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도 개최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실질 경제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주선언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이며,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추진하는 등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행·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글로벌 기업 7개사 9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및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

APEC 정상회의 세션
(2025년 10월 31일)



APEC 의장국 인계식 및 단체 사진 촬영
(2025년 11월 1일)



또한,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인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의장국 수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20 관련 각급 회의(외교장관회의(2025년 9월), 셰르파회의(2025년 6, 11, 12월), 정상회의(2025년 11월))에 참석하여 무역·투자, AI·디지털, 에너지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현재 G20 회원국, 대내외 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하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이재명정부는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수출·수주알리미'와 '기업지원 헬프데스크'를 신설(2025년 9월)하여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2025년 12월)시켜 범부처 협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유망 입찰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 문의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기회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정례 운영하고,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지원의 실질적 전진기지로 정착시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과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2일)



외교부 장관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면담
(2025년 8월 1일)



신흥·첨단 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이재명정부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정상 간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2025년 11월 1일)을 통해 AI 기본사회 구현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 정책을 반영하고, 글로벌 AI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4차 회의(2025년 9월, 일본) 및 5차 회의(2026년 3월, 영국), 한미일 퀀텀 산업보안 워크숍(2025년 9월)에서 미국 및 유럽 주요 기술 선도국과 퀀텀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보호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 중 해외 정부 발주 사업 비중이 가장 큰 우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2025년 7월~8월)에도 민관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6년 만에 '제1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재개하여, AI, 우주, 퀀텀, 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2025년 11월 27일)하고 한일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안보 대응 역량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다자경제 협의체에서의 논의 선도 및 과학기술외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각종 다자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어 왔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이재명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2025년 8월, 10월)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각각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공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2026년 2월) 계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관련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견인하였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2026년 2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만 세 차례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협의도 병행해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한일 정상은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중 간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2025년 11월, 2026년 1월) 및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

할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러 외교장관회담(2025년 9월)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복귀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북러 군사협력 지속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바탕으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 국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추구

이재명정부는 북핵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고위급·실무급 전략 협의를 통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치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도 함께 넓혀 왔습니다.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 계기마다 단계적·실용적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및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 참석한 한-아세안 정상회의(2025년 10월)와 아세안+3 정상회의(2025년 10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결과문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도 함께 넓혀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8월 제4차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 그룹 회의와 2026년 3월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민관 합동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단계별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양자·다자 협의체 개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지속하겠습니다.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5년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9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는 ▲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하에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촉구(2025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2025년 6월), 대북 확성기 철거(2025년 8월), 백마고지 유해발굴 작업 재개(2025년 10월), 군사분계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 제안(2025년 11월) 등의 대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함께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을 대상으로도 우리 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2025년 8월), 뉴질랜드(2025년 10월), 싱가포르(2025년 11월), 이집트(2025년 11월)와의 정상회담 계기 발표한 결과문서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지지 및 환영 메시지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ASEAN, G20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의 선제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설명하여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사태, 중동 전쟁 등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영사 분야 협정 확대,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설치 등 영사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범위와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외동포를 지원하였으며, 동포인재 유치·정착 지원사업을 최초 도입하고 동포 체류자격(F4, H2) 통합을 이끌어내는 등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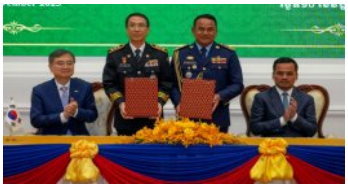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해외위난과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을 증진하고 청년 해외진출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기존 재외동포정책 중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개선,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상황점검회의
(2025년 10월 16일)



외교부장관 캄보디아 방문 계기
한-캄 공동 전담반 MOU 서명식
(2025년 11월 10일)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17명이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후 구금 1주일 만에 귀국을 희망한 316명 전원이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연루된 문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노력으로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스캠 범죄 관련 피해 신고가 2026년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약 92% 감소(108건 → 9건)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전쟁 상황에서 3월 9일 아랍에미리트에 전세기를, 3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수송기를 투입('사막의 빛' 작전)하고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 약 1,500명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및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외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방송(매월 약 210회 방송),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실시(2025년 285건 응모)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의식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영사안전콜센터 상담시스템 내 실시간 음성-텍스트 변환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미 도입된 STT 기능에 다국어 인식, 상담내용 요약, 상담 어시스트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장급 양자 영사협의회를 총 5회(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개최하였습니다. 사증면제(카메룬)·운전면허 상호인정(미국 캔자스, 미국 텍사스)·워킹홀리데이(브라질, 일본) 협정의 체결·발효 등을 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김해공항에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여권민원센터 신설로 김해공항 여행객들은 연중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25년 7월 1일 김포 한강신도시에 여권민원실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정부는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이 영주귀국을 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할린동포 지원 예산 76.5억원을 동포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수단 및 활용분야 확대를 통해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도 한글학교 교별 운영비가 2025년 대비 평균 약 9% 증액(1,280만원 → 1,390만원)되었으며, 관련 부처 협업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를 2026년 7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포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보

2026년 1월 국내귀환동포 지원 전담부서(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동포청년 대상 교육-취업-정착 연계 통합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동포간담회를 역대 정부 최다인 15회 개최하고, 전세계 188개 재외공관 현지 민원 전수조사(1,438건 접수) 등을 통해 동포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F4, H2)을 통합하여 동포 간 차별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재외국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개최
(2026년 3월 20일)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 개최
(2026년 2월 5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식
(2026년 3월 27일)



2025년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하여, 2026년부터 민간이 자율적으로 대회를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26년 들어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함으로써, 동포 주도 운영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세계한인의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곳곳의 동포들과 다양한 동포단체가 주체가 되어 세계한인대회와 세계한인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를 개선하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 및 안정적 정착 기반을 지속 마련하여 동포민원 해소와 차별 없는 동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71000-100189-01

대한민국정부

비매품/무료
13340
9 791163 577942
ISBN 979-11-6357-794-2